



Chapter 5

면접 대비 교육 이슈

교육 이슈 200% 활용하기 Tip!

교육 이슈 활용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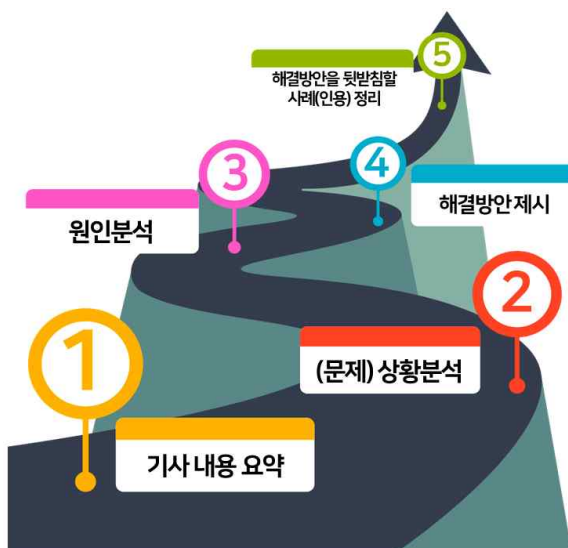
- 본 자료집에 실린 기사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보도된 내용입니다. 교육 이슈를 면접 문제에 활용하는 대학은 면접 고사일 직전에 나온 시사도 출제하는 경우가 있으니 꾸준히 스크랩하시길 바랍니다.
- 교육 이슈 위주로 정리된 자료입니다. 교육대학교 면접에서는 교육 외 일반시사도 많이 활용되니 교육 포함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들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교육 이슈 200% 활용법!

- 기사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대학교 면접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한 지원자의 의견을 묻고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Chapter5.를 활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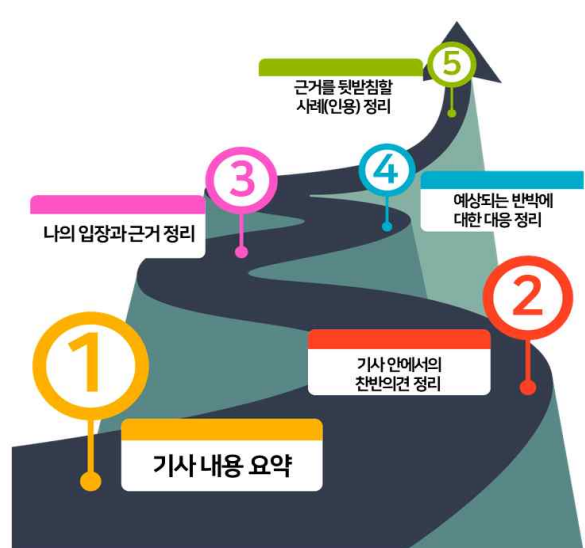
A유형 : 방향이 있는 경우

〈 원인 - 해결방안 or 의견 - 이유 〉



B유형 : 정답이 없는 경우

〈 찬반의견 or 장·단점 〉



- 찬반의견으로 정리할 경우 내 의견과 반대되는 입장의 근거와 이에 대한 반박도 정리합니다.

- A, B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내용의 기사는 근거를 뒷받침할 예시(인용)로 활용합니다.

chapter
05

대입지원관이 안내하는 교대 맞춤형 대입 길라잡이
면접 대비 교육 이슈



중앙일보

2020년 11월 18일 (수)

종합 16면

전교생 38명의 인간관계 넓히기 교육, 마을이 가족됐다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부여 내산초 관계맺기 교육 단체상
학교·가족·지역 3단계로 교류 늘려
개인 부문엔 둔원중 이은숙 교사

“한 여학생이 울면서 전학 가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반에 둘 뿐인 여학생끼리 다툰 거죠. 학생들은 좁은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사 이재연(51)씨는 3년 전 충남 부여군 내산초등학교에 부임했다. 당시 전교생은 32명. 함께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같은 반으로 지냈다.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진 아이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씨는 학생들에게 5~6명뿐인 학급 친구를 넘어선 넓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 그는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는 적고, 농촌이다 보니 별다른 활동을 할 기회도 없었다”며 “인간관계를 넓히면서 자연스럽게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마을공부방인 ‘따뜻마을’ 수업에 참여해 주머니 만들기를 한 내산초등학교 학생들. [사진 내산초]

크게 학교·가족·지역 3단계로 나눠 관계 맺기 활동을 했다. 우선 학년·학급별 경계를 허물었다. 매주 한 번꼴로 모든 학년이 모여 독서수업이나 문화체험을 하는 ‘무학년 수업’을 시작했다. 현재 38명인 전교생이 자주 교류하며 관계를 넓히는 틈이 됐다.

학부모가 ‘마을 교사’가 돼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부방 ‘따뜻마을’은 가족끼리의 교류를 늘렸다. 교사가 된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우쿨렐레·목공예 등을 가르쳤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현재 3명인 내산초 마을 교사는 내년엔 5명으로 늘다.

마을 교사로 참여한 학부모 진수정씨는 “평소 농사일로 바빠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다”면서 “마을 교사 활동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지호 군은 “선생님이 돼서 친구들을 가르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지역 어르신과 학생이 1대1 결연하는 ‘다움감사 프로젝트’도 펼치고 있다. 교사 이씨는 “지역을 알근 어르신과 교류하며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매력을 알아가고 있다”면서 “‘효’ 실천은 물론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찾는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내산초는 18일 제8회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단체부문)을 받는다. 인성교육대상은 학교·가정·사회에서 뛰어난 인성교육을 실천한 개인·학교·단체에 주는 상이다. 교육부·여성가족부·중앙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다.

개인 부문에선 대전 둔원중 교사 이은숙씨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이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인성교육을 원격수업에 접목했다. ‘감사’ ‘배려’ 등 52가지 카드를 만들고 학생들이 수업마다 어울리는 미덕에 온라인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 보니 아이들끼리 대화가 사라졌다”면서 “대면 수업에서 해오던 ‘미덕 카드 투표’를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도입하면서 대화도 자연스럽게 많아졌다”고 했다. 학생들이 고른 미덕과 연관 지어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내뉘쳐 집중도가 떨어지는 원격수업의 단점도 보완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여성가족부장관상), 대구가톨릭대(중앙일보사장상)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인성교육대상 시상식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경향신문

부처별 쪼개진 돌봄... 수요자 입장보다 '누가 할 일인가' 따져

무엇이 초등돌봄 갈등을 불러왔는가... 해결책은 있다

휴일·방학 '돌봄 공백', 지역사회 연계 필요한데 소통 어려움
지자체는 자원 통합 관리, 학교는 서비스 전달 역할 담당해야

"한국은 교육행정과 지역행정이 분리돼, 학교와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려고 할 때 조정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최근 초등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던 것을 두고 아깝게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돌봄이 각 부처별로 분절돼 정책 간 '칸막이 효과'가 발생한 탓에 아동에게 무엇이 좋은지보다 '누구의 일인가'로 논의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돌봄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주관 부처가 다른 만큼 근거 법령과 대상 아동도 제각각이다. 이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자가 지난해 기준 약 26만명으로 가장 많다. 이뿐 아니라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처럼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돌봄시설이 있다.

문제는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초등돌봄교실이 전체 돌봄 수요를 책임져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돌봄교실은

등교 전이나 양육자의 퇴근시간까지 운영하기 어려우며, 아동이 학원을 가는 이유로 한번 학교하면 다시 들어올 수 없다.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돼 학부모가 실제 원하는 시간대에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라며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지역사회 돌봄과의 연계가 필수인데 학교는 교육기관, 지역사회 시설은 복지기관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서로 소통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2018년부터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등교 전, 야간, 주말 및 휴일, 방학 때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 같은 지역공공시설을 돌봄 자원으로 활용해 채우자는 것이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돌봄자원 간 연계 및 조정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돌봄의 무게 중심이 학교에서 지자체로 옮겨가게 된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을 발의하자 돌봄전담사들이 사실상 '지자체' 이라며 최근 파업에 나섰다.

돌봄제도 현황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업명	초등돌봄교실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근거법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지원기준(소득)	맞벌이 가정 중심 (없음)	맞벌이 가정 중심 (없음)	취약계층 중심 (중위소득 100% 이하)
운영규모(2018년)	1만2398실 26만1287명	17개소 320명	4107개소 총 11만명 (초등 9만6000명)

코로나19로
돌아보는
학교의 기능과
초등돌봄의 역할

① 조사 대상 :
학부모 1005명
② 조사 기간 :
2020년 10월22~28일

자료:학부모네트워크

■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응답률 상위 3개 답변)
학교와 지자체 간 책임소재, 아이들 안전문제, 학교와 연계성 등 우려로 **반대 39.9%**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봄 민영화로 생각해서 **반대 25.9%**
교사가 교육업무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 14.7%**

■ 돌봄교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단위: %

30	29	25.6	8.1	7.3
기존 돌봄 역할만 아니라 각종 방과후활동 가능 확대	운영시간 확대 맞벌이 부부의 생활 보장	돌봄교실 확대로 대상 학생 증원	학교 돌봄 축소 후 지자체 관리형 돌봄센터 확대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돌봄정책 확대

현실적으로 초등돌봄의 운영·관리가 지자체로 단번에 옮겨가기란 쉽지 않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접근성이 좋은 학교 안에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깔아놔 당장 지자체로 모든 걸 넘길 순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돌봄자원을 통합해 관리하는 건 지자체가 적합하지만, 돌봄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은 학교가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향후 온종일돌봄 논의에서 학교 안이나 밖이나의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희현 연구위원은 "학부모와 아동 입장에선 누가 제공하든 질

좋고 안정적인 돌봄을 바란다"며 "학교 역시 지역사회 돌봄 자원의 일부이며, 학교 돌봄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지역사회와 연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때 돌봄의 질과 보육의 공공성, 돌봄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현재 지자체가 돌봄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중간 단계의 공적 재단을 설립해 관리를 맡기는 방안, 돌봄교실을 지자체 또는 지역공동체에 위탁하는 방안,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영 교수는 "민간에 인력을 맡기면 서비스가

더 분절되기 때문에 지자체 직영으로 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산순환이 이뤄지게 하려면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해 적정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가의 동일한 일을 하는 돌봄전담사,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 키움센터의 돌봄교사 등은 자격증과 급여를 지역 단위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래미 교수는 "온종일돌봄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역 돌봄의 양을 늘려가면서 양육자에게 돌봄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서울신문

스쿨존 사망사고 84% 건다가 참변... 주범은 불법주정차

2020 교통 안전 행복 가정

〈9〉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긴장 풀린 금요일에 사고 22% 최다
아파트 단지 내 등하교 때 사고 55%
불법 주차로 운전자가 어린이 못 봐

#1.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로에서 A(2)군이 불법 유턴을 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졌다. A군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서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 지난 6월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 내 보행로에서 엄마와 함께 걸던 6살 여자가 차에 치여 숨졌다. 승용차가 보행로 난간을 뚫고 길을 걸던 모녀를 덮친 것이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 과실 등이 지목됐다.

지난해 28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5년 전인 2015년(65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엔 1만 1054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2018년(1만 92건)보다 10.4% 늘어난 것이다. 스쿨존 교통사고도 2018년 435건(사망 3명)에서 지난해 567건(사망 6명)으로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증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3일 우리 사회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강원(-3.7%)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울산은 무려 41.6%나 늘었고, 대구(36.4%)와 세종(30.6%), 대전(22.6%), 충남(20.8%) 등에서도 증가 폭이 컸다. 공단은 이들 지역 사고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중 83.8%는 보행 중 발생했다. 사망자 6명 모두



건다가 참변을 당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122건·21.5%)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망 사고 절반도 금요일에 일어났다. 주말을 앞두고 어린이와 보호자, 운전자 모두 긴장이 풀린 게 원인으로 보인다. 시간대별로는 주로 방과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6시 사이가 304건(53.6%)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9세가 전체(0~12세)의 50.6%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됐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주범은 불법 주정차다. 지난 4월 '민식이법' 스쿨존 내 사고 발생 때 가중처벌 시행 이후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신호와 제한 속도를 잘 지키는 모습이지만,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여전히 많다.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어린이가 주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갑자기 도로로 뛰쳐나오면 운전자는 대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6월 29일부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에서 시행됐다. 8월 3일부터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박성희 공단 선임 연구원은 "운전자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스쿨존만큼은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로 외 구역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보행자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공단은 주문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고 어린이가 급하게 뛰어 들 수 있어 항상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 교통약자의 연령별 보행 사고율을 보면 아파트 단지 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생의 사고가 일반도로에 비해 각각 5.3배, 2.8배나 높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1만 7746건을 분석한 결과 55.2%가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4~6시 집중 발생했다.

공단은 2012년부터 무료로 아파트 교통안전점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전문가가 직접 도로를 점검하고,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한다. 지난해까지 전국 507개 단지가 컨설팅을 받았으며, 올해도 130개 단지가 받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박 연구원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의 책임이자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는 생각으로 절대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임주영 기자 hermes@seoul.co.kr

■ 공동기획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겨레

'채식 기본권 보장' 학교급식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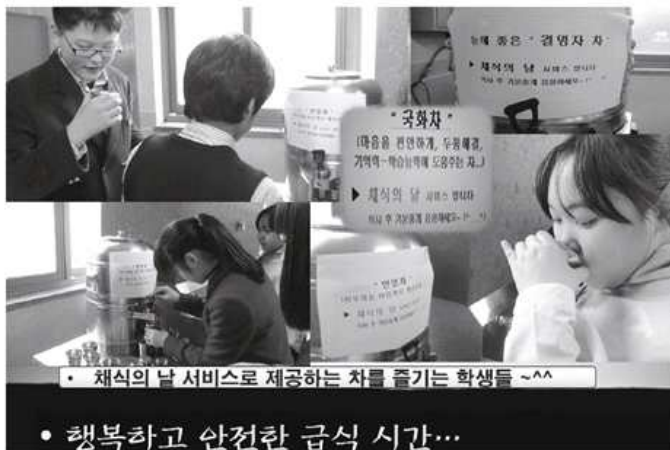
울산 231개교 매달 두번 선택식단
전북교육청, 주1회 '고기없는 급식'
인천교육청, 내년 선도 6개교 선정
시민단체 "온실가스 감축효과 교육"

울산시 울산여고의 23일 점심급식엔 반찬에서도 국에서도 고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고기 없는 월요일'이어서다. 고기는 없어도 참치 김치찌개, 고추장 방어구이, 해물짜장우동, 깍두기, 치커리 생채(자율) 등으로 맛깔나게 식단이 짜였다. 울산 246개 초·중·고교 가운데 94%인 231곳은 올해 10월부터 매달 두차례 월요일엔 고기 없는 급식을 제공한다. 울산여고 학생 가운데 채식을 원하는 학생 6명은 채식 식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권범신 울산여고 영양교사는 "채식을 선호하는 학생은 함께 줄을 서서 받을 음식만 담아 오면 맨 마지막에 채식 위주의 대체 음식을 챙겨준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울산 69곳 초·중·고에서 채식 선택 급식제를 하고 있다.

전국에서 채식 선택 급식을 도입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채식 선택 급식제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교육적 의미도 크다. 학생들의 채식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육류에 편중된 식단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초·중·고교 132곳에서 '채식의 날'을 운영했다. 올해도 주 1회 또는 월 2회 '고기 없는 식단'을 편다. 2011년부터 채식의 날 시범학교 20곳으로 출발해 2017년에는 105곳(유치원 포함)까지 늘었다. 2018년부터는 학교장이



광주시 한 학교의 '채식의 날' 시범학교 운영 모습.

윤가비채 광주자연과학고 교사 제공

자율적으로 채식의 날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2013년엔 채식의 날 시범학교의 채식 식단에서 100가지 채식 요리법을 선별해 <채식, 맛이 보인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초·중·고교 2곳씩 모두 6개 선도학교를 선정해 채식 선택 급식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인천지역 급식 학교(527곳)의 5분의 1가량인 1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채식 급식에 대한 학생 선호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채식 선택 급식 도입의 연관성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앞서 올해 8월부터는 영양교사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급식정책추진단을 꾸리고, 채식급식 운영 예시(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이다.

채식이 학생들에게 친숙해지려면 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가비

채 광주자연과학고 영양사는 "광주북성중 재직 때 학생 159명 중 70% 이상이 채식에 반대하다가 채식 관련 전문 강의를 듣고 난 뒤 83%가 찬성했던 것을 보고 채식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최중순 시교육청 기후환경협력팀 장학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채식 관련 교육 동영상 만들어 각급 학교에서 채식 교육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 세곳을 대상으로 채식 선택 급식제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조길에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는 "채식을 하게 되면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단백질은 식물성 식품에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며 "정부가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채식을 확장하는 학교에 예산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대하 신동영 박임근 이정하 기자 daeha@hani.co.kr

• 행복하고 안전한 급식 시간...

한겨레



수험생과 공교육 죽이는 '킬러 문항'

수능이 끝나면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이 벌어지고 한다. 킬러 문항은 '문제가 너무 어려워 시험 보는 사람의 멘탈을 킬(kill)하는 문제'라고 한다. 입시당국에서는 어감이 살벌한 킬러 문항 대신 '최고난도 문항'이라고 점잖게 표현한다.

2019학년도 수능 국어의 만유인력 관련 문제가 지문이 길고 어려운 개념이 많아 킬러 문항으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킬러 문항은 주로 수학에서 나온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수학2번, 29번, 30번 문제가 킬러 문제로 통한다. (21번과 30번을 짝는 의견도 있다.) 수능 수학은 30문제를 100분에 풀어야 한다. 평균 한 문제를 3분 안팎에 풀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방송>(EBS) 수학 강사도 킬러 문항 하나 푸는 데

20분 이상 걸린다고 한다. 20분은 막히지 않고 한꺼번에 풀었을 때 이야기다. 킬러 문항은 여러 개념을 복잡하게 얹어놓았기 때문에 여러 단계 풀이를 거쳐야 답이 나온다. 만약 어느 한 단계에서 막히면 40분을 훌쩍 넘긴다. 최상위권 학생은 다른 수학 문제들을 '빛의 속도'로 빨리 풀고 나머지 시간을 킬러 문항 풀이에 쓴다.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킬러 문항은 짝가나 포기한다.

물론 킬러 문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수학적 사고 능력이 발달하고, 대입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킬러 문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수학 교사, 입시학원 강사는 수험생들이 킬러 문항을 수학적 사고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외워서

푼다고 반박한다. 수능 시험장에서 낯선 문제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평소 다양한 고난도 문제 풀이 훈련을 반복·숙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훈련을 학교에선 해줄 수 없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킬러 문항 전문 학원들이 성업 중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킬러 문항이 존속하는 것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 확보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1~2% 수험생을 골라내고 줄세우기 위해 98~99%를 일부러 틀리게 만들고, 틀려서 세위 배제하는 것이다. 변별력 확보에 이 방법밖에 없을까.

해마다 수능출제위원장은 수능을 앞두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충분히 풀 수 있게 출제했다"고 말한다. 12월3일 치르는 올해 수능에선 이 말이 지켜지기를 소망한다.

권혁철 논설위원 nura@hani.co.kr



jaewoogy.com

경향신문

“친구·SNS 영향으로... 초등 5학년 때 화장 시작했어요”

여성환경연대 ‘청소년 화장품 사용실태 보고서’

20개의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 19세 A양은 13세 때부터 화장을 했다. 그는 “외모 스트레스가 한창심할 때는 ‘생얼’(화장 안한 얼굴)로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매번 마스크를 끼고 다녔다. 생얼이 너무 쪽팔려서, 밥 먹을 때도 마스크 벗기 싫어 최대한 빨리 먹었다”고 했다.

여성환경연대가 2일 발표한 ‘청소년 화장품 사용실태 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사례다. 보고서에는 10대 청소년 21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다. 인터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16.4세였고, 이들 중 1명을 제외한 20명이 화장 경험이었다. 화장을 처음한 평균 나이는 12.7세,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이었다. 보유한 화장품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50개 이상이었다. 21명 중 화장품을 10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6명이었다.

화장 시작 평균 나이 12.7세
화장품 성분엔 신경 못 써
외모 가꾸기 강박 생기기도

“화장 금지 교칙 강요보다
정보 제공·교육 기회 필요”

청소년은 주로 친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화장을 접했다. “틴트로(화장을)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학교에 화장품을 가지고 와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 앞에 앉아서 틴트 바르기 놀이를 했어요. 선생님이 교실에서만 발라도 된다고 해서요.” 16세 B양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화장을 처음 접했다. B양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이후 계속됐다. 최근엔 휴대전화에 화장품 소개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받아 정보를 얻고 있다.

한 청소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바르면 얼굴이) 하얘지는 선크림을 친구가 가져와 다 같이 발라봤다. 다들 ‘나도 사야겠다’고 말하면서 화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청소년은 “뷰티 유튜브를 봤다. 친구들도 연예인들 보면 예쁘니까 화장을 시작한 애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던 화장이 A양처럼 외모 가꾸기 강박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화장을 안 하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왜 화장 안 했어?’라고 묻는 다”거나 “화장을 하고 나면 완성

된 기분이 든다. 성취감이 든다”는 응답이 있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따지다 보니 화장품 성분에는 신경을 쓰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도 화장을 그대로 한다고 한 이들이 많았다. 화장품의 유해성보다 화장을 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는 이유였다. 한 청소년은 “눈화장 용품은 (성분) 잘 안 보고 사요. 유해 성분이 있어도 조금 덜 유해할 것 같고, 귀찮고”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실효성이 없는 화장 금지 교칙 대신, 청소년에게 적합한 정보 제공과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특히 미디어를 통해 화장법이 알려지고 (특정) 외모 이미지에 대한 모방 욕구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몸의 이미지를 존중할 수 있도록 몸 다양성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화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아파트 못 사주는데 주식이라도... 10대 '주린이' 늘었다

올해 미성년 증권계좌 3.7배 늘어

지난 9월 MBC '공부가 마니'에는 성적이 전국 최상위권인 학생들이 출연했다. 제작진이 "공부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묻자 국제고에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증권 계좌."

그는 얼마 전 생일날 부모에게 주식 계좌를 선물 받았고, 용돈을 계좌에 넣어 스스로 주식 투자를 했다. 37만원에서 시작해 방송 촬영 당시 잔고는 53만원. 수익률이 44.3%에 달했다. 그는 "경영이나 경제 쪽으로 입시를 준비 중"이라며 "용돈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다.

'주린이' (주식+어린이의 합성어)는 주식 초보자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그런데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 주린이가 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 9월 한 방송에 출연한 고등학생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제 공부를 한다"고 했다. MBC 화면

동학 개미 열풍에 관심
"경제적 독립 원해"

저금리에 집값도 올라
"돈 버는 법도 가르쳐야"

1~8월 미성년 신규 주식 계좌 개설 건수는 29만1080건이었다. 월평균 3만6385건으로 작년 월평균(7778건)보다 세 배 이상 늘었다. 미성년 주식 계좌의 예수금 총액도 올해 들어 8월까지 2751억원 증가했다. 매달 평균 344억원씩 늘어난 셈인데, 작년 한 해 늘어난 예수금 총액(370억원)에 맞먹는다. 부모나 조부모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도 있지만, 이 통계엔 직접 투자에 나선 고등학생도 포함됐다.

교복 입고 주식하는 시대

이해선(18)양은 올해 난생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었다.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모아둔 용돈으로 카카오 주식 한 주를 샀다. 이양은 "주식에 대해선 아직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내가 많이 쓰는 카카오의 주식을 사 본 건데 14만원대였던 게 지금 37만원대까지 올랐다. 설 세뱃돈 말고는 이 정도로 큰돈이 생긴 게 처음이다. 추석 때 받은 용돈에 다음 설에 받을 용돈까지 합쳐서 애플 주식도 사고 싶다"고 했다.

"학생이 돈 쓸 데가 어디 있냐고 하지만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대학 갈 때쯤이면 여행도 다니고 사진도 찍고 싶은데 그걸 다 부모한테 의지할 수 없어요. 100%는 아니어도 경제적 독립을 원해요."

투자를 위해서 주식이나 경제를 공부하는 고등학생들도 생겨났다.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학내 경제 동아리에 들어가 모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유튜브로 경제·주식 상식 등을 배운다. 주식 관련 인터

넷 카페에선 "주식 시작하려는 고등학생인데 책이나 유튜브 채널을 추천해달라"는 글을 볼 수 있다. 경제교육 강사인 윤성애씨는 "올해 들어 고등학교 경제 동아리 같은 곳에서 주식에 대해 알려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 이 학생들은 이미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갖추고 있고, 부모도 자녀가 금융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이라고 했다.

경제적 독립 꿈꾸는 10대

한창수(48)씨는 지난 5월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에게 증권 계좌를 열어주고 10만원으로 원하는 주식을 사게 했다. 아들이 산 것은 게임 회사인 블리자드의 주식. 한씨는 "아차피 나중에 해야 할 텐데 남들보다 빨리 배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집을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스스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법이라도 알려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 계좌에 매달 10만원씩 넣어준다.

부모는 10대 자녀의 주식 투자에 호의적인 편이다. 자녀가 요청하기 전에 먼

저 증권사나 은행에 데려가는 경우도 많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한창 일을 할 때는 고금리 시대였으나 이들의 자식들인 예코 세대(80년대생)부터는 저금리를 경험했다. 앞 세대가 저축만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었다면, 뒤 세대는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선 집 한 채도 사기가 어렵고 그만큼 노후 대비도 어렵다. 베이비붐 세대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명문대 진학이었다면, 예코 세대는 자식에게 경제적 독립을 바란다. 윤씨는 "주식·금융 교육을 요청하는 부모 중에는 고소득·고학력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들은 자녀가 금융 투자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성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금융에 대해 무지해서 나중에 큰돈으로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것을 막자는 목적도 있다"고 했다.

금융 교육의 대상 연령도 점점 낮아져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주린이라는 말 그대로 '어린이'가 주식을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변희원 기자

전국 첫 '한글교육책임제' 결실 ... 학교 기초학습능력 크게 향상

도교육청 한글교육정책

속초 청봉초교 허은종 교사가 2018년에 만난 재연이(가명)는 오늘 배운 것을 다음 날이면 잊는 아이였다. 한글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받침을 잘 읽지 못했다. 허 교사는 재연이가 좋아하는 코코아를 준비하고 그림책 읽어주기, 보드게임 등을 하며 한글교육을 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허 교사는 재연이를 이대로 2학년에 올려보내자니 너무 안타까웠다. 이에 학부모의 허락을 받고 2월에 주 2회씩 가정방문을 하며 재연이를 가르쳤다. 지도하는 모습을 학부모가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했고, 재연이가 읽은 것을 학부모가 녹음해 주면 다시 전화로 상답을 했다. 허 교사는 “확연하게 읽기 능력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고, 잘 따라와준 재연이가 고마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한글교육 지원시스템

- ▶입학적응기 한글교육 시수 확보
- ▶한글교재 '천천한글', 학습꾸러미 배부
- ▶온라인 콘텐츠 '천천한글 지도법' 제공
- ▶읽기유형성 지원 시스템 개발
- ▶교원 연수 운영(기본 심화-전문가)
-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운영(135명)
- ▶한글문제 전문교사 양성(56명)
- ▶전문기관 연계 난독학생 지원
- ▶한글해독 현황 조사 분석

■다문화·조손가정 증가, 전국 최초 '한글교육책임제'로 대응=최근 몇 년 사이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이 예전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평가 결과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로 볼 수 있는 1수준 이하 학생들이 2006년 5.7%에서 2018년 15.1%로 3배 가까이 늘었다”며 “기초학습능력 형성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거나 재교육시킬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초등 저학년에서 한글 해독과 읽기 능력을 확실히 잡지 않으면 초등 고학년 때 본격적인 학습 부진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도교육청이 2017년 한글교육책임제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 배경이다. 전국 최초였다.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초등 1~2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기본-심화-전문가 과정의 한글문해교육 연수를 운영하고, 입학적응기에 집중적으로 한글교육을 할 수 있게 시간과 교재를 마련했다.

도교육청 순정환 장학사는 “사실 예전에는 한글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별로 없어서 교원양성기관에서도 한글지도에 대한 교육과정도 없었다”며 “최근에는 한글문해교육 연수 이수자들이 늘면서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의식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난독 위험군 학생 대상 60시간 이상 임상 연구 수행=한글교육 연수뿐만이 아

국내 다문화·조손가정 증가로 아동 한글 해독·읽기능력 저하
도교육청 초등 저학년 담임교사 대상 한글문해교육연수 운영
난독위험군 학생 맞춤형개별지도로 유창하게 읽는 단계 발전
아동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한글 학습시간 확보 과제

니다. 도교육청은 읽기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60시간 이상 체계적인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한글문해 전문교사들도 양성 중이다.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육 뿐만 아니라 읽기·쓰기가 더딘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또한 강화하고 있다.

올해 20년 차에 접어든 흥천 모곡초교 오승규 교사도 지난해 1학년을 맡으면서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한글문해교육 전문가 과정을 신청했다. 예비소집일에 만난 학생 4명 중 2명이 한글을 몰랐기 때문이다. 발동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연수를 신청했다는 오 교사는 “주로 고학년만 맡다 보니 그동안 한글교육과 조금 떨어져서 지냈는데 한글문해연구회도 가입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처음 입학했을 때 자기 이름도 겨우 그리던 아이가 점심시간에 급식 메뉴를 읽고 좋아하는 동화책을 소리 내어 읽는 모습

에 감동받고 보람도 느꼈다. 이제 오 교사는 혹시 내년 스승의 날에 또박또박 눌러쓴 감사편지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는 작은 소망도 갖게 됐다.

원주 단계초교 심현경 교사는 “모음을 때는 데 1년9개월, 자음을 때는 데 3개월이 걸렸던 난독 학생이 드디어 받침을 떼고 한글을 해독했다. 기뻐서 결과지를 기념으로 뽑아주었는데 학생이 결과지를 받아서 술술 읽더라. 정말 박찬 순간이었다”며 한글교육책임제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했다.

중앙일보

한국서도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나오려면

모방형 대입제도 고쳐야 나라 먹여살릴 인재 쏟아진다

김세직의
이코노믹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바야흐로 입시의 계절이다. 지난 3월 수능에 이어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대학별 면접, 논술고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대입 준비로 초등학생 시절부터 밤낮없이 고생해 온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심정일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반복 암기한 지식 중 절반 이상이 사회에 나가 쓸모없는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대학입시에 성공한 학생들조차 대학 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현대 경제성장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 입시는 한 나라의 경제가 고도성장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좌우하는 결정적 인프라다. 1980년대 말 시카고대 로버트 루카스 교수에 의해 탄생한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한마디로 인적자본이다. 근로자의 머릿속에 체화된 지식이나 기술인 인적자본이 교육 등을 통해 빠르게 축적되면 경제성장이 빨라지지만, 인적자본 축적이 정체되면 성장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루카스 교수와 동료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그런데 인적자본이 활발히 축적돼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대입제도에 크게 의존한다. 우리나라에서 1960년 이후 30년은 선진 지식을 외워서 이용하는 '모방형 인적자본'의 가치가 매우 높아 이에 대한 투자가 최적인 시기였다. 우리나라는 '토너먼트식 모방형 입시', 즉 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암기했는지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조금이라도 더 다양한 지식을 암기한 학생들을 선발해 일생에 걸친 보상을 해주는 입시제도를 채택했다. 아예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암기하고자 하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져, 4시간 자고 공부하면 합격하고 다섯 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4당

대입에서 중시되어야 할 능력 (단위: %)

자료: 김세직, 유근관 외 7명 (2011)



'4당5락 입시제도'로 고도성장 달성 지식 더 많이 외우면 평생 보상 받아 기술 발달로 암기 지식 가치 낮아져 대학이 나서 창조형 인재 선발해야

5락'이란 말까지 유행했다. 이렇게 모든 학생이 최대한으로 지식 암기에 시간 투자를 하게 됨에 따라, 나라 전체의 모방형 인적자본 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그 결과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모방형 입시제도의 폐해 극심

1990년대부터 '모방형 인적자본'의 가치는 급속히 저하되기 시작했다. 여러 산업에 걸쳐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특히 보호받는 선진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인터넷 및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굳이 사람들 머릿속에 암기를 통해 지식을 넣어 저장해 둘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것을 생각하거나 만들어내는 능력인 '창조형 인적자본'으로 성장의 엔진을 교체해야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학입시제도도 근본적 변혁을 이루어야 했다.

그러나 내신이건 수능이건 지식 암기 중심의 시대착오적인 모방형 입시체제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2013년 수능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 중 어느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이 큰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모방형 입시가 얼마나 무의미한 지식 암기를 요구하는지의 예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최초 정답은 EU가 더 크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NAFTA의

GDP가 더 커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다. 학생들에게는 이 문제를 맞혔는지 들었는지도 합격·불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지만, 정작 당시 필자가 물어본 어떤 경제학자도 알고 있지 않은 지식이었다. 알 필요가 없는 지식이란 얘기다. 그럼에도 현재의 모방형 입시제도는 변별력을 위해 이런 쓸모없는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겨레

과밀학급과 과소학급, 동시에 해결 가능하다

유성동
금산 신대초등학교 교사

아침 8시15분, 교실에 들어선 김 교사는 일찍 와 있는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한 명 한 명의 건강 상태를 살핀다. 이후 아이들에게 소독 티슈를 나눠주면서 각자의 책걸상을 닦도록 지도한다. 아이들이 모두 도착해 책걸상 소독까지 끝난 시각은 8시40분. 이제 건강 상태 자가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이름을 클릭하며 참여 독려 문자를 보낸다. 응답이 없는 학생 보호자들에게 다시 개별 문자를 보낸다. 자가진단 초기 "이미 등교했는데 왜 입력을 해야 해요?"라는 민원은 사라졌지만, 자가진단과의 씨름은 1교시 시작 직전까지 이어진다.

정신을 차리고 1교시 수업을 시작한다. 초등학교 1학년 27명의 아이들로 꽉 찬 교실은 조금의 여유도 없다. 거리두기를 위해 사물함까지 복도로 빼고 아이들을 앉혔으나 한계는 있다. 물리적 한계뿐이 아니다. 수업 중 앞뒤로 넓게 벌어진 아이들과 끼리끼리 안부를 묻는 수다들로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뒤쪽에 자리한 아이들에게 칠판과 티브이(TV)는 꽤 멀어, 안 보

이고 안 들린다는 불만까지 제기될 때면 교사의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

인근 초등학교 1학년 최 교사의 교실 상황은 정반대다. 교실에 들어서면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권군이 언제나 먼저 와 있다. 최 교사의 학급에 소속된 학생은 권군 한 명이다. 오늘도 권군은 글을 읽고서 생각과 느낌을 나눌 친구가 없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역할 놀이도 최 교사와 함께 일인다역으로 소화해야 한다. 최 교사가 학년 초 가졌던 사명감이 염려로 변한지 오래다. 만약 권군이 5년을 계속 이래야 한다면?

과밀학급에 대한 여러 해결책이 등장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의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25명이든 20명이든 기준선을 세워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혁신으로 보이진 않는다. 기준선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 해결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책상에 앉아 '학급편성 기준 학생수에 미달했습니다'라며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키워온 교육당국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과밀학급과 과소학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있다. '학급당 적정 목표 학생수'란 개념을 도입하고 하나의 기준선이 아닌 '4~24명'이란 인원으로 목표점을 삼는 것이다. '적정 목표'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핵심 역량과 성취 기준의 도달점을 의미하며, 학교 방역 등 학생 안전을 위한 한계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밀학급 판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만이 아닌 정성적 기준을 마련한다. 그러면 과밀학급 기준선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유휴 교실이 발생한 경우 정량적·정성적 기준에 따라 새로운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교육행정 역시 혁신돼야 한다. 현장에 나가 새로운 학급 편성 여부를 직접 보고 듣고 따져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급당 4~24명 인원대 비율을 확인한 뒤 '학급당 적정 목표 학생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육부만의 일도 아니다. 범정부적 의지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학급 정원은 4명에서 24명 사이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는 국정 수반의 약속과 선언이 기대된다.

한겨레

교육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정병호
기억과 미래

“제비뽑기로 합격자를 정하자.” 하버드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는 최근 출간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명문대학 지원자들의 학습능력은 별 차이가 없으니 추첨으로 뽑자는 것이다. 실제로 숙련된 입학 사정관들조차 지원자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학교 내신, 스펙, 추천서를 접수로 합산해서 선별하는 것은 아무래도 억지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대학 입학 선발 절차를 신비화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합격한 학생들이 자기 능력과 노력만으로 이룬 성공으로 착각해서 오만해지고, 떨어진 학생들은 열등감에 시달리기 쉽다는 것이다.

능력 평가에 따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은 능력과 성실성의 증거가 된다. 반대로 실패는 능력이 모자라고 게을렀다는 낙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승자는 노력에 비해 과도한 특권을 당연시하고, 차별당하는 패자는 굴욕감과 억울함에 분노한다. 그렇게 사회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능력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기 위해서 샌델 교수가 제안한 방법이 ‘대학추첨제’

다. 일정한 관문을 넘은 학생을 무리하게 다시 줄 세우지 말고 그냥 ‘제비뽑기’로 입학시키자는 것이다.

일견 엉뚱한 주장인 듯해도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 반세기 이상 시행하고 있는 대학입시 방식이다. 불평등한 고등교육 제도를 개혁한 ‘68혁명’ 이후, 독일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시험 격인 ‘아비투어’ 합격자는 어느 대학이든지 진학할 수 있다. 프랑스도 철학 논술시험인 ‘바칼로레아’에 합격하면 파리와 지방의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국가가 무상교육을 하는 대학은 선별 기능보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고등교육 기관이 되었다.

한국 상황은 어떨까? 올해도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엄중한 국가관리 아래 한날한시에 치러졌다. 객관적으로 공평한 조건에서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수능 당일 날씨를 상세하게 예보하면서 수험생들의 건강을 위한 충고도 한다.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수험생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서 앞날을 망치지 않는지”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그 몇 시간 동안의 문제 풀이로 한 사람의 평생 사회적 서열을 결정하다니 그런 도박이 어디 있나! 끔찍한 경기 아닌가? 한편 경기에 목숨이 오가는 로마 시대 격투기를 지켜보듯 온 사회가 숨을 죽이는 것도 당연하다. 혹시 다

른 경기나 도박에서 그런 식의 판돈을 걸고 게임을 한다면 온 사회가 격분할 사행행위다.

오늘날 한국 교육은 교육적 가치보다 경쟁적 게임에 중독되었다. 사회적 서열을 결정하는 대학입시라는 교육게임은 승패와 순위를 다투는 스포츠나 게임들처럼 승리의 환호와 패배의 눈물이 교차하는 역동적 경기다.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중독성이 있다. 게임 당사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투자 결과를 바라는 후원자 부모나 트레이너 교사와 지켜보는 관객들까지 희열과 좌절을 느끼는 경기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육게임 중독의 폐해는 심각하다. 교육게임에 몰두하면서 부모-자식 관계가 왜곡되었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침식되었다. 개인적 성공에 대한 집착은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켰다. 교육게임에 승리한 사람도 성공 강박증과

경쟁 불안증에 괴롭고, 패배한 사람도 자기저하와 모멸감에 시달린다.

국가적 시험의 결과를 중시하는 풍토는 신분제 성격을 띤 학력차별 또는 학벌차별로 이어진다. 어느 학교 출신인가가 사회생활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학력과 서열에 따른 차별 논리는 다른 시험제도로도 확산되어, 지식 경쟁을 통해 선발된 고시 출신과 공채 출신은 특권을 당연시한다. 능력주의 시험 결과에 따른 사회적 보상을 ‘공정성’으로 여기는 것이다. 최근 두드러진 의사와 검사들의 특별한 지위 주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현상이다.

현대국가의 능력주의 선발제도는 원래 출생 대신 능력에 근거한 엘리트 충원을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을 위해 만든 이 제도가 오늘날 ‘결과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특권을 공고화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능력주의에 따른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교육게임은 달아오르고 게임의 열기만큼 사회적 차별은 확대 재생산된다.

공정한 능력 경쟁이란 미망에서 벗어나 교육게임을 멈춰야 한다. 제한된 지식 평가를 기준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능력과 직업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졸과 고졸,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수와 목수의 보수가 비슷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중앙일보

2020년 12월 08일 (화)

오피니언 29면

창조형 인재 얼마든지 객관적 평가 가능

지금이라도 대학입시를 기존의 모방형 인적자본 측정 위주가 아니라 창의력 평가 위주로 선발하는 '창조형 대학입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대학이 창조형 인적자본을 가장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을 초중고 시절부터 열심히 키우게 돼, 빌 게이츠·스티브 잡스·마크 저커버그 같은 창의적 인재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입시에서 창의력 평가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대학별 면접 혹은 필답고사에서 정답이 없는 '열린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이 얼마나 창의적인 답을 제시했는지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경제 과목에서는 "일년 내내 섭씨 30도가 넘는 불나라에서 얼음을 화폐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동안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창의적인 금융상품을 하나 제시하시오” 같은 문제를 출제하고, 다른 학생들과 얼마나 다른 참신한 답안을 제시했는지로 평가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초중고 시절 생각해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등록하는 '학생 아이디어 등록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학이 이를 평가자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다. 물론 창조

형 대입제도 하에서도 모방형 인적자본을 평가하지만 이를 자격 고사화해 핵심 지식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에서만 평가하고, 평가의 중심은 창의성 평가에 두어야 한다.

학생이 제시한 답안이나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평가의 주관성 문제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존재한다. 학생의 창의성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평가하는 상호주관적

(intersubjective) 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이용하면 객관적인 평가에 이를 수 있다. 물론 상호주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평가 전문인력이 필요해 고용 비용도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 재원은 정부가 교육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 정부가 교육예산 73조원 가운데 1000분의 1만 지출해도 상호주관적 평가에 필요한 평가인력을 전국 모든 대학에 공급할 수 있다.

대학입시는 초중고 교육의 방향타다. 서울대를 포함한 대학들이 나서서 창의력을 가장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사용한다고 선언만 해도 대한민국 초중고 교육은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 크게 탈바꿈할 수 있다.

사교육 해결하고 교육 불평등까지 해결하는 강력한 해법

창의력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대입제도가 확립되면 현재 GDP의 1%가 넘는 연간 21조원 규모의 사교육 시장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사교육이 커지게 된 이유는 기존의 모방형 입시제도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성립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타강사가 수능이나 내신에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들을 족집게처럼 찍어서 그 답과 풀이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의 영상을 하나만 들어 놓으면, 이를 수요하는 수많은 학생에게 추가적 비용 없이 복제 판매하여 막대한 수강료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입에서 열린 문제를 내고 창의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사교육은 더 이상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어렵다. 일단 사교육 선생님이 학생들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는 보장이 없다. 더해서 스타강사가 대입에 나올 열린 문제를 미리 족집게처럼 찍어 창의적 답안을 생각해 냈다고 해

도 똑같은 답안을 여러 학생에게 동시에 판매하기가 어렵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남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평가자들은 서로 비슷한 답안들에 대해서는 창의성을 낮게 평가한다.

결국 대학입시에서 창의적 답안으로 평가받으려면 다른 학생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창적 답안이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에게 동시에 복제 판매되는 답안은 학생들이 찾지 않게 된다. 창의적인 답안을 판매해도 한 학생에게만 판매할 수밖에 없는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사교육 강사의 입장에서도 더는 학생을 가르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를 상품화한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창조형 입시제도의 도입은 한국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교육 불평등 문제까지 해결하는 강력한 해법이다.

江原日報

고교생 100명중 6명 “신체사진 요구해 봤다”

청소년 성의식 실태조사

청소년 100명 중 6명이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환경에서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기관 춘천길잡이의 집이 최근 발표한 '2020 청소년 성의식 실태조사 결과(음란물과 디지털 환경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춘천, 원주, 강릉지역의 고등학교 66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여성 6.8%, 남성 6.4%가 해당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춘천·원주·강릉 662명 조사
女 6.8% 男 6.4% '경험 있다'
대가성접촉 요청받는 경우도
SNS 상으로 가장 많이 접해
“지원·감시 전담조직 필요”

또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경험은 남성이 1.3%, 여성이 7.3%에 달했다. 타인에게 디지털 환경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체인 몸이나 성적적인 경험 등 자신에 대한 성적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받

은 경험은 남성이 1.7%, 여성이 10.1%로 나타났다. 웹캠 등을 통해 사이버 섹스를 하자고 요구받은 경험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0.7%, 여성 4.2%, 타인에게 돈, 음식, 문화상품권 등과 같은 대가를 조건으로 키스, 신체적 접촉 등 성행위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2.3%로 조사됐다.

특히 성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플랫폼 1순위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남성 44.4%, 여성 34.

3%로 높았다. 이어 카카오톡, 라인 등 인스턴트 메시지가 남성 22.2%, 여성 25.7%, 랜덤채팅이 남성 11.1%, 여성 22.9%로 나타났다.

설문을 분석한 허목화 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음란물을 쉽게 접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이며 가해자”라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청소년의 특수성을 이해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업을 추진할 전담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영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답센터 소장은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모바일) 환경은 청소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낯선 이들의 경계를 허용하고 무작위적 침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 내에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취약한 자들을 유인하는 구매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처벌하고 이러한 방식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태량 춘천길잡이의 집 소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을 잡고 대중매체에 대한 정책 제언, 건전한 대중문화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반 자료로 삼겠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아동 기본권,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나요

World Vision · 강원도민일보

'아직:아동이 직접 말하지 못한 이야기,
2020 아동청소년이 제안하다'

도내 아동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할까. 강원도민일보는 매년 월드비전 강원아동청소년권리센터(소장 최창일)와 '아동이 살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 도내 중·고교 20여 곳 학생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권리침해 사례를 찾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캠페인 위주로 진행했다. 올해 캠페인 주제는 '아직:아동이 직접 말하지 못한 이야기'로 10월부터 세달간 비전메이커 유스클럽 아동권리 동아리를 중심으로 전개했다. 올해 선거연령이만 18세 이하로 하향조정된 만큼 '참여권'을 중심으로 한 기본권 이슈가 중심이 됐다. 또 주목할만한 점은 성범죄 관련 이슈의 등장이다. 2008년 도아동청소년권리센터 개관 이후 성 관련 캠페인이 진행된 것은 처음이다. 참가학생들이 캠페인 주제 설정부터 기획까지 도맡아 진행. 최근 사회이슈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시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까.

■ 성범죄 예방 캠페인 주제로 부상

평창고 비전메이커유스클럽(회장 김현주·평창고 2년)은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아동성착취물 유포 혐의의 '손정우 사건' 등을 보면서 성범죄 문제를 깊이 인식했다. 이들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내포스터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실제 채팅 메시지를 활용, 피해자가 됐을 경우의 심각함을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김현주 회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그저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캠페인 주제를 정했다"고 했다. 속초여고 비전메이커유스클럽(회장 서교정·속초여고 2년)도 등굣길 학교 입구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대해 알리는 '너도 아동? 나도 아동!' 캠페인을 펼쳤다. 성범죄 소식과 함께 쏟아지는 관련 법에 대한 기사를 보고 기획했다. 또래 학생들에게 관련



강원외고 WARD 학생들은 교내 포스터 홍보로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알리고(왼쪽), 속초 설은중 비전메이커유스클럽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 4대 기본권을 홍보했다(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는 속초여고 비전메이커유스클럽의 교내 아청법 캠페인 모습.

도내 중·고교 안팎 캠페인 다채

참정권·놀이 권리·아청법 등 중심

성 범죄 이슈 첫 등장 눈길

포스터·설문·퀴즈 등 호응

"아동기본권 관심 부족 실감"

법 내용을 알리고 법 위반 사례, 청소년들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인식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한경(속초여고 2년) 비전메이커유스클럽 총무는 "캠페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해 충격받기도 했다"며 "아동청소년 인권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세대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원외고 WARD(회장 윤대인·강원외고 2년)는 학교급식실 앞에서 성인지 감수성 캠페인을 갖고 성별에 따른 직업차이는 있을 수 없다는 점 등을 포스터 형식으로 홍보했

다. 윤대인 회장은 "평등할 권리를 교내에서 직접 다뤄 유익했다"고 말했다.

■ 스스로 찾는 참여권·놀이 권리

양양중 비전메이커유스클럽(회장 윤다연·양양중 3년)은 '2020년 강원도 아동총회' 결의문으로 채택된 '아동의 참여권' 캠페인을 펼쳤다. 양양 전통시장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아동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9명 중 72명이 '아동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다'고 대답, 아동권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아동 관련법 제정시 아동이 직접 제안한 의견이 반영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응답도 7명 나왔다. 윤다연 회장은 "예상과 달리 아동 관련 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상당 수 있어 놀랐다"며 "아동 참여권 인식개선을 위해 더 적극 활동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속초 설은중 비전메이커유스클럽(회장 정인영·설은중 3년)은 시민들에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기본권을 홍보했다. 속초 엑스포광장에서 아동의 기본권에

대해 아는지 묻고 '아동 4대 권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권리'에 대해 설문했다. 시민 참여자 50명 중 '모른다'는 대답이 47명이었으며 '아동보호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으로 잡혔다. 정인영 회장은 "처음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본권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 떨렸지만 많이 사람들에게 알린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평창 봉평중 비전메이커유스클럽(회장 손경서·봉평중 3년)도 지난달부터 '아동권리 퀴즈' 행사를 갖고 아동의 4대 권리와 침해 사례를 함께 알렸다. 홍천여고 비전메이커유스클럽(회장 김소민·홍천여고 1년)의 경우 학업 경쟁 속에 접해받는 '놀이 권리'를 캠페인 주제로 정했다. SNS에 놀 권리에 대한 카드뉴스를 올려 챌린지를 진행했다. 지난 8일 온·오프라인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벌였다.

최창일 소장은 "대면활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아동청소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했다"며 "아동권리가 지켜지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들에게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송미

국민일보

중2만 해도 수·과학 지긋지긋하다는 아이들... 해법 없나



이도경의 에듀 서지

교육전문기자



성적은 글로벌 최상위인데-

초44년후 "수학 싫어" 비율
61%로 2배나 뛴박질
과학도 47%로 3배 가까이 ↑

당국은 스토리텔링·토론수업
처방 내놔지만 헛발질 그쳐

한국의 초등·중학생들은 세계에서 공부
를 가장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도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지요. 대견하다
고 해야 할까요 불쌍하다고 해야 할까요.
싫은 공부를 하느라 애쓰는 막대한 아이들
모습이 떠오릅니다.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협회’가 얼마 전
발표한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
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TIMSS)
에 따르면, 초등 4학년과 중학 2학년을
대상으로 4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제비교
연구인데 이번에는 58개국 초등학생 33만
명, 30개국 중학생 25만명이 참여했습니
다. 한국은 성취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표
를 받았죠. 초4는 수학 3등과 과학 2등, 중
2는 수학 3등과 과학 4등입니다.

하지만 수학·과학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
한 중2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번
연구의 중2는 4년 전 똑같은 연구에서 초
4로 참여했습니다. 다시 말해 4년 전 연구
에 참여한 초4가 성장해 이번 연구에선 중
2로 평가를 받은 겁니다. 비교해보면 그동
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엿볼 수 있겠죠.

이번 중2가 초4일 때 ‘수학을 매우 좋아
한다’고 말한 비율은 19%였습니다. 5명 가
운데 1명만 수학을 좋아한다고 말한 겁니
다. 4년이 지나 중2가 됐을 때 이 비율이
8%로 떨어지게 됩니다.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수치죠. 반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4 때 35%에서 중2
때 61%로 경종 뛴었습니다. 수학을 좋아
하지 않게 된 학생들이 무대기로 발생한

겁니다. 61%란 수치는 조사 대상국 거운
데 가장 높습니다. 일본·대만(56%), 홍콩
(48%)보다 높았고, 한국처럼 익명 높은
입시제도를 운영한다는 싱가포르의 경우
35%에 불과했습니다.
과학 공부에 흥미를 갖고 있다가 잃는 아
이들은 더욱 많습다. 초4 때는 42%가 ‘과
학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했다가 중2로
올라가는 동안 30% 포인트가 떨어져 나가
고 12%만 남게 됩니다. 반면 ‘과학을 좋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학생은 14%에서
47%로 급증하게 됩니다. 47% 역시 세계
1등으로 2위 일본(35%)과 격차가 상당하
며 싱가포르(14%)보다 3배 이상 높습다.
중가 폭도 두드러집니다. 과학을 좋아
하지 않게 된 아이들이 같은 기간 일본은
25% 포인트, 대만은 19% 포인트, 홍콩은
11% 포인트, 싱가포르는 3% 포인트 증가
합니다. 한국은 무려 33% 포인트입니다.
한국의 수학·과학 교육 시스템이 비슷한
문화적 배경과 교육 환경을 가진 다른 동
아시아 국가에 비해 학생들을 더 잘려버리
게 한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TIMSS가 시행된 1995년 이래 비슷한 추세
를 보여 왔습다. 익숙한 얘기죠. ‘우리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지만
가장 공부를 싫어한다.’ 공부는 원래 안내
와 고통을 수반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서 고통스럽더라도 더 끌어붙여야 한다는

말에 수긍이 갑니다. 인적자원 말고 가진
게 없는 나라 아이들의 숙명일 수 있겠습
니다. 하지만 고작 10대 초반 공교육을 받
은 지 몇 년 안 된 아이들이 수학과 과학이
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상황,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 당국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
다. 하지만 이번 TIMSS 결과가 보여주듯 성
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초등학교에서 ‘스토리텔링 수
학’을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나
실생활 사례를 적용해 수학을 재미있게 가
르친다는 개념이었죠. 하지만 국어 능력
이 부족한 아이들에겐 수학을 더욱 멀어지
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수
학 퀴즈를 이해하려면 국어 실력이 필요했
으니까요.

2015년에 고시된 새 국가 교육과정(현
행 교육과정)에선 ‘공부할 내용을 줄이되
즐거움 공부가 되도록 한다’는 접근이 이
뤄집니다. 그래서 공부할 분량을 20%가량
깎아내고 토론과 참여수업을 통해 흥미를
끌어올리려고 했죠. 과학에선 딱딱한 이
론이나 계산수업보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
발할 수 있는 실험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TIMSS에 참여한 초4, 중2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도 비
슷한 맥락에서 도입했습니다. 한 학기 혹

은 두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무엇을 좋
아하는지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을 허용해
보자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꿈을 발견하
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상태에서 공부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반
영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TIMSS
결과가 보여주듯 자유학기제와 새 교육과
정도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런 정책들이 조금씩 상황을 호전시킬 것으
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초등
학생은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중학교는
절대평가로 전환한 지 꽤 됐는데도 백악이
무효인 듯합니다.

코로나19가 미래교육 논의를 촉발했습
니다. 교육부는 발 빠르게 ‘그린스마트 미
래학교’란 개념을 내놔요. 학교와 지역사회
가 함께 가르치는 ‘복합학’,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실’, 이런 교육을 뒷받침해주는 ‘공간 혁
신’ 같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했습니다. 나
쁘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엔 고교학점제
용 국가 교육과정 논의도 본격화되고 대입
개편도 따라붙겠죠. 많은 변화가 예상됩
니다. 하지만 공부를 자긋지긋해 하는 학
생들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열심
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
다.’ 미래교육 논의는 이 지점부터 얘기를
다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yido@kmb.co.kr

90분 만에 모인 1000만원... 왜 이렇게까지 '혁신'에 반대하나?

(지정 철회 위한 변호사 수임비)

경원중 사태로 본
혁신학교 딜레마

'개학 날이 기다려지는 학교, 신나는 학교, 밝고 웃음이 넘쳐나는 학교' 서울시교육청 홍보 영상에 나오는 혁신학교에 대한 설명이다. 유년 시절 누구나 한번쯤 꿈꾼 학교 모습이다. 부모도 마찬가지. 내 자식이 이런 학교 다니기를 원치 않을 수가 있을까.

이달 초,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에서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학교 인근에는 '○○○(경원중 교장 이름) 죽어서도 너를 잊지 않겠다' '혁신학교 필요 없다' 같은 현수막 40여 개가 내걸렸다. 학부모뿐 아니라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까지 팔을 걷어 붙였다. 혁신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지정 철회를 위한 변호사비를 모금했는데, 90분 만에 1000만원이 모였다. 주말엔 아버지들이 파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급기야 지난 7일에는 학부모 수백명이 모여 면담을 요구하자, 교장이 학교 밖으로 자정까지 못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지난 10일 경원중학교는 혁신학교 결정을 취소했다.

약 일주일간 벌어진 경원중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철회 과정을 보면, '목숨 걸고 반대한다'는 말을 절감한다. 경원중학교뿐 아니다. 지난 3년간 학부모·주민 반대에 부딪혀 혁신학교 추진이 좌초된 사례는 서울에서만 10건이 넘는다. 혁신(革新)이었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것일까. 왜 반대하나?

"집값요? 사실 경원중 보낸 사람 중에 전세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공부시키려고 전세 온 거지. 집값 때문에 투자해서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학력 저하 우려...
혁신학교 일반학교보다
기초학력 미달 2배 이상

성취도 높다는 반박도
"자기주도학습 능력 생기고
학습 흥미도 높다" 주장

교육청, 학부모와 대화 나서야
서열주의로 몰아선 안 돼
학생들에게 선택권 줘야



서울 서초구 경원중 인근에 사는 초등학교생 부모 박나연(가명·44)씨는 '집값 떨어질까 봐 혁신학교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박씨는 이달 초, 경원중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반대 청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씨는 "경원중이 혁신학교가 돼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경원중학교 자라는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있어 서초에서도 요지로 꼽힌다. 주변에 학력 수준 높은 고등학교도 많아 집값은 큰 반대 요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학부모들의 조직력이 이 학교 전통에 기반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원중 출신 김모(46)씨는 "한 반에 6~8명씩 서울대 보낸 중학교로 소문난 경원중 출신들이 현재 학부모가 됐다"며 "이들이 자녀를 혁신이란 이름으로 누

구도 책임지지 않는 좌파 교육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혁신 학교가 도입 초기부터 기피 대상이었던 건 아니다. 혁신학교는 2009년 이른바 '좌파 교육감'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처음 도입했다. 지난 3월까지 전국에 1700여 곳이 생겼으며, 서울에만 226곳이 있다. 도입 초기

에는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수업 시간도 60~80분으로 자유로우며, 토론·참여식 수업을 한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높았다. 같은 아파트라도 혁신학교에 배정받는 동(棟)이 더 비싸게 거래될 정도였다. 초등생 딸을 혁신학교에 보냈던 김모(40)씨는 "독서나 체육 활동 등 혁신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활동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줘서 만족스러웠다"면서도 "중학교부터는 본격 대입 준비가 시작되는 만큼 상위권 대학 진학을 더 중요해지고 고민이 됐다"고 했다.

실제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학력 저하'다. 2017년 10월 혁신학교의 학력 수준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도 단위별로 공개됐는데, 당시 혁신고 학생들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학력 미달' 비율(11.9%)이 전국 평균(4.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김경희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혁신학교는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학습 완화에 초점을 맞춰서 도입한 제도라, 기초 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도 이와 비슷한 '유도리 교육'을 우리보다 먼저 도입했다가 기초 학력이 저하돼 폐지했다"고 말했다.

학력 저하라고 단정하기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8년 발표한 '혁신학교 성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혁신학교 학생들은 일반 학교 학생들보다 성적은 낮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장률은 더 높게 나타났다.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대표는 "학력이란 부분이 너무 좁게 해석되고 있다"며 "단순히 점수

뿐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나 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혁신학교는 이런 부분에서 훨씬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대한 재반박도 있다. 전주 완산고 박제원 교사는 "보고서는 교사 수와 학생 수가 비슷한 집단 대신 '교사 수에 대한 학생 수 비율'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 경우 학급당 학생이 적은 집단(혁신학교)이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은 자명하다"며 "비율이 아닌 수로 따져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고 했다.

대안은?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은 경원중 앞에 모여 면담을 요구한 학부모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의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혀, 학부모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만약 교육청이 혁신학교 가면 성적 떨어진다"는 게 학부모들의 오해라고 생각한다. 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몰라서 그런다. 믿고 따라와라' 같은 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제원 교사 역시 "혁신학교 정착을 위해선 반대 학부모를 수구 풀통이나 경쟁·서열주의자로 몰아가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학 입시 제도나 학벌주의 사회 등은 그대로 두고 단지 교육과정만 바꾸겠다는 태도는 비현실적이다. 차라리 대학 평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경기대 교육대학원 김대유 교수는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혁신학교가 학군 안에 있지만 이런 교육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갈 수 있게 하거나, 반대로 혁신학교를 원하는 학생들은 멀리서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남정미 기자

중앙일보

지식 전달 교육 한계, 새 기술 배우는 '리스킬링' 중요

(Reskilling)



등교가 잠시 재개된 지난 9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수업 모습. 이러한 '대면-비대면' 혼합형 교육은 다양한 형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입 지원관과 함께 전력 Up! 전략 Plus!

배영대 학술전문기자
balance@joongang.co.kr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을 심하게 받은 분야 중 하나가 교육이다. 비대면 교육, 즉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일이 일 상화되고 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 사이에선 서로 같은 학교 동급생인 줄도 모른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그냥 웃 어넘기기 힘든 이 시대의 한 단면이다. 교육은 지식의 전달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엔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하는 가? 그 해법을 모색하는 이색적인 공청 회가 지난 22일 경희대에서 열렸다. 학교 법인 경희학원(이사장 조인원)이 이라나 보코바(Irina Bokova) 전 유네스코 사 무총장을 초청해 마련한 자리다.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이었다.

행사의 주제는 '전환의 시대, 미래를 위한 준비'였다. 경희학원에서 각종 교육과 기획을 담당하는 이사회 구성원들 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토론회로 진행 되었는데, 단지 경희학원 내부의 문제로 만 좁혀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코로 나 이후 대학 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 하는 일이 비단 어느 한 학교만의 문제 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는 현재 지구촌이 직면하 고 있는 각종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시작했다. 기상 이변과 식 량 위기, 경제 불황과 정치의 불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류의 지 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지구촌이 머리들 맞대고 논의해도 해결이 쉽지 않 을 '시대적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 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보코바 전 사무총장은 불가리아 출신으로 자국의 외무부 장관과 국회의원 을 지냈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유 네스코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유네스 코 재임 중에 인류의 '지속가능발전목 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합 의를 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2030년까지 해결을 목표로 제시된 SDGs는 모두 17개 항목인데, 전 인류적 과제를 망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빈곤 퇴치, 기아 해소 및 식량안보 달성 및 지 속가능 농업 발전, 건강한 삶 보장 및 북 지 중진,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증진, 성 평등 달성 및 여성 권익 신장, 물과 위생 제공, 에너지 보급, 지속가능한 경제성 장과 일자리 증진, 불평등 완화, 기후변 화 대응, 생태계 보호 등이다.

이날 공청회는 큰 틀에서 SDGs를 중

심으로 진행됐다. 보코바 전 사무총장 은 파리기후협정을 비롯해 SDGs가 지 향하는 국제적 협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 해있다면서, SDGs에 대한 국제적 약속 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교육과 건강, 안전과 복지 등을 공공정책의 중심으로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특 히 교육은 17개 항목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모두를 관통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17개 목표를 교육을 통하지 않고 확산시킬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4 차산업 혁명을 맞이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하는 리스킬링(Reskilling)과 평생교육의 제공은 더욱 중요해졌다. 리스킬링과 평생교육은 앞으로 대학이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강연에 이어 송세린 교수가 사회를 보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대면·비대면 뒤섞인 '혼합 교육'
학생 선택·비판 능력 키워야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는 인권 문제

문·이과 융합, AI 윤리교육 해야

는 가운데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자유 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경희학원 이 사 및 산하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교육 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교수들이 질문을 했고 보코바 전 사무총장이 하나씩 답 변하는 형식이였다.

보코바 전 사무총장은 교육의 패러 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이전의 교 육이 앞선 세대의 지식을 후속 세대에 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지식의 전수는 의미가 약화되었다는 것 이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 는 능력과 비판적 결정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바뀌 것으로 전망했다. 지식 은 언제든 접속해서 얻을 수 있는 시 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 터넷 해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디지털 격차는 이제 인권 문제의 일종으 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합 교육, 인공지능 윤리 교육, 문화적 다양성과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 이후 교실의 모습은 대면 방식과 디지털이 혼 재된 '혼합 교육'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코바 전 사무총장은 "포스트 코로 나 시대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 중요하다.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리더들이 정신을 차려서 세계가 좀 더 힘을 합치 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좀 더 포용 적인 사회, 좀 더 도덕적인 사회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인원 이사장은 "새롭고 창의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삶의 어 떤 문제에 주목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런 문제와 직결돼 있다. 인류가 직면한 '실존적 위협(existence threat)'을 바라 보는 각자의 마음에 대한 성찰도 필요 하다. 종전에 해온 방식을 반복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경희학원의 공청회에서 온라인 특강을 하는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사진 경희대]

서울신문

요즘 아이들 ‘셀카 맛집’ 화장실 “아이 좋아” 환호성 터진 비밀은

서울시·교육청 ‘함께꿈 사업’ 추진

학생들 TF 참여해 공간 디자인 구상
파우더룸 만들고 전신거울·조명 배치
콘센트·선반 설치... 벽화 그려넣기도
“코로나 시대, 편히 가서 손 씻는 효과”

“이제 학교 화장실이 ‘셀카’가 제일 잘 나오는 장소가 됐어요.”

지저분하고 낡아 학생들이 꺼리던 학교 화장실이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조명받 잘 받고 예기하고픈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오래된 고장이 갖고 불편한 학교 화장실을 개선하는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이하 함께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꿈에는 화장실이 단지 불일만 보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꾸미고 함께 꿈꾸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함께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장실 디자인 태스크포스(TF)’에 학생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낸다는 점이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디자인디렉터, 학교 관계자 등 20여명이 TF에 함께한다. 학생들은 현장 조사, 사례 조사, 공간 구상, 디자인 기획, 도면 확정 등 기획 단계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의견을 낸다.

사업에 참여한 이선정 디자인디렉터는 “학생들에게 원하는 화장실 이미지를 가져와달라고 했더니 직접 상상한 화장실을 그려온 학생부터 외국 화장실 사진을 가져온 학생까지 기대 이상으로 참여 의욕을 보여서 놀랐다”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TF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고 모임 횟수도 줄였지만, 화장실 타일을 고르는 작업부터 설계도면 그



서울 금천구 동일여자상업고 화장실. 학생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거울을 보며 얼굴을 꾸밀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위). 서울 은평구 신진과 학기술고 3층 화장실 입구. 자동차과가 유명한 학교 특성에 맞춰 디자인했다(아래). 서울시 제공

리는 것까지 학생들의 의견을 공간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의견은 최대한 공간 디자인에 반영됐다. 일부 학교에는 파우더룸이 설치됐다. 전신거울, 은은한 조명, 탁자와 의자 등도 배치됐다. 화장실 칸마다 휴대전화 혹은 비대를 놓을 수 있도록 전기 콘센트를 설치하고 모서리, 변기 뒷부분 등에 선반을 최대한 많이 만들었다. 또한 문에 옷걸이를 만들어 옷이나 가방을 걸어둘 수 있도록 했다.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도 작은 선반을 매달아 휴대전화, 책 등의 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 벽면은 밝은색으로 칠하고 학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넣기도 했다. 이씨는 “과거 모든 학교 화장실이 특색 없이 획일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 학생들이 원하는 화장실은 자신을 꾸밀 수 있고 친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함께꿈 사업을 진행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34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평리성(89.3점), 조명 밝기(88.8점) 등의 항목에서 학생들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줬다.

강북구 송천초에 다니는 정지영(12)양은 “공사 전 화장실은 문틈이 많이 벌어져 아이들이 화장실 가는 걸 꺼렸는데 공사 후에 화장실은 노란색, 하늘색 등 밝은 색으로 꾸며진 데다 넓어졌다”며 “친구들과 새 화장실에서 셀카도 많이 찍고 싶은데 코로나19로 학교에 많이 가지 못해 아쉬울 정도”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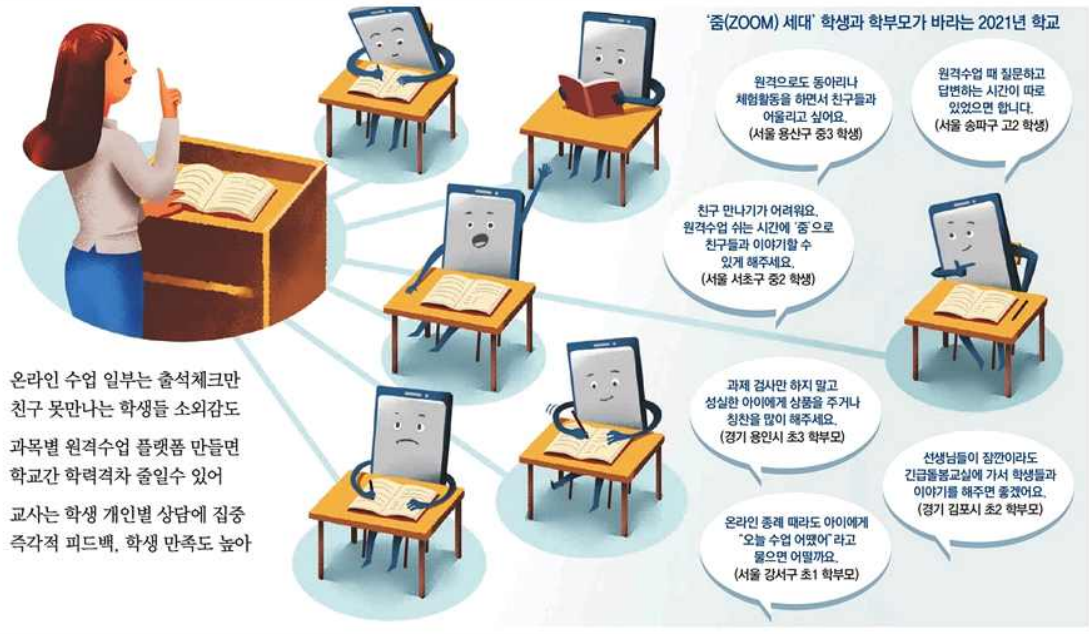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 함께꿈 사업에 462억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136개교 화장실 공사를 진행했다. 고친 지 15년 이상 된 학교 화장실은 전면 보수를, 10년 이상 된 학교 화장실은 부분 보수를 했다. 칸막이, 천장, 타일 등 노후율과 관리 상태 등으로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165개교의 화장실을 보수할 예정이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은 화장실 개선에 학생이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학교 시설 중 가장 불편했던 화장실을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전반적인 학습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개인위생 관리가 강조되는 코로나19 시대에 아이들이 마음 편히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줌 세대’의 탄생... 교사는 학생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라

(ZOOM)

(Pace maker-마라톤 선수가 계획대로 달릴 수 있게 돕는 안내자)



2021년 01월 04일 (월)

기획 15면

서울신문

“공부 재미없지만… 꼭 참고 하고 놀아요”

우리 아이 마음 읽기

여섯살 때부터 태권도 학원에 다닌 한울(7)이는 지난해 12월 초 태권도를 그만두겠다고 부모에게 말했다. 집에서 품새, 발차기 연습을 열심히 하고 검은 띠까지 딸 거라고 장담했던 한울이의 폭탄선언에 엄마 김모(38)씨는 적잖이 당황했다. 이론 것 없이 중간에 그만두면 아까지 않냐고 설득했지만 한울이는 완강히 거부했다. 김씨는 “초등학교 입학하면 영어, 수학… 다닐 학원도 많은데 툭 하면 그만둔다고 할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걷기 전부터 문화센터에 다닌 요즘 아이들은 사교육에 익숙하다. 각종 연구결과를 보면 70% 이상이 취학 전 사교육을 경험한다. 시작 연령은 평균 5~6세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전국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만 7세 어린이 32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경험에 대해 물었더니 대부분 아동이 한글, 수학 등 사교육 수업을 받고 있었다. 사교육에 관심이 있고, 다니고 싶은 학원이 뚜렷한 아이도 있었지만, 싫증을 내거나 공부 재미없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어린이집을 마치면 아이들은 무엇을 할까. 32명 가운데 어린이집 학습활동 외에 사교육을 받는 어린이는 28명(87.5%)이었다. 중복 응답으로 한글 공부를 하는 아동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 학습(15명), 학습지(5명) 순이었다. 가정 방문 수업 외에 피아노 학원(11명), 태권도 학원(2명) 등 예체능 수업을 따로 받는 어린이가 절반(17명)을 넘었다. 사교육에 쓰는 시간은 30분(14명·43.8%)이 가장 많았고 1시간(10명·31.3%), 2시간(2명·6.3%) 순이었다.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사교육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 65.6%인 21명은 공부하는 것이 재미

미취학 7세 아동 32명 대상 설문(중복응답)

■ 어린이집 밖에서 다른 공부도 하나요? (단위: 명)



■ 공부 안 하고 놀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요?



(자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있다고 답했지만 31.3%(10명)은 재미없다고 답했다. 과목별로는 수학이 재미있다는 답변이 21명(65.6%)으로 가장 많았고 한글 등 국어 관련 수업에 대한 흥미가 8명(21.6%)으로 뒤를 이었다.

집중력과 끈기가 부족한 어린이의 특성상 공부가 힘들 때도 있다. 공부를 안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꼭 참고 공부를 다 하고 논다”는 ‘착한’ 답변이 21명(65.6%)으로 가장 많았지만 부모님께 놀고 싶다고 말하거나(7명), 부모님 몰래 논다(1명)는 답변도 있었다.

영유아 사교육은 취학 후 성적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교육 전문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오히려 사교육 시간과 가짓수가 늘어날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자주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여러 번 보고되기도 했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필요에 따라 사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달란 기자 dalan@seoul.co.kr

한겨레

누리과정 지원금 오르고 '청소년생활기록부' 생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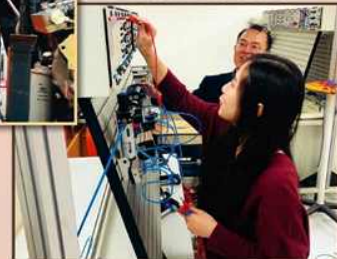
2021



▲ 2021년부터 만 3~5살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지난해보다 2만원 오른다. 보호자와 어린이가 놀이 체험을 하는 모습.



▲ 취업연계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지난해 7억원에서 86억8000만원으로 증액됐다. 한 전문대학 재학생이 학습하는 모습.



2021 교육정책 어떻게 바뀌나

“바뀌는 것이 많은 만큼 다양한 기사가 쏟아져 쏟아져요. 한눈에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아무래도 보기가 편하죠.”

초등 2학년과 다섯 살 딸을 둔 '워킹맘' 김전희씨의 말이다. 딸 둘을 키우면서 교육 뉴스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터다. 일과 돌봄, 안팎으로 바쁜 보호자들을 위해 2021년 새해, 알아두면 좋은 교육정책을 정리했다.

유아 학비 부담 줄어든다

교육부는 지난 3일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유아·특수교육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원의 유아학비나 보육료를 지원한다.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이 월 2만원 오르고, 원비 인상을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보호자의 부담금은 지난해보다 경감된다. 아울러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에도 올해부터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급식 위생은 '식품위생법' 기준보다 까다롭게 적용받는다.

코로나 시대, 아이를 둔 보호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돌봄이다. 사회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 등은 여전히 돌봄 공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부터 매년 750실씩 2년간 총 1500실의 돌봄교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조·연장 보육교사를 증원 배치하고, 아이 돌봄서비스를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릴 예정이다.

지역 내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돌봄 운영시간을 결정하고,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생 3만여명에게 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종합민원포털 정부24와 연계한 뒤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했다.

초·중·고 무상교육 전면 실시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지난해까지 고·2·3학년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교육이 올해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지난해 2·3학년 88만명이 무상교육을 받았던 것이 올해부터는 1·3학년 124만명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됐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되며, 보장 수준도 인상된다.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을 지원받았던 것에서 6.1% 인상된 44만8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초등학생은 20만6천원에서 28만6천원으로, 중학생은 29만5천원에서 37만6천원으로 올랐다.

직업교육을 받은 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지난해 4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오른다. 학교가 혁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역시 기존 200개교에서 250개교로 확대된다.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인상

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 적용

2년간 1500실 돌봄교실 구축

초·중·고 본격 무상교육 시대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생활기록부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 금지

한겨레

'청소년생활기록부'로 대학 간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대체 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활용해 학교 밖 청소년의 대입 응시 기회를 좀 더 넓게 보장하게 된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수시전형에 지원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청소년생활기록부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의 다양한 활동 내용(수상경력, 자격증 취득,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기록하게 돼 있다.

2021학년도 입시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등 4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 29명이 응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보완해 참여 대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생활기록부에 관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051-662-3182) 또는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취업이 지상 목표가 된 시대에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을 만들고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를 키우는 '마이스터대'가 시범 운영된다. 3월 중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또는 전체) 학과에서 단기직무과정·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교육과정(단기 직무 과정·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기 직무 과정은 자격증 취득 과정과 단기 직무 과정 등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조합해 학위를 인증하는 제도인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등으로 운영해 재교육 및 취업역량을 지원하도록 구성한다.

또 전문기술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에서는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영재학교·과학고 전형기간 줄어

올해부터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을 금지하면서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전형 기간을 축소한다. 입학전형 지원자의 학교 간 중복지원에 따른 과도한 입학 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영재학교 여러 곳에 지원 후 1단계에서 중복으로 합격했을 경우 하나의 학교를 선택해 2단계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 2021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1단계 전형 합격자 9304명 중 40% 이상이 중복 합격하는 등 입학 경쟁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부터 영재학교 1곳만을 선택해 지원해야 하며, 학교별 1단계 지원 규모 축소를 통해 좀 더 까다로운 서류심사가 진행된다. 영재학교는 기존 3월부터 8월까지였던 전형

일정을 6월부터 8월까지로, 과학고는 기존 8월부터 11월까지였던 전형일정을 9월부터 11월까지로 조정한다.

또한 모든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입학전형 평가 문항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입학 관련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업자료 제작플랫폼 구축

교원이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편리하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티(ICT) 연계교육서비스(교사전용 수업자료 제작플랫폼)'를 구축한다.

교육부 이러닝과는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8월 이후 전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작된 수업자료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온라인클래스)으로 배포해 원격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플랫폼 내에서 교원이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공공·민간 '오픈교육자료(OER)' 및 <교육방송>(EBS)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제공된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수업 자료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통합 뷰어를 비롯한 전반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약대는 6년제로

입시 정책에서도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올해 고3에게 적용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시모집의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되고, 수시모집의 주를 이루는 학생부 기재 내용도 변경 사항이 많아졌다.

2022학년도 대입전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대입 개편안에 따라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은 정시모집 선발 비율이 40%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수능은 국어와 수학에 선택과목이 도입되면서 수능 지정 과목이 생겼다. 적성고사 전형이 폐지되고, 2022학년도부터 약대가 '2+4'에서 6년제로 변경돼 학생을 선발한다. 글·사진 김지윤 기자 kimji13@hani.co.kr

기초개념도 모르는 최하등급 학생 14.8%... 10년새 2배

“학습 중간층 얇아지고 성적 더욱 양극화”... 現정부 들어 심화
코로나 영향으로 교육격차 더 커져, 올해 상반기 표면화될 듯

조현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격차는 코로나 유행 이전에도 심각했지만,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는 견줄 수 없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성적 중위권을 의미하는 ‘학습 중간층’이 얇아지고 ‘성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며 “이에 대해 깊은 위기의식을 느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교육계에선 코로나 유행으로 등교 수업이 줄고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기초학력 미달 등으로 학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서울시교육감이 이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코로나 교육 격차 올 상반기 표면화”

학교 현장에서 지난해 코로나로 급격히 확대된 기초학력 미달 등 교육 격차가 올해 상반기 중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시험을 보면 70점대를 받는 중간 점수대 아이들 비율이 예년에 25명 중 10명 정도였다면 올해는 5명으로 줄었다”며 “학교에 나와 친구·교사들과 함께 공부를 했다면 잘 따라갔을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그냥 방치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원격 수업이 진행될수록 부모가 신경 써주는 아이들만 열심히 해오고, 나머지 아이들은 갈수록 제대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다”며 “예년에는 한 반에 ‘약수와 배수’ 같은 기초 개념을 몰라서 학습 부진을 겪는 아이가 10%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런 아이들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김모(42)씨는 “아이가 분수의 덧셈 뺄셈을 못하고 소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5학년 올라가면 진도를 못 따라갈 것



같지만 학원 보내기도 여의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이병민 서울대 교수팀이 서울시교육청 의뢰로 초·중·고교 교사 131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초등 교사의 89.8%, 중학교 교사의 83.5%, 고교 교사의 73.9%가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력 격차가 벌어졌다”고 응답했다.

◇최하등급 학생 비율 10년 새 2배

올해 서울의 모든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중학교에는 ‘기초학력 협력강사’가 배치된다. 담임 교사와 함께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개별 맞춤 지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2와 중1에는 기초학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강해주는 ‘집중학년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계에선 “서울만의 현상이 아니므로 기초학력 강화를 보장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읽기·수학·과학 과목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학생 평균 비율이 우리나라는 첫 평가 때인 2000년 6%에서 2018년 14.8%로 급증했다.

특히 2009년 6.7%에서 2018년

14.8%로 10년 사이 2배로 늘었다. 일본(13%), 홍콩(11.1%)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다.

최하등급은 작품의 복용 안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동차 주유 논문을 보고도 기쁨이 얼마 남았는지 계산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문맹(文盲)에 가까운 정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가정 배경 하위 20% 학생의 읽기 PISA 최하등급 비율도 2012년 13%에서 2018년 25%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주호 아시아교육 협회 이사장(전 교육부 장관)은 “가정 배경 하위 20% 학생 4명 가운데 1명이 기초학력 미달인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현 정부 들어 학력 부진 심화

교육계는 현 정부 들어 전교조 등의 반대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취약해진 것도 학력 부진의 한 원인으로 본다. 2019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중학생 비율은 11.8%로 집계됐다. 2017년 7.1%에서 2년 만에 1.6배쯤 늘어난 것이다.

전교조와 친(親) 전교조 교육감들이 ‘일제고사’라고 비판해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7년부터 전체 학생의 약 3%만 치르는 표집(標集) 평가로 바뀌면서 미달 비율은 높아졌다. 전체 학생 대상으로 평가하던 2015년(4.6%)과 2016년(4.9%)엔 미달 비율이 5% 이하였다. 2019년엔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중·초·3 학생을 대상으로 지필고사 방식의 기초학력진단 검사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가 전교조 반발에 철회하고 교사의 관찰 상담 등으로 대체하게 하기도 했다.

김경희 성신여대 교수는 “기초학력 미달뿐 아니라 다음 학년 진급 후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기본학력 미달 학생이 올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민정 한국교육 정책추진국장은 “초등학교부터 누적된 학습 결손은 수년만 지나도 따라잡기 힘든 학력 차이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곽수근·박세미 기자

경향신문

서울교육청 “학교서 노동인권 가르치자”

“노동가치 등 2022년부터 국가교육과정에 반영” 제안
현 정부의 국정과제지만 답보… 공론화 이어질지 관심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인권 교육을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학교 내 노동인권 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에도 학교 현장에 서 활발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프랑스 등에서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노동법 등을 가르친다.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이 학교 내 노동교육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

혔다.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관련 요소를 넣고, 각론에선 법교과 학습주제에 ‘노동의 가치’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자고 했다. 또 진로 교육·중등직업교육에서 노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노동인권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개선하자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별도 교과를 개설하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수업 시수 등이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된다”며 “직업 계고에 있던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에 노동인권 내용을 더 연계하

거나 사회 교과나 직업·진로 교과에서 노동인권 교육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내 노동교육 확대는 현 정부 국정과제다.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 등 12곳에서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학교 내 노동인권 교육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교육부의 ‘학교 노동인권 교육 통계조사’(2019년)를 보면 최근 3년 이내 노동인권 교육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학교 교사 42.9%, 일반고 교사 54.2%만 ‘실시했다’고 답했다.

학교 내 노동교육 필요성은 알하는 학생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중 약 8.5%가 아르바이트 등 일 을 했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일하는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휴가·주휴수당 등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노동법 지식’ ‘일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등을 원하는 교육으로 꼽았다.

노동인권 교육이 학생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앞서 언급된 교육부의 ‘학교 노동인권 교육 통계조사’에서 학생들은 노동인권 교육 후 인식 변화를 묻는 질문에 ‘노동자로서의 나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교육과정 내 내용 체계가 없어 노동인권 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교육이 외부강사 중심의 1회성 교육으로 진행되는 등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존재했다”면서 “국가교육과정은 학교에서는 헌법과 같기 때문에 노동인권 교육이 안정적·체계적으로 이뤄지려면 교육과정에 포함돼야 하며 학교별로 교과 내용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은 오는 14일 개최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총회에서 가결되면 교육부에 제출된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서울신문

“원격수업에 원비 아깝다”… 유치원 입학 취소 ‘저울질’하는 부모

등원 일수 줄었는데 기본 수업료 그대로
가정보육 선회… 양육수당 받는 사례 증가
유치원 운영 더 악화… 예산 지원도 끊겨
대학가도 등록금 동결에 반한 갈등 속출



서울 노원구에서 5살 자녀를 키우는 강모(33)씨는 올해 아이의 유치원 입학에 취소하기로 했다. 강씨의 아이가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뒤 급간식비 등을 제외한 기본 수업료 30만원을 받고 있다. 강씨는 “아이의 원격수업은 고스란히 내 뒀는데 원비까지 내는 게 아까워 가정보육을 하고 양육수

당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의 유치원 입학에 취소하거나 퇴소할지 고민에 빠졌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원 일수가 제한되는 데도 학부모 부담금은 대부분 그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교육부

에 따르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유치원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도 학부모 부담금을 감면할지 여부는 유치원의 자구 노력에 맡겨졌다. 지난해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과 시도교육청의 예산 총 640억원을 들여 개학이 연기된 3~4월에 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하도록 지원했으며, 5월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비 감면을 위한 교육당국의 예산 지원이 끊겼다.

유치원 원격수업은 EBS나 동영상 보면서 ‘놀이 꾸러미’를 보호자와 함께 완성하거나 드물게는 줌(Zoom) 등을 통한 화상수업으로 진행된다. 유치원들은 원격수업과 긴급돌봄을 병행해야 해 고정 비용이 드는 데다 코로나19로 퇴소하

는 원비가 많아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반면 학부모들은 가정보육을 하면서 한 달에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원비까지 부담해야 해 학부모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유아들이 장기간 원격수업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자녀가 오는 3월 유치원에 입학할 예정인 학부모 김모(34)씨는 “아이에게 TV 애니메이션도 최대한 안 보여 주는데, 원격수업으로 동영상만 보여 주는 게 꺼려진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등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회성을 키우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신학기 입소를 앞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올해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유치원 학부모 부

담금 반환을 지원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 지난해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들의 사회성 함양과 발달을 위해 대면수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가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등록금 반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등 대학들이 속속 등록금 동결 방침을 밝혔지만 오는 1학기 도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동결이 아닌 인하를 해야 한다는 게 대학생들의 주장이다. 부산대에서는 대학 측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등록금 동결안을 상정하자 총학생회가 이에 항의하며 지난 8일 열린 등심위에 불참하기도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21년 01월 13일 (수)

대구/경북 12B면

한국일보

대구교육청, 기초학력 채움교사제 올해 첫 시행

특별교육 이수한 전담 교사가 학력부진 초등생 맞춤형 지도

대구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기초학력 채움교사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다 품겠다는 대구 미래역량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서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기초학력 채움교사제를 새로 실시하고, 1수업 2교사제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초학력 채움 교사제는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셈하기(arithmetic)의 '3R'이 느린 학생을 대상으로 1 대 1로 맞춤형 교육을 작가에 제공하는 것이다. 특별 교육을 이수한 전담교사가 집중적인 교육으로 단기간에 해당 학년에 걸맞은 수준의 기초학력을 따라잡도록 하자는 것이다.

담임교사는 학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업한다. 기초학력 채움교사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교실에서 국어 수학 중심으로 수업하게 된다.

맞춤형 교육 대상은 주로 초등 3학년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될 전망이다. 초등 3학년 때 학력진단평가를 실시, 담임

교사의 개별 지도가 어려운 학생을 파악한 뒤 전담교사가 이들을 대상으로 초등 1, 2학년 국어와 수학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10개 학교에 1명씩 전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 기초학력센터에 별도 2명을 배치, 일선 학교의 요청이 오면 파견하기로 했다.

2월 중에 기초학력채움교사를 선정한 뒤 100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거쳐 3월 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수업 2교사제도 확대한다. 수업협력교사를 지난해 102개교(104명)에서 올해는 120개교(120명)내외로 늘린다. 이 제도는 정규수업시간에 담임교사가 학반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하고, 수업협력교사는 같은 교실에서 별도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기본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수업 방식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단기간에 정규교육과정 교실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초학력 채움 정규 교원을 추가로 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광진기자

江原日報

춘천 퇴계초·중 ‘도시형 통합학교’로 운영

민병희 도교육감 밝혀… 학교간 시설 자원 공유 통합 활용
자율학교 지정 따른 학력저하 우려엔 “대부분 오해” 해명

춘천 퇴계초·중학교가 강원도의 첫 도시형 통합 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올 3월 개교하는 춘천 퇴계초·중학교는 강원도의 첫 도시형 통합 학교”라며 “이 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연계교육을 위한 자율학교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 학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고 또는 초·중·고 등 학교급이 다

른 두 개 이상의 학교에서 시설·설비 및 교원 등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통합 활용하는 학교다.

또 최근 자율학교 지정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학력 저하 우려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전국의 수많은 자율학교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대부분 오해이고,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특히 2019년 교육부의 혁신학교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강원도 내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모든 과목

에서 성취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학교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는 교육청의 설명도 덧붙였다.

민 교육감은 퇴계초·중학교를 자율학교로 운영해야 하는 법적 당위성 등도 밝혔다. 당초 퇴계초와 퇴계중의 분리 설립 계획이 2016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후 2017년 초·중학교 통합 운영과 도내 4개 학교 통합을 조건으로 학교 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 운영 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민 교육감은 “자율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영역에서 교육 효

과를 높이기 위해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자율학교 지정은 아이들의 행복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행복한 배움이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 잘못된 소문으로 걱정하지 말고, 교육청을 믿고 아이들을 맡겨 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인사발령을 마치는 다음 달 초 예비 학부모들을 만나 학교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춘천 퇴계초·중학교는 유치원 3학급 62명, 초교 31학급 740명, 중학교 4학급 116명 등 총 918명의 학생이 배정됐다.

장현정기자

선택과목 경우의 수만 816개... 난수표 수능

2022년 개편안에 수험생들 대혼란
수학, 공통 외 3과목 중 하나 선택
탐구, 사회·과학 17과목 중 택 2

“무슨 과목 고르느냐에 점수 큰 차
대학마다 과목도 달라 더 헷갈려”

예비 고3 수험생인 장모(18)군은 지난 주 강남 한 입시학원에서 “수능에서 수학 선택 과목을 뭘로 하는 게 유리하나”는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2022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아직 수학 선택 과목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군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능 점수가 차이난다고 해서 고민”이라면서 “대학마다 반영하는 선택 과목도 달라 더 헷갈린다”고 말했다.

선택과목을 확대한 2022학년도 수능을 둘러싸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입시계에선 “대입 설명회를 열면 ‘선택과목을 뭘로 해야 유리하나’는 질문만 쏟아진다”는 말까지 나온다. 교육부가 ‘문·이과 간 벽을 없애고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며 수능 선택 과목을 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역대급 누더기 입시’라는 조롱을 자초하는 실정이다.

◇총 816개에 이르는 선택 조합

수능 어떻게 바뀌나

현행		2022학년도	
과목	국어	공통 + 선택 2과목(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국어 중 택1	자원·교육부
	수학	가·나형 중 택1 (주로 이과는 가형, 문과는 나형)	
	탐구	사회 9과목 중 택2 또는 과학 8과목 중 택2	
	영어·한국사·제2외국어(아랍어 등 9과목 중 택1)	사회 9과목·과학 8과목 등 총 17과목 중 택2	
평가	영어·한국사 절대평가, 나머지 상대평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 절대평가, 나머지 상대평가	
제			

2022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 영역에 선택 과목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지금까지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로 통일해 시험을 봤지만 앞으로는 ‘공통국어’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과목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수학의 경우 지금은 이과는 ‘가형’, 문과는 ‘나형’을 응시했지만, 앞으로는 ‘공통수학’을 치르고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등 세 과목 중 하나를 또 선택해야 한다. 배점은 ‘공통과목’ 75점, ‘선택과목’은 25점으로 선택 과목 난도에 따라 점수가 조정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 과목을 고르느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탐구 영역도 지금까지는 문과가 사회탐구 9개 중 2과목, 이과가 과학탐구 8개 중

2과목을 선택해 왔는데, 2022년도 수능에서는 모두 합쳐 총 17개 중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국어·수학 선택과목 조합이 6개, 탐구 과목 조합만 136개로 총 816개에 이르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 여기에 수험생들은 각 대학이 필수 반영하는 선택 과목까지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 300만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수험생 온라인 카페에는 “예비 고3인데, 수능 선택 과목을 아무것도 모르겠다”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중 뭐가 유리하나”는 등 고민글이 매일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최근 입시업체인 유웨이닷컴이 고3 수험생 7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22 수능 선택 과목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수험생이 33.8%에 달했다.

◇누더기 대입 개편안이 만든 혼란

수능이 이처럼 복잡해진 건 2017년 교육부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반영해야 한다”며 수능을 개편하면서, 각계 눈치를 보다 선택 과목 수만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당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수능 절대평가 등을 포함한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갑작스러운 대입 개편 추진에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수능 개편 논의를 1년 미뤘다. 이후 국가교육회의와 공론화 위원회에 대입 개편안 결정을 떠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계에서 만원이 빚발 치면서 선택 과목 수가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당초 개편안에는 과학탐구 선택 과목 수가 4과목이었지만 과학계가 반발하자 8과목으로 늘렸다. 수학 역시 처음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만 포함했지만 수학계에서 비판하자 ‘기하’를 추가해 3과목으로 늘렸다.

교육계에서는 2022년도 수능 대혼란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지금까지는 탐구 영역에서 난도 차이에 따라 ‘복불복’ 현상이 심각했는데, 올해부터는 국어·수학 등 전 과목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올해 수능 채점 결과가 나오면 수험생들 사이에서 유불리 논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세미 기자

한겨레

포스트코로나와 교육

온라인 원격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



박남기
경주교대 교수
(전 총장)

우리나라에 원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있는데 초등학교는 없다. 원격교육은 1972년에 한국 방송통신대학설치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듬해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고등학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에 근거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974년에 개교했으나 방송통신중학교는 2013년에 개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온라인)초등학교는 아직 설치 근거마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방송통신학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진 1970년대 초반, 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었고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었기에 방송통신학교 설치 대상으로 아예 고려조차 되지 못했다. 초·중등교육법(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는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즉, 면제나 유예를 허용하지만 이들의 교육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이제는 여러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에 재학하기 힘들거나 잠시 등교가 어려운 교육약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설립 목적은 교육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 교육격차 해소, 국민 교육 수준 향상, 평생교육 정착 등이다. 원격초등학교는 교육약자에 대한 배려, 단기적·임시적 필요에 부응, 학습부진 학생과 기초학력미달자 지원, 일반 초등교육 지원, 국외 한인학교 지원 차원에서 필요하다.

원격초등학교가 필요한 경우는 많다. 가령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병원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이 더 많다. 이들을 위한 원격초등학교가 국가 혹은 교육청 협의체 차원에서 설치·운영된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소외되는 학생을 줄이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근처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주거비를 제공받고 멀리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 중등학생과 달리 초등학생들이 부모를 떠나서 생활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단기 입원, 부모와 함께 떠나는 단기 체험학습 등 단기적·임시적인 필요에 의해 결석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 그동안에는 별다른 대책 없이 이들을 방치하거나 담임교사 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왔다. 담임과 부모가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등교 뒤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이 초등학생들을 따로 지도해야 하는 교사도 함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담임교사나 교육청의 허락을 받고 원격초등학교에서 필요한 수업을 들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래 흐름의 하나가 될 감염병, 기후급변 등에 따른 재난 상시화 가능성이다.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치더라도 학년별, 교과별, 차시별 수업 자료와 동영상 등이 탑재된 원격초등학교가 설치되어 있고, 접근이 개방되어 있다면 일반 초등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의 필요성이 급부상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일반 초등학교가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졌고, 교사와 학생들도 온라인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 원격교육 관련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개정할 때 시대 흐름에 맞게 원격초등학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초등학교 설치법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새로 설치될 원격초등학교는 기존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는 다른 차원의 디지털 혹은 스마트 초등학교여야 한다. 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만이 아니라 일반 학교의 교사와 학생 모두가 접속하여 원하는 동영상과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이용을 개방해야 한다. 그리하면 일반 초등학교 교사가 거꾸로 수업을 하고자 할 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나 학습부진아를 지도할 때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외 한인학교와 한국 초등교육에 관심을 갖는 세계인에게도 널리 활용되는 명실상부한 케이(K)-초등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어린이 하루 미디어 이용 4시간 ... WHO 권고기준 '4배 이상'

<만 3~4세>

연론진흥재단 미디어이용 조사

만 3~9세 아동 4시간 45분

TV>스마트폰>태블릿PC 순

우리나라 어린이 중 만 3~4세의 경우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이 WHO(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만 3~9세 어린이의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 4대 매체 이용 시간은 284.6분(약 4시간 45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TV 시청 시간이 129.8분(약 2시간 10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스마트폰이 80.9분(약 1시간 21분)으로 두 번째로 길었다. 이어 태블릿 PC 48.3분(약 48분), 컴퓨터 25.6분(약 25분) 등의 순이다. 특히 만 3~4세 어린이



의 경우 미디어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8분으로 WHO의 권고 기준인 하루 1시간을 4배 이상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를 높은 비율로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2.8%의 어린이가 일주일간 스마트폰을 이용했으며 스마트 TV(79.7%), 태블릿 PC(62.6%), 컴퓨터(41.6%), 인공지능 스피커(23.4%) 등의 이용률도 높았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비

율이 78.7%로 조사돼 게임 플랫폼(37.3%), 포털 및 검색 엔진(22.0%), 메신저 서비스(20.4%), SNS(11.9%)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대부분은 유튜브(94.8%)를 이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17.7%), 네이버 TV(6.0%), 아프리카 TV(1.1%), V LIVE(1.1%), 트위치(0.8%)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지만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이용률은 77.1%p차이로 유튜브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보호자들이 아이들에게 TV나 스마트폰 등 미디어를 허용하는 이유는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 및 기분전환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TV의 경우 52.0%, 스마트폰 44.7%가 이 항목에 응답했다.

이외 다른 이유는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하거나 쉬는 동안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 항목의 경우 TV가

46.4%, 스마트폰은 37.0%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보호자의 74.9%는 미디어의 부적절한 언어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무분별한 광고 노출(68.9%)', '콘텐츠의 폭력성(68.0%)', '콘텐츠의 선정성(66.1%)',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55.6%)', '특정계층과 집단에 대한 차별, 비하(54.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 72.3%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3세~만 9세 어린이(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초등학교 1~3학년 재학)의 보호자 2161명을 대상으로 지난 20년 8월 14일부터 10월 13일 두 달간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2.11\%$ 포인트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 중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윤종진 yoon.jj@kado.net

한겨레



인공지능 교육, 골치 아픈 수학을 어찌할까

‘수학과 함께하는 AI 기초’ 교재 화제

올해 2학기부터 인공지능(AI)이 고교 진로 선택과목으로 들어간다.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이다. 또 2025년부터는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교육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 <교육방송>(EBS)에서 낸 교재 하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수학과 함께하는 AI 기초’다. 최윤석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전무가 페이스북을 통해 “EBS가 이렇게 멋진 AI 교육자료를 준비해서 공개했네요”라고 말하는 등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교육방송의 플랫폼 ‘이솜’(esop)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게 했으나, 현장의 요구가 많아 책으로도 출간됐다. 다른 인공지능 관련 책들이 대개 2만5천~3만원인 데 견줘 1만원으로 싸다. 애초 교재 자체가 교육부 지원으로 제작돼 원가를 많이 절감했기 때문이다.

수학과 정보 과목 교사들과 교수 등 모두 5명이 협업해 썼다는 것이 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이다. 대부분의 전문서적을 그 분야 전문가가 쓰던 관행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을 맡고 있는 이들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낸 것이다.

교재를 기획한 고범석 교육방송 소프트

웨어교육팀장은 “인공지능 교육의 큰 문제는 과목 간 장벽”이라며 “올해 2학기부터 고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는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을 각각 정보 과목과 수학 과목 교사들이 가르치게 되는데, 실제 현실은 이 둘을 아우르는 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학적 지식이 없으면 인공지능 교육을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데, 예를 들어 행렬 고교 수학 교육과정에는 행렬이 빠져 있어 학생들이 난관에 부딪치곤 한다”는 것이다. 정보와 수학을 융합한 교재를 만들자고 한 이유다.

이 교재는 1장에서 인공지능의 개념과 활용 영역 등을 알아보고, 2장에서 숫자, 이미지, 소리 데이터 등의 표현과 가공을 다루고 있다. 3장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고흐가 그린 붓꽃은 어떤 종류일까’란 제목으로 이미지 데이터, ‘하기가 내는 소리로 마음을 알 수 있다면’이란 제목으로 소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는 식이다. 부록인 4장은 인공지능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에 대한 소개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8년여 동안 정보 과목 교사로 일했던 고범석 팀장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사안들과 연결해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든 참고서”라고 말했다.

집필에 참여한 김성훈 교수는 “개념보다 문제 해결 기반으로 서술하려 했다”며 “현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 수학 개념이 많은데, 교육과정에 없애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면 제시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나가자고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끼리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 교재는 애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나 교육방송에서 이 교재 강의를 위해 개설한 강좌는 성인들이 많이 수강하고 있다. 세 강좌 중 첫번째인 ‘데이터의 표현과 가공’은 3000여명이 수강했거나 수강하고 있는데, 20대가 32.6%로 가장 많고 다음이 40대 이상(28.4%), 30대(25.0%)였으며 10대는 13.5%를 차지했다.

이 교재를 무료로 내려받고 강의도 들을 수 있는 ‘이솜’은 ‘교육방송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EBS Software Learning Platform)의 약자다. 이솜도 고범석 팀장이 기획해 만들어졌다. 고 팀장은 “이솜은 교재는 물론 강좌까지 제공해 처음 시작하는 이들이 혼자 학습하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각종 교재의 피디에프(PDF) 파일은 물론 소스코드까지 공개해 이를 이용하여 여러 실습을 해볼 수 있다”고 자랑했다.

현재 이솜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해 이 교재 외에도 ‘AI야 놀자’ ‘인공지능 첫걸음—데이터에서 디러닝까지’ ‘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인공지능 이야기’ 등이 있다.

고 팀장은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교육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사회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면 그 바뀌는 세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노인학교에서 스마트폰 지도 앱을 배운 어르신들은 어디에서 갈아타야 하는지 묻지 않고 시간에 맞춰 나갈 수 있는 것에서 보듯 스마트폰 활용도 교육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인공지능 스피커 등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인공지능에 접목돼 있고 스마트폰으로 집안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따라 새로 생기는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인공지능을 아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5년부터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교육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학교 36시간 교육을 의무화할 경우 매주 1시간씩 두 학기나 매주 2시간씩 한 학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정도론 제대로 된 교육이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과정은 제로섬 게임이라 특정 과목 시수가 늘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 시수가 줄어 들어야 하고, 그러면 그 과목 교사 임용도 줄어들게 된다”며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올해 2학기부터 고교 선택과목 채택
2025년부터는 초·중·고교 필수정보와 수학 융합한 교재 만들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해
일상생활과 연결, 인공지능 배워

교육과정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성희롱, 차별,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례를 들며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다”며 “지나치게 상업적으로만 가면 위험하며, 인공지능 윤리 등에

대한 사회적 저변 구조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들 알파고를 보며 인공지능이 엄청 대단하고 완벽하다는 환상이 있다”며 “그러나 인공지능은 아직도 개발 중인 기술이며, 오남용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등 온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글·사진 김인현 객원기자 inhyeon01@gmail.com

2021년 01월 22일 (금)

사회 11면

서울신문

원격수업 그림자 교문 넘어선 학폭

초4~고2 학생들 0.9% 피해 경험
사이버폭력 12.3%… 3.4%p 증가
“비대면 스트레스 해결책 찾아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학
교폭력이 학교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으
로 나타났다.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
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초
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체
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학생의 비율은 0.9%로,
2019년 4월 전수조사 당시 1.6%보다 0.7%
포인트 감소했다. 조사 인원은 약 295만명
으로, 약 2만 7000명이 지난 1년간 학교폭
력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두 차례 실시
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
안해 9월 한 차례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등교 일수가 줄어 학교폭력도 줄었지만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커졌다.
학생들이 응답한 학교폭력 피해를 유형
별로 분류하면 언어폭력(33.6%)과 집단따
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신체폭
력(7.9%)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

학교폭력 피해 경험 현황



면 사이버폭력(3.4% 포인트), 집단따돌림
(2.8% 포인트)의 비중이 커졌다.

중학교 학생들이 경험한 학교폭력 중 사
이버폭력의 비율은 18.1%에 달했다. 학생
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장소 중 ‘학교
안’(64.2%)의 비율은 전년 대비 5.3% 포인
트 줄어든 대신 사이버 공간(9.2%)이 3.8%
포인트 늘어났다. 피해 시간도 ‘하교 이
후’(16.0%)와 ‘기타’(10.3%)의 비율이 각각
1.9% 포인트, 2.8% 포인트 늘었다.

교육부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교육
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교육계에서
는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한다. 한국교원단
체총연합회는 “비대면 상황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이버폭력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 치
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국민일보

심각한 소아·청소년 비만

김포(10)양은 아담 소 성조속측 치면과 광경에서 갈수치(AL.T)가 49 IU/l로 정상 기준(남학생 33, 여학생 25 IU/l)을 훌쩍넘은 김포소와 비만영양평가결과에도 의외였다. 진단 결과 비만증과 고지혈증도 나타났다. 원인은 비만으로 꼽혔다. 키 151cm, 몸무게 62kg인 김포의 체질량지수(BMI·체질량지수) 지방으로 4.1은 값은 27.0로 전체 소아의 99.7%에 해당돼 중증 비만이었다. 소아·청소년 비만 기준은 성인과 달리 BMI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해진다. BMI가 85% 이상에 들면 과체중, 95% 이상이면 비만, 99% 이상이면 중증 비만으로 분류된다.

10살인데 지방간?...비만 ‘합병증’ 앓는 아이들 크게 늘어

비알코올성, 15년 새 44% '폭증'
스스로 인식 못하고 부모들도 방치
고지혈증·당뇨병·간경화 등 고생
코로나로 활동 줄어들면서 더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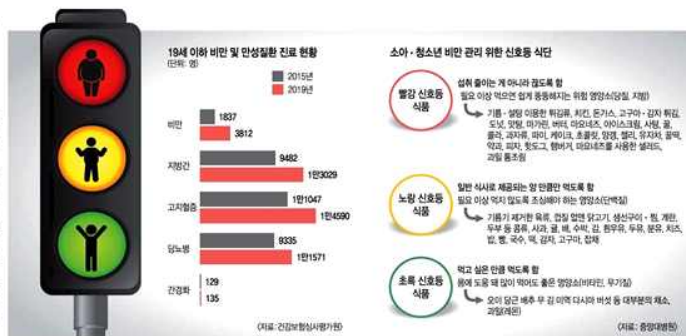
지난해 2월 측정된 김양의 간수치는 18 IU/l로 정상이었다. 불과 1년 만에 심각한 비만으로 간에 합병증까지 초래된 것이다. 김양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나 학원도 못 가고 거의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루 한두 끼는 패스트푸드로 해결한다. 아빠가 저녁 늦게 퇴근하면 함께 치킨 등 배달 음식을 사서 먹기도 한다.

조모(15)군은 열 살 때부터 비만으로 인한 지방간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BMI가 33.4로 상태가 더 나빠졌고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동반됐다. 조군은 지난해 6월부터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

비만으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지방간, 건염과 같은 합병증을 앓는 아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가족이나 신체활동이 적은 아이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 등 바깥활동이 줄면서 온라인 수업·게임 같은 좌식생활과 불규칙한 수면이 일상이 되고 식습관 역시 나빠져 이른바 ‘코로나 비만’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이른 시기에 성인 만성질환을 앓게되는 소아·청소년 비만은 코로나 상황에 서만 볼거진 문제는 아니다. 이전에도 각종 데이터를 통해 곳곳에서 신호가 감지됐다.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대용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만으로 진료받은 19세 이하 환자는 2015년 1837명에서 2019년 3812명으로 4년 새 2.0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19세 지방간 환자는 37.4%(2015년 9482명→1만3029명), 고지혈증은 32%(1만1047명→1만4590명), 당뇨병은 24%(9335명→1만1571



명) 증가했다. 심각한 간질환인 간경화를 앓는 아이들도 5%(129명→135명) 늘었다.

이 교수는 25일 "10세 전 아이들은 비만이란 걸 스스로 잘 알지 못하고 부모들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 오는 아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이 대수차"라면서 "대개는 학교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간에 질환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비만 합병증의 의심돼 의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청소년은 어른처럼 비만으로 돌연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면 합병증에 따른 파해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10대에서 간수치 상승으로 나타나는 지방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박승하 교수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0~19세 448명자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15년 사이(2001~2005년 7.8%→2010~2017년 11.2%) 4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증가폭이 남학생보다 컸다. 같은 기간 비만 유

병률도 7.3%에서 10.6%로 뛰어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박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이 줄지 않는 이상 지방간 유병률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간은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특히 중성지방)이 쌓일 때 진단된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섬유화나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다.

“초1 아동 빈 교실 격리는 훈육 아닌 학대”

대법, 8분간 ‘타임아웃’ 벌 준 교사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지옥탕이라 불린 곳, 아이들에게 공포감 줘 정서 학대 해당”

말을 듣지 않는 7세(만 6세) 아동을 빈 교실에 홀로 약 8분간 격리한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일까, 정서적 학대일까.

아동을 다른 장소로 격리해 생각할 시간을 주는 일명 ‘타임아웃’ 훈육 방식일지라도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준이라면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1학년 학생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학생의 학습에 방해 준다는 이유로 옆 교실에 약 8분 동안 혼자 있도록 했다. B군이 격리된 곳은 아이들이 ‘지옥탕’이라고 부르던 곳이었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가 훈육인지 학대인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아동을 다른 장소로 격리해 생각할 시간을 주는 타임아웃 방식의 훈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옥탕이라는 명칭도 쟁점이 됐다. A씨는 “동화책의 이름을 따서 별명을 붙인 것일 뿐 무서운 공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유



죄로 인정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 남짓 한 아동을 교사의 시야에 닿지 않는 공간에 격리하는 행위는 아동에게 공포감을 주고, 아동이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적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른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혼자 격리된 B군을 보고 본래 교실로 데려간 점을 감안하면 A씨가 위험이 있는 곳에 아이를 방치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지옥탕이라는 명칭이 동화책에서 따온 것이라고 보이기에는 하나, 단어 자체로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라며 “피해 아동은 지옥탕에 대해 ‘무섭다’는 취지로 말했고, 같은 학급 다른 학생들도 또한 지옥탕은 ‘혼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훈육 방식이 학칙이 정한 기준을 넘어선 정도 유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A씨 학교가 허용하는 격리방식 훈육은 같은 교실 내 격리에 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육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학부모 연락처를 이용해 학부모 23명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탄원서를 써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이용 행위”라

며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A씨가 이 사건을 부모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이게 뭐 풀이나, 네가 그러니까 뭐라고 한 것 아니냐”며 B군을 다그친 점도 지적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고, 대법원도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아이를 ‘생각의자’에 일정 시간 앉아 있게 하는 방식 등으로 행해지는 타임아웃은 체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널리 활용되는데, 이런 훈육 방식 역시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라면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지난해 3월에도 대법원은 4세 아동을 78cm 높이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놓은 보육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라고 인정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東亞日報

“동영상만 틀어주니 자꾸 딴짓... 원격수업도 쌤이 직접 해주세요”



준비 안된 ‘코로나 등교’

〈上〉 초·중·고생 30명에 물어보니

“오전 9시 출석 체크후 다시 잠자리 1년 지나도록 교과서 너무 깨끗 퀴즈 자주 내면 집중도 올라갈것 등교해도 수행평가만 하다 끝나 대화 못해 친구 없는게 아쉬워”

“한 40점, 50점 땀까지 흘려서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중학교 3학년 김영운(이하 가명·경기 성남시)군이 지난해 자신의 학교생활을 평가한 점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지난해 모든 학생은 원격과 등교 수업을 번갈아 받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반복되면서 등교는 ‘풍당풍당’이었다.

영운이는 “솔직히 원격수업은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 털어놨다. 일부 과목의 줌(ZOOM) 수업이 시작됐지만 너무 자주 끊겼다. 영운이 컴퓨터의 문제가 아니었다. 며칠 지나자 차라리 “카메라 안 돼요”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 대신 컴퓨터로 ‘롤(LOL·인터넷 게임 종류)’에 몰두했다. 영운이는 자신이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말했다. “아침에 간신히 출석 체크만 하고 자는 친구가 수도북해요. 원격수업 때 혼자 문제 풀어서치고 나가는 친구도 있지만, 아직 중3 1학기에 배우는 ‘근의 공식’도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교육부는 26일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초

등학교 저학년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해와 같은 유형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수업의 질이나 학사 운영의 안정성은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한, 단순히 등교일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1년 동안 쌓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초·중·고교생 30명을 전화로 인터뷰해 1년간 겪은 ‘코로나 학교’의 실태와 신학기에 바라는 수업에 대해 들어왔다.

● “원격수업, 선생님이 직접 해주세요”

학생들이 한목소리를 낸 건 교사가 원격수업을 직접 해달라는 요구였다. 중2 안진하 양(서울 서초구)은 “지난해 2학기 때도 수업의 70%가 기존 인터넷 강의(인강) 대체였다”며 “인강은 내가 (사교육) 결제해서도 듣는데 이럴 거면 학교 수업 왜 듣나 싶었다”고 말했다.

중2 윤규영 군(서울 양천구) 역시 “시험 한 주 전까지도 EBS만 틀어준 과학 ‘ 쌤’한테 정말 실망했다. EBS만 보고 어떻게 시험을 치느냐. 학원에서 배운 걸로 시험 봤다”고 하소연했다.

원격수업이 학력 저하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학생들의 ‘증언’도 쏟아졌다. 초4 최수진 양(경기 파주시)은 “나는 집에서 엄마하고 문제집을 풀면서 그래도 수업을 이해했는데 친구 중에는 1년이 지나도 교과서가 완전히 깨끗한 경우도 많았다”며 “그런데 이걸 딱히 걱정하는 친구도 없었다”고 전했다.

● “원격수업 때 퀴즈나 숙제 필수!”

학생들은 신학기 원격수업 때 교사들의 ‘감시’를 원했다. 등교수업 때는 구속으로 느껴졌지만 지난해 원격수업으로 학습 리듬이 장기간 깨졌다 보니 스스로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서울 마포구 고2 임영일 군은 “자율학습도 줌으로 하면서 선생님이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일부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줌 자습’이 이뤄지고 있다.

초등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아침 9시에 등교를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원격수업 때도 선생님이 그 전에 일어났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서울 서대문구·초5·손서진 양) 등의 요청이 대표적이다.

중2 권은진 양(서울 서초구)은 “1교시부터 학교 시간표대로 반드시 원격수업을 듣게 하고, 그때그때 퀴즈를 봐야지 친구들이 집중해서 본다”고 강조했다. 중2 정수진 양(서울 양천구)은 “원격수업 때는 선생님이 퀴즈도 하고 숙제도 내줘야 제대로 ‘내 것’이 된다. 안 그러면 틀어놓고 학원 숙제하거나 딴짓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등교수업은 ‘학교 갈 맛’ 나게”

등교일수가 늘어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쉬는 시간이 5분으로 줄고 이야기를 못 하게 해서 친해진 친구가 없어요”(대전 서구·초6·최가은 양) 등 주로 초등생들이다. “원격수업을 한 지난해 교우관계는 최악이었지만, 어차피 공부만 하면 돼 불편하지 않았다”고 한 고2 백기영 군(서울 송파구) 같은 답변이 중고교생에게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컸다.

몇 번 안 가는 등교수업 때 수행평가만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울산 남구 초3 신서을 양은 “친구들 모두 등교수업 때면 ‘도 수행평가 해요?’라고 싫어했다”고 말했다. 이진아 양(전남 장성군·초4)은 “원격수업 때 대화를 잘 못 하니 등교수업 때라도 공부보다 피구나 축구, 이벤트 등 놀이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이소정 기자

교실선 암전하던 애도 온라인선 욕설... 채팅방은 출구없는 감옥

“그거 아세요? 빛 한 줄 보이지 않고
몸 한 뼨 가눌 수 없는 공간에 갇힌 기분
을...” (사이버불링 피해학생)

지난해 10월 서울 소재 중3 학생
A(15)양은 ‘에스크’라는 애플리케이션
(앱)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에스크 앱
은 페이스 북 계정과 연동된 익명 질문 게
시판으로 상대에게 질문하는 사람의 익
명성이 보장되지만, 질문을 받는 사람은
질문자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A양은 에스크 앱에서 다른 애들 뒷담화
하고 다니는 ‘X’ 같은 반 친구 남자 친구
빠졌고 다니는 ‘X’ 등 자살을 겨냥한 댓
글을 발견했다. 댓글 내용이 알려지면서
A양 학교 학생들에게 해당 게시물은 꼭
방문해야 하는 곳이 돼 버렸다.

A양은 댓글 내용을 통해 B(15)양이 글
을 올렸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B양의 처
별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바가 해
외에 있어 추적이 어렵다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문제를 해결하
라며 A양을 돌려보냈다. 학폭위 역시 마
찬가지였다. 가해학생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사할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
다. 좌절한 A양은 다시 외부에 피해사실
을 알리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고립된 A양은 이후에도 끊임
없이 또래들의 욕설에 시달렸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이 날로 기승을 부
리는 가운데, 최근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피해학생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불링이란 온라인에서 특정인
을 대상으로 집단적 지속적인 폭력으로
모욕·따돌림·협박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사
이버불링의 개념조차 명확히 규정하고 있
지 않아, 해결책을 찾기 못한 일부 청소년
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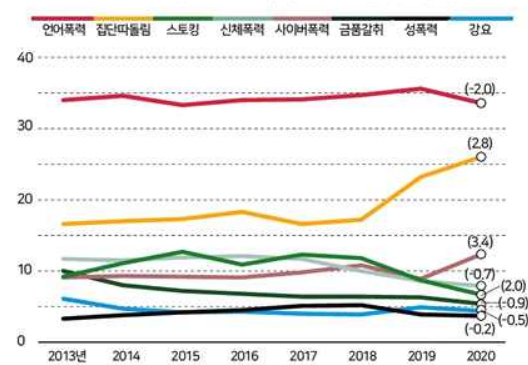
방과 후에도 이어진 가해 행위

한국일보가 청소년폭력 예방 전문기
관(NGO)인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
예방재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
면 지난해 사이버 폭력피해로 상담이 접
수된 건수는 550건으로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신체폭력 상담
접수는 300건 감소했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에서도 사이버 폭력은 전년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일수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유형별 응답률

●단위 % (괄호 안은 2019년 대비 증감 %p)

●자료 교육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초·중·고) 전체 학생 대상으로 2020년 9월 14일~10월 23일 조사



도래 사이 규칙에 취약한 청소년
메시지 이용한 괴롭힘 쉽게 동조
방관자 줄고 가해자 다수로 늘며
피해자 고통 오프라인보다 커져

사이버 폭력 피해 1년 새 두 배로
“메신저 안 하면 되지” 성인 인식
학생들 피해 신고 주저하게 해
“폭력 개념 정의하고 인식교육을”

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사이버 폭력만큼
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성폭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견
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
감한 장혜린(가명·16)양 역시 코로나19
로 등교한 날이 많지 않았다. 장양이 다
녔던 학교 측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을 병행한 탓에 장양이 학교에 나온 날
은 보름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학
교 3학년이던 2019년 11월 두 살 많은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장양은
지난해 고교에 진학한 뒤 페이스 북 단체
채팅방에서 강한 피해 사실이 언급되는
등 또래들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2차 피
해를 입었다.

장양에게 가해진 폭력처럼 청소년 사
이버불링은 익명성 보장이 안 돼 심각성
이 더하다.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카카오톡, 페이스 북 메시지, 라
인 등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
해 학생은 단체 채팅방에서 또 다른 교

실을 참조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가해자에 동조 쉬워 피해자 고통 커

서명률(가명·15)양은 수업시간 중 교
사에게 급급한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질문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학교가 끝나면 사연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진동이 울렸다. 교실에서 괴롭
혔던 두세 명 학생뿐만 아니라 평소 얹친
했던 친구들까지 가세해 채팅방에서 욕
설을 쏟아 냈다. 학기 내내 사이버불링
에 시달린 사연은 극단적 선택 충동에 휩
싸인 나머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다. 심홍진 정보통신정책연구위원은
“교실에서 핵심 가해자를 제외한 학생들
은 피해자를 괴롭히는 데 적극 나서지 않
지만, 채팅방 같은 공간에선 ‘또래 압력
(Peer Pressure)’에 취약해 대다수 학생
들이 가해자 행동에 동조하기 쉽다”고 말
했다. 한 명의 피해자와 다수의 가해자만
이 남게 돼 피해 학생이 느끼는 고통은 교
실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이버불링 수법이 날로 진화
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은 제대로 대처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C(14)군은
같은 반 친구 8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상태로 성적 행위
를 하도록 보이게끔 하는 ‘지인능욕’ 피
해를 당했다. 하지만 답임 교사는 C군
의 피해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 기존의
사이버 폭력 유형으로 분류됐던 △때가
(피해학생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욕설

을 퍼붓는 행위) △방곡(피해학생만 남
겨두고 단체 채팅방에 나가버리는 행위)
△카톡유령(단체 채팅방에서 모두가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등
과는 다른 유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
다. 이선영 푸른나무재단 상담팀장은
“과거 ‘카톡갈취(피해학생을 채팅방으
로 계속 초대해 괴롭힌 행위)’이 사이버
불링의 상징이 되면서 초대 거부 기능이
생겼지만, ‘와이프이셔틀(스마트폰 데
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강제 가입하게 해
와이프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지인
능욕’ 등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은 한참이 지나서야
새로운 유형의 괴롭힘을 사이버 불링으
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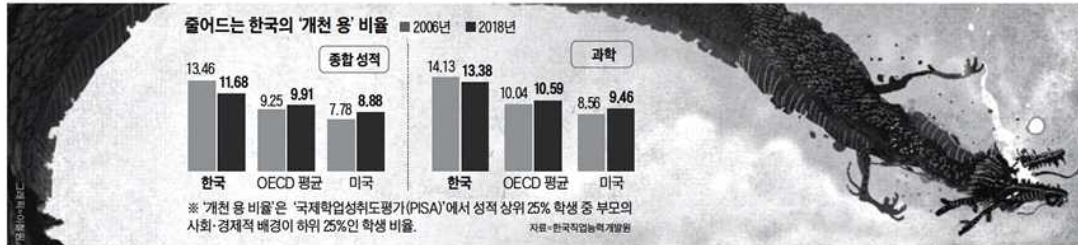
인식 부족해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사이버불링 피해자들은 죽고 싶다고
호소할 정도로 괴로움을 토로하지만,
아들을 보호해 줄 제도적 울타리는 사
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교육부여성가족
부·경찰청이 운영하는 117 청소년 사이
버상담센터인 1388, 피해 청소년들을 지
원하는 위센터위원들 등이 있지만, 어
른들의 이해도가 떨어져 피해 학생들이
신고 및 상담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성추행 피해 뒤 또래 채팅방에
서 2차 피해를 겪은 D(17)양은 피해사실
을 담임 교사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평소
교사와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은 탓에 보
습학원 강사의 도움을 받아 겨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김보성 NIA 연구위원
은 “학교에선 사이버불링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상인이 되기 위한 통과의
레 꾀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
했다. 해결책을 찾기 못한 일부 학생들은
상처를 간직한 채 또래들로부터 점점 고
립된다. 이선영 팀장은 “부모들은 스마트
폰을 보지 않으면 피해가 아닐 것으로 생
각하지만, 사이버 공간 단절은 청소년들
에게 사회적 죽음과 같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불링의 개념부터
명확히 규정돼야 제대로 된 예방책이 마
련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청소년 사이
버폭력 대응 프로그램’을 집필한 조정문
전 NIA 수석연구원은 “개념 정의와 지
속적인 인식교육을 통해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폭력임을 학생들에게 깨닫게 하
고,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 눈높이에
서 문제를 봐야 해결책이 보인다”고 강
조했다. 김연호 기자

‘개천용’ 미국선 느는데, 한국선 사라진다



4개국 학생성적·집안형편 보니

‘가난한집 우등생’ 2018년 11.7%
2006년 13.5%에서 1.8%p 줄어
고소득층 사교육비는 월 54만원
저소득층 월 10만원과 5배 격차
“부모 경제적지위 대물림 더 심화”

‘개천용’이 사라져 가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개천용’을 가능하게 했던 교육이란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PISA를 활용한 국가별·시점별 교육 형평성 측정방안 연구’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성적 상위 25% 학생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위 25%인 학생들’, 즉 ‘개천용’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PISA는 전 세계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과목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년마다 주

관한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우리나라 6876명을 포함, 79국 출신 60만명이 참가했다.

◇개천용 줄어든 건 한국뿐

황 위원은 2006년과 2018년 PISA에서 한국, 미국, 스웨덴, 일본 등 4국 학생 성적과 집안 형편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의 ‘개천용’ 비율은 2006년 13.46%에서 2018년 11.68%로 1.8%p포인트 줄었다. 일본(11.85→9.89)과 스웨덴(10.66→9.94)도 줄었지만, 미국(7.78→8.88)과 OECD 평균(9.25→9.91)은 높아졌다. 과목별로 따지면 읽기(15.29→12.97%), 수학(12.02→10.79%), 과학(14.13→13.38%) 등에서 ‘개천용’들이 줄었다.

성적이 최상위권인 상위 4% 이내에서도 한국의 ‘개천용’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위 25%)인 학생들은 2006년 7.5%에서 2018년 6.39%로 역시 줄고 있었다. 특히 과학을 잘하는 학생 중 ‘개천용’ 비율은 2006년 12.09%에서 2018년 6.14%로 폭락했다. ‘개천용 실종 사건’은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다는 게 문제다. 조사 대상 4국 중 읽기, 수학, 과학 등 전 과목에서 개천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든 국가는 우리뿐이다.

◇소득 따라 벌어지는 사교육비 격차

교육계에서는 이렇게 개천용이 줄어드는 것은 학업 성적과 대학 입시가 부모의 경제력·정보력과 깊게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지난해 교육부 사교육비 조사에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1인당 사교육비는 53만9000원으로,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10만4000원)의 5배를 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6년 조사에서 아버지가 대졸 이상 고학력자일 때 자식도 고학력인 비율은 산업화 세대(1940~1959년생) 64%, 민주화 세대(1960~1974년생) 79.7%, 정보화 세대(1975~1995년생) 89.6% 등으로, 갈수록 세습 고리가 굳건해지고 있었다.

코로나 사태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에 제대로 못 가는 동안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학력 격차가 더 커진

다는 것이다. 영국 국립교육연구재단이 작년 7월 초·중학교 2200곳의 교사 3000명에게 물었더니, 코로나로 원격 수업이 시작된 후 아이들 학습 수준이 예년보다 3개월가량 뒤쳐졌고, 특히 가난한 지역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 아이들의 학력 격차가 46% 더 커졌다고 대답했다.

◇“재능보다 집안 배경이 성공에 중요”

계층 이동 가능성을 믿는 국민들도 갈수록 줄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에서 ‘자식 세대에서 일생 노력을 다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09년 48.3%에서 2019년 28.9%로 현저히 낮아졌다. 조사팀은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한 젊은이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을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성수 위원은 “과거 우리 사회의 거의 유일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이 제 역할을 못 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김연주 기자

줌맘 “원격수업 부실” 교사 “감시받는 느낌”

(zoom mom)

줌맘에 떠는 선생님들 A1면에서 계속

익명을 요구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작년 2학기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원격 수업 도중 화면을 끈 학생에게 “왜 화면을 켜느냐”고 했는데, 갑자기 학부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아이가 제 휴대전화로 화상 수업에 참여하는데, 급히 전화 쓸 일이 있어서 카메라를 켜어요. 이걸 가지고 아이를 혼내시면 어떻게 해요?” 해당 교사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학부모에게서 항의를 받으니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카메라 속 학생 옆에 숨은 엄마가 영신경 쓰인다는 것이 교사들 얘기다. 한 초등학교 교사 박모씨는 “영어 수업 중 선생님이 ‘How are you?(잘 지내니?)’라고 물으면, 옆에서 부모님이 ‘I’m fine(잘 지내)’라고 말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며 “하나의 과제를 두고도 어떤 학부모는 너무 쉽다고, 다른 학부모는 너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민원을 넣는다”



화상으로 “How are you?” 문자 옆의 엄마가 “I’m fine 이라고 해 자녀 지켜보며 도와주는 ‘줌맘’에 교사들 “원격수업 확대가 두렵다” 신학기 앞두고 새 갈등 요소로

고 했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가끔 특정 학생 옆에 학부모님 손이나 팔이 놓여 있을 때가 있다”며 “부모님은 학생 옆에서 지도하려는 것이겠지만, 교사 입장에선 압박감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이모(43)씨는 “수업을 간신히 시작하고 나면

학생들 마이크를 통해 어머니의 설거지 소리, 심지어 동생 혼내는 소리까지 들린다”며 “수업 도중에도 수시로 자녀에게 사과, 간식 같은 걸 갖다주시니 수업 통제가 잘 안 된다”고 했다.

학부모들도 할 말은 있다. “선생님의 화상 수업 적응도에 따라 수업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초등학생 학부모 강모(38)씨는 “화상 수업을 지켜보니 담임선생님이 1주일에 두 번, 하루 1시간만 쌍방향 원격 수업을 하더라”며 “국어·수학·사회를 20분씩 쪼개서 설명하는데, 역자로 시간만 맞추려 안 하느니만 못한 원격 수업을 하는 것 같아 솔직히 실망했다”고 했다. 서울 한 공립 초등학교 3학년생 학부모인 이모(37)씨는 “사립초는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화상 수업을 일찍 시작하고 수업 질도 좋더라”며 “공립 초교는 2학기 들어서야 쌍방향 화상 수업을 처음 시작했고 수업 수준도 차이가 나다 보니, 답답한 학부모 입장에서 참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원격 화상 수업에 실망한 학부모들의 교사 불신(不信)은 커져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작년 원격 수업 관련 온라인 기사 6건에 달린 댓글 972건을 분석한 결과, 교사에 대한 불만이 작년 1학기 5.4%에서 2학기엔 27.7%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부실한 수업을 할 거면 월급을 반납해야 한다” “교사들이 실력보다 장비 탓만 한다”는 식이다.

교육부는 쌍방향 소통형 ‘화상 수업’을 계속 늘려가면서 수업 수준을 점차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작년 전국 각 학교에 쌍방향 수업 비율을 늘리라고 권고해, 1학기 14.8% 수준이었던 쌍방향 수업 비율은 2학기에 55.7%로 경증 뛰었다. 올해도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부모에게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니 수업을 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교사들끼리 좋은 자료를 공유하고, 화상 수업에 맞는 체계를 갖추는 등 교사의 여건과 학부모 간 기대치를 맞춰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朝鮮日報

“교무실 청소는 학생 인권침해”

인권위 “자발적 봉사에 맡겨야”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무실 청소 시키는 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작년 대전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이 제기한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8일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자유행동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교에 “학생들의 비자발적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 학교는 ‘교무실 청소’가 “교육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학생들이 청소에 참여하면서 쾌적한 교육 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대전 지역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 조사한 결과, 해당 학교들은 “교무실은 교사와 학생의 공유 공간이라서” “봉사 정신 함양을 위해” 등의 이유를 댔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

교가 학생에게 청소를 지도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학생들이 주로 쓰는) 교실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등을 사용 후 뒷정리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교무실 청소까지 의무로 시키는 것은 교육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꼭 교무실 청소를 시키려면 “학생들의 자발적 신청이나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게 인권위의 의견이다.

교사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강원도 홍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31)씨는 “인권위 결정으로 학생들에게 이타심을 심어줄 기회가 줄어들까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서울 광진구의 중학교 교사 최모(54)씨는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은 우리가 치우는 게 맞는다”고 했다.

학생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교무실 청소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런 판단이 나왔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김영준 기자

국민일보

인권 침해 신고 의무화·훈련시설에 CCTV... 체육계 달라질까



참여연대, 시민사회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종로의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라이애슬론 고(故) 최속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있다. **김민**

‘최속현법’ 19일부터 시행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권한 강화
폭력 지도자 최대 5년 자격 정지

지난해 고(故) 최속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최속현법’이 시행된다. 2019년 빙상계 성폭력 사건과 최 선수 사건, 최근 프로배구 학교폭력 전력 선수 논란에서처럼 끊이지 않는 체육계 폭력 사태가 이번 법 시행으로 개선될지가 관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가 뼈대를 이루고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훈련시설에 CCTV 설치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체육인들에게 인권 침해나 비리 관련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부분이다. 주변 동료나 지도자가 보복·파장을 염려해 침묵해온 일이 재발하

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다만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법에 명시해 관계자들이 보다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자는 기존에 법률에 규정된 공익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정보가 공개되거나 보도, 누설돼선 안 된다. 위반 시 문체부장관이 시정조치나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센터는 신고를 받는 즉시 신고자와 피해자를 긴급보호 등 보호조치해야 한다. 현 26명인 센터 인력은 올해 안에 40명까지 확충하고 지역사무소도 3곳을 개설한다. 필요시 감·경이나 교육부·여성가족부 등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센터에는 조사 권한이 강하게 부여된다. 조사를 받는 이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법적 의무가 주어졌다. 정당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기피하면 문체부장관이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센터는 직권 조사는 물론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권한도 가진다. 조사가 늘어지는 걸 막기 위해 접수일부

터 30일 이내 조사에 착수해 최대 120일 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상을 선정해 올해 전반기 중 인권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는 매년 시행할 계획”이라며 “신고 상담 방법 등 교육을 하반기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 선수 주요 가해자인 치료사 안모 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지도자 아닌 선수관리담당자도 체육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부정·비위를 저지르면 최대 5년까지 자격 정지된다. 지도자를 채용하려면 징계 이력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비위 체육지도자와 단체 임직원은 대외공개된다. 3차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9일부터는 지도자 자격 정지·취소를 심의하는 자격운영위원회가 문체부에 설치된다. 조효석 기자

2025년 고교도 대학처럼 과목 선택...학점 못 따면 졸업 못해

(초등 6학년 해당)

(192학점)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운영 체계

도입 일정안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년
도입 준비기	특성학교 도입	전체 고교			
마이스터고	일반계고 부분 도입	본격 시행			
도입		(선택생부담)			

학업성취도에 따른 성취등급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90% 미만	B
70% 이상~80% 미만	C
60% 이상~70% 미만	D
60% 미만	E
40% 이상~60% 미만	E 1(미이수)
40% 미만	I 1(미이수)

내신 성적 산출 방식 변화(보통 고교)

현재(2019년 이후)	향후(2025년 이후)
교과 성적 산출 (A,B,C,D,E)	교과 성적 산출 (A,B,C,D,E)
과목 성적 등급 평가	과목 성적 등급 평가
전공 성적 (A,B,C)	전공 성적 (A,B,C,D,E)
과목 성적 (A,B,C)	과목 성적 (A,B,C,D,E)

* '체육·예술'은 성취도 3단계 외 모두 미이수
* '교양'은 E(미이수) 외 모두 미이수(현행 방식 유지)

주요 내용

- 1학년에 공통과목 중심으로 수강, 2학년 이후 본격적으로 선택과목 수강
-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 수강 가능
-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을 28학점으로 규정
- 공통과목은 성취도(A, B, C, D, E, I)와 석차가 성적표에 병기, 선택과목은 성취도만 표기

과목 이수 기준

-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성취도 A, B, C, D, E, I 중 C)

졸업 요건

- 3년간 192학점 취득(50분에 1학점, 한 학기에 16회)

자료 교육부



국·영·수·한국사 등 빼곤 직접 선택 과목 성취율 40% 미만엔 '미이수' 학기당 필수학점 뒤 조기졸업 제한 절대평가 전환, 대입 큰 변화 예상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국 고등학교에 도입된다. 올해 초등 6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다. 출석 이수만 채우면 되는 지금과 달리 정해진 학점을 따라야 졸업할 수 있다. 학생은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시간표를 짜게 된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선 고교에서 학점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뒤 2025년 전국 고교에 적용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마이스터고에서 학점제를 운영해 왔다.

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대폭 넓어지는 동시에 졸업 요건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국·영·수·한국사 등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모두 학생이 직접 선택한다.

학교는 수요 조사와 설명회를 통해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은 수강신청을 통해 수업시간표를 짜는 방식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기존에 없던 '국제경제'나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과목도 개설할 수 있다. 교육부는 1학년 때 공통과목을 배우며 진로를 탐색하고 2학년 이후 본격적인 과목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는 출석일수 3분의 2 이상이면 졸업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학점을 이수하는 조건까지 추가된 것이다. 각 과목은 학업 성취율이 40% 미만이면 미이수(Incomplete)를 의미하는 I학점을 받는다. I학점이 많아 3년간 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늦춰질 수 있다.

미이수자들은 방과후나 방학 중에 별도 과제나 보충수업을 하는 '보충 이수'를 통해 학점을 딸 수 있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3년 안에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나올 수 있지만 온·오프라인 보충 이수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처럼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다음 학기·학년



정해진 학점을 따라만 졸업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도입된다고 17일 교육부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한 고교의 수업 모습. [중앙포토]

에 다시 듣는 '재수강'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반대로 수업을 몰아서 듣는 것은 가능할까. 교육부는 "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조기졸업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3년간 균형있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학기당 최소 28학점 이상을 이수도록 정할 계획이다.

내신 성적은 전 과목 절대평가(성취평가제)로 적용된다. 다른 학생과 비교해 등급이 매겨지는 상대평가와 달리 절대평가는 정해진 점수 이상이면 같

은 등급을 받는다. 다만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공통과목은 지금처럼 학생부에 절대평가 성적과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한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 성적의 활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절대평가로 모두 전환하면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통과목은 선택의 유불리가 없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대학입시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현재의 수시·정시 체제가 사라진다거나 '서울형 수능'의 도입 등을 예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진로와 적성을 존중하고 미래 교육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개별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 관건이다. 김해립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장은 "현두 명만 신청한 과목은 개설이 어렵지만 시범학교 사례를 보면 서너 명만으로도 운영하는 과목도 있었다"고 말했다.

남윤서·전민희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서울신문

재택 사교육 vs 디지털 중독... 경제력 따른 교육 편차 더 커져

2021 **격차**가 **재난**이다

〈2〉 코로나가 바꾼 성장기

강남권 과외 특수로 학습 공백 몰라
'집콕' 저소득층은 성적 하위권 하락

서울 서초구에서 전문적으로 수학 과외를 하는 윤미경(가명)씨는 지난해부터 유례 없는 '코로나19 특수'를 체감하고 있다. 강남의 중학생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나 있는 그에게 '우리 애도 맡아 달라'는 부탁이 빗발쳤다. 그의 1대1 과외 시간표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고급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쏘뿔고 짜여 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홀로 방치되는 저소득층 아이들과 다양한 사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습 공백을 해소하는 고소득층 아이들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홍성용 한양대 겸임교수·미술작가 재능기부

코로나 이전의 윤씨는 방과 후나 방학 기간에만 과외를 맡았다. 초·중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후부터 학기 중 과외 수요가 크게 늘었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학교 출석체크만 하고 수학 수업은 윤씨에게 들

는다. 선행 진도는 학교를 다닐 때보다 시간 투자 대비 초고속이다.

윤씨는 지난해 19일 인터뷰에서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은 구체적이다. 중학교 2학년생 엄마가 '애가 고1 과정까지 학원에서 선행을 마쳤으니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고3 과정을 마쳐 달라'고 하면 이에 따라 재택 교육 일정을 정한다"며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과목과 과목을 압축적으로 선행할 기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고액 컨설팅과 과외를 마다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코로나로 인한 교육 공백을 만회하고자 사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면서 '사교육 중독' 수준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고혜지기자 hiko@seoul.co.kr

▶ 2면에 계속/관련기사 89면

서울신문

2021년 02월 18일 (목)

종합 02면

1면에서 **사교육 선행 vs 디지털 중독**
경제력 따른 교육 편차 더 커져

A국제중학교에 다니는 김재석(15·가명)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였던 지난해 12월부터 대치동 유명 수학강사로부터 재택 과외를 받고 있다. 김군이 학원을 찾아가 받던 소수정예 수업이 집으로 공간 이동한 것뿐이다. 학교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됐는데도 김군은 학습 공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학교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코로나 현실에서 부모의 경제력은 곧 '교육 환경'이 됐다. 반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구심점이 없는 학교와 가정에서 빠르게 이탈된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오동준(13·가명)군은 온라인 수업조차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 코로나 이전 중위권 수준이던 오군의 성적은 디지털 중독 징후로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등교하지 않는 날이 잦아지면서 밤새 스마트폰을 붙잡고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침대 밖으로 좀처럼 나가지 않는다. 재작년 아버지가 암으로 숨진 후 오군은 중·고등학생인 누나, 형과 사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이다.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오군은 침대에 반쯤 누운 채로 "생존기를 찍는 유튜브가 되거나 몸 쓰는 일을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해 7월 초·중·고 학생 2만 10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상황이 '상'인 학생은 '온라인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학습하는 '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6.2%였다. 반면 경제적 상황이 '하'인 학생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22.6%에 달했다. 한승환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 기능이 축소된 후 집이라는 공간과 돌봄자 여부 등 가정환경이 과거보다 학생 간 편차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평가기준 소급적용, 재량권 남용”

〈승문고·신일고·경희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안산동산고〉

자사고 7곳 지위 회복 가능성

해운대고 이어 배재고·세화고도 승소

법원 “학교에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 가해”

교육부 운영성과 평가지표 무력화 논란

조희연 “공교육 정상화 시민 열망 외면”

자사고 존폐는 결국 헌법재판소서 결정

18일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배재고와 세화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교육당국이 자사고 평가 기준을 갑자기 바꾼 뒤 소급 적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1심 선고를 앞둔 나머지 7개 자사고들이 줄줄이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사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이날 배재고와 세화고가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위 박탈과 일반고 전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 자사고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 평가 때 교육청 재량지표와 ‘감사·지적사례’ 평가 지표 등 여러 지표와 기준에 중대한 변경을 가했다”면서 “평가대상 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한 뒤, (두 자사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한 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평가대상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였는데 교육청이 자사고에 평가계획안을 안내한 건 2018년 11월이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은 대상 학교에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산지법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재운 세화고 교장은 판결 직후 “교육정책에 맞춰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평가를 통해 취소 처분을 한 건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해운대고에 이어 두 서울 자사고가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승문고·신일고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희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의 경우 지난해 9월 1심에서 종결됐으나 아직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 안산동산고의 경우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간 교육당국이 진행해 온 자사고 및 특수목적 중·고교 운영성과평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

서울시교육청	법원
“교육부 2015년, 2018년, 2019년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마련”	“교육부가 산하 시도교육청에 시달린 내부자료로 원고에 통지·공개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시교육청 주요 업무계획, 학교업무 정상화 매뉴얼 등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교육청이 지향하는 학교 운영을 위한 정책 실현에 관한 자료가거나 일반적인 학교 운영 지원하는 업무표준안에 불과”
“재량지표, 감사 및 지적사항, 평가배점의 조절 모두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청의 재량 범위에 있음”	“교육청이 공표하지 않은 평가기준을 예측해 운영할 것을 기대하는 건 자의적 평가기준을 수립한 것과 다름 없음”
“자사고가 실제 일반고와 교육과정에서 큰 차이 없이 운영되고 우수학생 선정하는 등 고교서열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부작용 발생”	“변경된 교육정책 방향 하에 평가기준 수정·설계하여 학교법인에 그러한 운영을 유도해야 함”

자체를 무력화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자사고와 특수목적 중·고교가 지정된 뒤 5년 주기로 운영성과 평가를 해 왔다. 평가 직전 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평가지표 표준안을 마련한 뒤, 각 교육청이 최종 평가지표를 확정한다. 자사고가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1주기 평가(2014·2015년)에서는 재정과 시설 등 교육 여건에, 2주기(2019년) 평가 때는 교육의 다양성과 사학의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9년 평가지표는 교육부의 공통 표준안(88점)과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 지표(12점)로 구성됐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2014년 평가지표를 거의 그대로 유지했으며 신설되거나 배점이 확대된 지표들은 자사고의 설립 취지나 사학의 공공성, 교육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등과 연관돼 학교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시험 범위(전반적인 평가 기준)뿐 아니라 시험문제(평가 지표)까지 미리 알려 줘야 한다는 것인데 자사고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자 고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적 열망을 무위로 돌리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른 소송에서는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두 자사고는 한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자사고 존폐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게 된다.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기본권의 침해라며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만나리기자 mm1082@seoul.co.kr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학부모가 문자폭탄·소송... 학폭 담당교사는 읍니다

호랑이 학생주임 엿말 A1면에서 계속

서울의 한 중학교 박모(60) 교감은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를 마음대로 지명할 권한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간신히 한 교사에게 생활지도부장을 맡겼다. 각 학교 교장·교감들은 "학교 폭력 담당자 한번 뽑으려면 교사들에게 읍소도 하고, 결국 안 되면 해당 교력이 있는 다른 학교 교사를 모셔오거나 한 학기씩 나눠 '생활지도부장 할부제'를 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생활지도부장 맡기를 꺼리는 이유는 학교 폭력이 점차 더 교묘하게 진화(進化)해 관리가 쉽지 않은 데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학부모가 격렬한 항의를 넘어 소송으로까지 위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3년간 생활지도부장을 맡았던 중학교 교사 김모(41)씨는 작년 한 가해 학생 부모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 분량만 400장이 넘었다. 그는 고소 대응을 위해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받고,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소량씩 한가득 준비해 수개월 동안 경찰서를 들락거려야 했다. 김씨는 "가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 변호사를 동원해 학교를 경찰에 고소하거나 인권위에 제소하는 경우도 많다"며 "생활지도 담당 교사 중에는 공황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거나 견디다 못해 휴직하는 사람들도 허다하다"고 했다.

8년간 생활지도부장을 했던 서울 한 중학교 교사 박모(58)씨는 "반 친구들이 자신만 파들린 채 뒷담화를 한다고 주장한 한 여학생의 아버지는 30통 넘는 '문자 폭탄'을 보내고, 아예 한 달간 휴직을 하고 새벽 5시부터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기도 했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해당 학생의 피해망상이었다"고 했다. 생활지도부장 등 학교 폭력 담당 업무를 하는 교사 1400여 명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서로의 고충을 토로하며 조언을 주고받는다. 대화방에는 "내가 교사



가해자측이 없던 일로 만들려고 고소하거나 인권위 제소 '공격' 공황장애 치료, 휴직하는 교사도 교권침해 피해 보험까지 가입
기간제 교사에 업무 떠넘기기

인지, 수사관인지,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는 상담원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종종 올라온다.

학생 간 폭력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공격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보험 상품까지 등장했다. 교권 침해 피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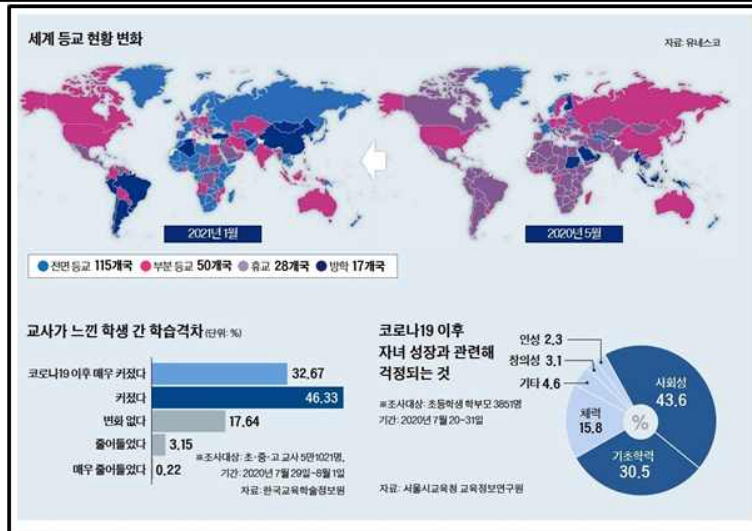
을 보상하는 하나손해보험의 교직원 안심보험엔 2018년 3863명, 2019년 3356명, 작년 2317명이 가입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작년엔 등교 중단으로 교직원 상대의 영입이 줄었던 영향이 있지만 꾸준히 교사들이 가입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생활지도 교사들의 고충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작년 3월부터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폐지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학교 폭력 사건을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 사건 조사가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 먼저 이뤄지고 있고, 최근 비대면 수업으로 과거에 없었던 '학교 밖' 신종 폭력 사건이 늘어 사건 처리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이모(27) 교사는 "놀이터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뤄지는 '학교 밖' 폭력은 교사가 이를 직접 보지 못하다보니 해결이 더 어렵다"고 했다.

학교 폭력 사건 전문인 법무법인 사일의 노윤호 변호사는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나체 영상에 친구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만들거나, 친구들 카카오톡 계정을 빼앗아 도박 사이트에 팔아넘기는 등 과거에 없던 유형도 생겨났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학교 폭력 중 사이버 폭력의 비율은 2018년 8.7%, 2019년 8.9%에서 작년 12.3%로 증가했다.

교사들이 생활지도 교사 맡기를 꺼리는 바람에 계약직으로 일하는 기간제 교사가 학교 폭력 담당 업무를 떠나는 경우도 많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무부장인 최모(53) 교사는 "기간제 교사를 선발할 때 학교 폭력이나 생활지도 업무를 했던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을 줘서 뽑는다"고 했다. 전국 기간제 교사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학교 폭력 업무를 맡으면 한 학교에 오래 있을 수 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

“쌍방향 수업에 일대일 과외” vs “혼자 폰으로 동영상 수업”



가정·학교별 원격수업 인프라 달라
저소득·맞벌이 자녀 학습결손 심화
강남선 사교육이 등교 빈자리 채워
취약계층선 느린 인터넷, 남은 기기

초등 4학년 딸이 사립초에 다니는 박모(43·서울 노원구)씨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이가 학교에 거의 가지 못했지만 큰 불만이 없었다. 학교 온라인 수업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국·영·수 같은 주요 과목은 물론 예체능까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했다.

전업주부인 박씨는 아이의 수업과 과제를 꼼꼼하게 챙겼다. 그는 “공립초에서는 대부분 수업을 동영상 시청으로 대체하는데, 아이 학교는 거의 모든 과목이 쌍방향으로 이뤄져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충북 충주에 사는 맞벌이 주부 김모(48)씨는 초3 아들에게 거의 신경을 못 쓴다. 주중에는 오전 8시에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 일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5월 담임에게 온라인 수업 안내를 받았지만, e학습터 회원 가입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김씨는 “아이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수업을 본다는데 제대로 하는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환경이나 부모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맞벌이와 같은 취약계층에서 학습 결손 문제는 더 치명적이다. 교육열이 높은 서울 강남 지역에선 학교 수업의 빈자리를 사교육이 대체하고 있다. 오정부터 학원에 모여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일대일 과외를 받는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교육 취약계층은 온라인 수업도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19로 부모의 소득 차이가 자녀 세대의 학력격차로 이어지는 ‘케이(K)자형’ 양극화가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이전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했지만,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커졌고,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원격수업은 가정·학교에 따라 인프라가 다르고, 학교·교사별로 질이 천차만별이라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해 7월 경기도 학교 800곳의 학생(2만 1064명)에게 온라인 수업 환경에 관해 물은 결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 학생의 22.6%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학습한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3명은 ‘기기가 남아 방해받고 있다’(29.3%)거나 ‘인터넷 속도가 느려 불편을 느꼈다’(35.9%)고 응답했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보다 2~3배 높은 비율이다.

또 학교 온라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은 보호자에게 도움받는 비율이 34.2%였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은 혼자 해결하거나(26.5%),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비율(22.4%)이 높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학습이나 돌봄에서 방치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심원 심판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 문이 닫혀 있는 동안 취약계층 아동은 집에 혼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학습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안전망을 세심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학교 문을 열거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학생들을 불러모아 학습을 돕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중영일보

교실 속 배움과 삶의 현장 잇는 '서울형 봉사학습 실천학교'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코로나19가 학교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대신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동아리 활동, 체험학습, 봉사활동과 같은 비교과 과정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청소년의 인성·사회성·창의성을 기를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드 코로나 시대, 미래세대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려 줄 방법은 무엇일까.

나눔·배려의 민주시민 키우는 봉사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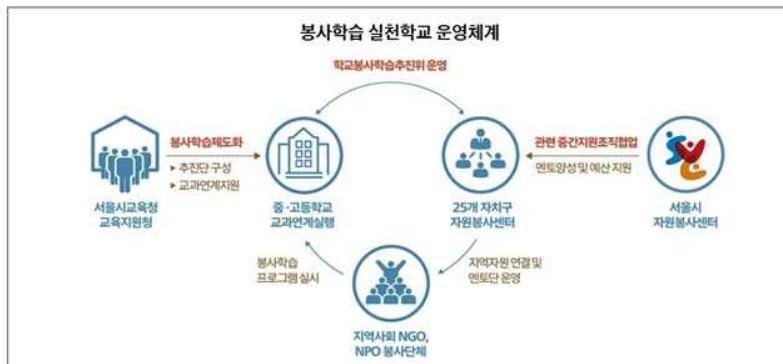
청소년기는 인격과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다. 청소년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선 교과뿐 아니라 인성·나눔·생태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봉사활동과 같은 공적인 가치를 일깨우는 비교과과정의 경우, 교과수업 중심의 일선 학교는 전문적인 기획 및 운영이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전문적인 봉사학습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서울형 봉사학습 실천학교' (이하 실천학교)가 대표적이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봉사를 기획·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해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 및 공동체의 가치에 눈뜨게 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2018년부터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육청에 참가 신청을 하면 센터가 1년간 교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교·자원봉사센터·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봉사학습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서울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봉사학습의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배움·실천·연대 통해 공동체 가치 체득

봉사학습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다. 서울시도시과학기술고 학생들은 1년간 지역 내 공간을 마을임터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건설 분야 마이스터고의 특성을 살려 학교에서 배운 내



학교·자원봉사센터·지역사회 함께 청소년 봉사학습 운영 시스템 구축 올해 100개 학교 참여, 콘텐츠 확대

용을 접목, 직접 공간을 조성하고 기부를 통해 필요한 물품도 마련했다. 봉사단에 참가한 박경태 군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여러 학교가 힘을 합쳐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동대문구의 경희중·고, 휘경여고는 '경동시장 특색 지도'를 만드는 협동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교별로 구역을 맡아 지도를 만든 후, 이를 통합해 전체 지도를 완성했다. 이 특색지도는 경동시장에 비치돼 주민의 관심 제고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로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비대면 봉사활동도 진행됐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자작곡 공연 UCC 제작(서울전지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손 소독제 만들기(강일중) ▶올바른 분리배출 SNS 챌린지(휘경여고) 등은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휘경여고 마스크 제작 봉사(왼쪽)와 서울시과학기술고의 마을임터. [사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교과연계 융합교육에 봉사학습 활용돼야

봉사학습은 교실에서의 배움과 삶의 현장을 연결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장한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은 자연스럽게 사회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협동·호혜·신뢰와 같은 공동체적 가치를 배운다. 지난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진행한 '봉사학습 성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봉사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일반 봉사활동 참여 학생 대비 사회적 책임감과 사회참여 태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봉사학습은 인성·환경·인권·안전 등 법교과 학습주제를 실제 활동을 통해 체득하는 교육적 의미가 있다. 한국외국어대 김용현 교수(교육학과)는 "봉사학습은 청소년 인식·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다"며 "봉사학습이 교과연계 융합교육의 실천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학교는 2018년 23개 학교에서 2019년 48개, 2020년 57개교에 이어 올해는 100개 학교가 참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협력해 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지역의 기관들과 힘을 모아 생태·나눔·민주시민 교육 등 다양한 교과연계 봉사학습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김익옥 센터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학교는 공동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며 "학생에게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의미를 알려주는 봉사학습이 교육과정 내에서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주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재학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東 亞 日 報


지방 '의치한' 수도권 출신 진학 최소화... 토박이 지역인재 키운다

(의대-치대-한의대)

의·약·간호대 및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방식

2022학년도(현행)	2023학년도(올해 고2)	2028학년도(올해 초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대학에 선발 권고 대학 소재 권역 출신 고교생 30% 이상(강원·제주 15%) 로스쿨은 20%(강원·제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비율 의무 선발 (비율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재 '기본' 강화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 대학 소재 권역 출신 고교생 (재학 중 해당 지역 거주)

지방대 위기관리 대책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지방대학' 신기술 인재 공동 양성 혁신 특화지역 지정 후 최대 6년간 규제 유예 자율성 확대, 투자 유도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 '한계 대학' 자진 퇴출 위해 청산유자금 지원, 청산 전문기관 운영 	
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창업 융합된 '캠퍼스 혁신 공간' 설치 2022년까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 	

자료: 교육부



2018년 문을 닫은 전북 남원시 서남대의 폐교 직전 강의실 모습. 정부는 지방대 위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폐교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지역 학생들 의대진학 유리하게 졸업후 수도권 복귀도 줄어들듯 폐교 앞둔 지방대 교직원 보호 용자지원 등 청산전문기관 운영 '한계 대학' 퇴로도 넓히기로

교육부가 28일 내놓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수도권 학생의 지방대 인기 학과 진학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른바 '의치한(의대, 치대, 한의대)' 외에 간호대와 법학전문대학원까지 지역 학생 선발을 의무화한 것이다.

지금도 정부는 지방대 '의치한' 학과에 '지역인재 30% 선발'(강원 제주는 15%)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기준 조사대상 39개 학과 가운데 12곳이 이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강원 한림대 의대는 지난해 정원 78명 가운데 3명만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등 유명 무실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최근엔 서울 등 수도권 학생이 지역인재로 지방 의대에 진학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역인재 선발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한편으로 2028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정을 위

해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 기준까지 추가한 이 유다.

● '수도권 출신 지역인재' 없앤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출신의 지역인재 지원을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 등 국립대 의대 8곳의 타 지역 출신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수는 2018학년도 5명에서 2020학년도 41명으로 2년 만에 8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부분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지역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졸업하고 지역인재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외에 치대, 한의대까지 포함하면 이런 경우는 더 늘어난다.

지역인재 전형을 강화하면 지역 내 학생들의 의치한 진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상당수 대학이 이미 지역인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의무선발로 전환되면 대학 차원에서 선발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며 "해당 지역 학생들의 의학계열 진학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현상도 줄일 수 있다.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입사도 늘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0%까지 늘린다. 2020년 이 비율이 24%였다. 또 지역인재 채용이 많은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 변화가 근본적인 지방대 경

쟁력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원 A대 관계자는 "이미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가 워낙 높은 상황"이라며 "지방대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역인재 전형이나 채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한계 대학' 퇴로 넓힌다

폐교하는 대학에 학교 청산을 위한 용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현재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 이른바 '한계 대학'이 전체 대학의 5~9%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대학의 '도미노 폐교'가 가시화됐다. 이에 올해 안에 대학 청산을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해 폐교 절차도 체계화한다.

2000년 이후 18개 대학이 폐교돼 해산 법인 8곳이 나왔지만 청산이 끝난 법인은 1곳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해산된 학교법인의 체불 임금을 합치면 600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기금으로 체불 임금 등의 자금을 지원하고 청산이 끝난 뒤 잔여금을 국고로 귀속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방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대학이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선다. 국립대 주도로 지역 내 대학끼리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학점 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공동 학위를 수여할 수도 있다.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체계(지역혁신 플랫폼)를 만들면 이를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6년 동안 신기술 규제를 완화해 준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2021년 03월 03일 (수)

사회 10면

朝鮮日報

자녀 스마트폰 문자 보면 인권침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위 "사생활 자유 과도한 침해" 부모들 "아이 교육 말라는 거냐"

인천광역시에 사는 직장인 박모(51)씨는 지난달 중순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의 스마트폰을 봤다가, 딸이 7~8개의 익명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중에는 학생들끼리 가출 경험이나 술·담배 구하는 법 등을 공유하는 방도 있었다. 박씨는 다음 날 곧바로 딸의 스마트폰에 앱 이용 내역을 원격으로 확인하고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앱을 설치했다.

박씨처럼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위치를 추적하거나, 문자메시지·방문 사이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고등학생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청소년 스마트폰 통제 앱 개발 업체들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인권위는 "청소년 스마트폰 통제

앱은 청소년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부모의 친권(親權)을 앞세워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폰 통제 앱의 부가 기능에 대해 방통위에 인권침해 요소를 파악해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통제 앱들은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앱 사용, 사이트 방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을 제공한다. 자녀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원격으로 특정 앱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인권위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통제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서 딸을 키우는 김모(45)씨는 "출근해서도 아이들이 학원에 잘 도착했는지, 이상한 곳에 가는지 확인하고,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쓰다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부모 역할 아니냐"며 "이런 것을 인권침해라고 하면 딸이 부모 입장에서 아이 교육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영준 기자

경향신문



충북 보은군 삼승면 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2일 5학년 교실 복도 벽면에 설치된 '어린이 기본소득 게시판'에서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매점 화폐를 찾아가고 있다.

매주 2천원씩... '공평한 행복' 배워요

보은 판동초 기본소득 실험

지난 2일 오전 충북 보은군 삼승면의 판동초등학교 "매점 화폐를 지급했으니 '어린이 기본소득 게시판'에서 찾아가라"는 교내방송이 울려나왔다. 교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학교 2층 5학년 교실 앞 복도로 몰려들었다. 아이들이 몰려간 곳은 '어린이 기본소득 게시판' 앞이다. 게시판에는 1학년 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 36명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붙어 있었다. 매주 월요일 이 봉투에는 학생 1인당 1000원짜리 매점 화폐 2장이 채워진다. 새 학기가 시작된 이날도 게시판에는 매점 화폐가 꽂혔다. 자신의 이름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학생들은 봉투 안에 있는 매점 화폐를 꺼내 들고 활짝 웃었다. 정성현군(5학년)은 "매주 2000원씩 받다보니 돈을 모으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판동초의 기본소득 실험이 학생들을 변화



시키고 있다. 판동초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아무 대가 없이 매주 2000원씩을 전교생에게 지급한다. 학생들의 기본소득 소비처는 학교 매점이다. 빈 교실을 새 단장해 만든 이 매점은 2019년부터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매점 운영은 조합에 가입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맡았다. 조합원도 70여명이나 된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은 2개에 800원인 '김치만두'다. 한 봉지에 1400원인 양념치킨 맛 라면과자와 1000원짜리 유기농 솜사탕도 학생들의 단골 간식거리다. 학생들은 매점 화폐로 물건을 산 뒤 용돈기입장에 꼬박꼬박 기록하는 법도 익혔다.

이날 매점 운영을 맡은 학부모

전교생 36명에 '매점 화폐' 지급
학용품·간식 사거나 저축 열심
용돈기입장 쓰며 '경제' 깨달아

회장 김라모나씨(40)는 "매점 화폐를 바로 쓰는 아이들도 있고, 학용품 등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모으는 아이들도 있다"며 "학생들이 경제를 배우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당시 전교생 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어린이 기본소득을 통해 느끼는 것들'(중복응답)을 물었더니 학생 35명(88%)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거나 덜 받아도 괜찮다'고 대답했다. 또 '학교에 오는 것이 좀 더 즐거워졌다'는 학생도 34명(85%)이나 됐다. 32명(80%)은 '돈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대답했다. '친구에게 무언가 사줄 수 있

는 여유가 생겨서 좋다'거나 '사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좋다'고 답한 학생들도 있었다.

서우정군(6학년)은 "용돈을 받으면 심부름을 하거나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매주 전교생에게 2000원씩 주니까 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처음에는 간식과 학용품 구매에 주로 사용했지만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없어지면 아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판동초는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 기본소득 지급액을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판동초의 기본소득 소식을 듣고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강환욱 교사는 "학생들이 공평하게 매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소식을 듣고 여러 곳에서 후원을 해 기본소득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학생, 학부모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 지급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은1글·사진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학교폭력도 ‘언택트’... 더 교묘해진 사이버불링,

피할 곳이 없다

최근 유명인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학교폭력 논란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나도 당했다, 고발한다’ 식의 이른바 ‘학폭 미투(Me too)’가 사회적으로 크게 번지고 있는 것. 특히 학교폭력의 양상은 ‘물리적 폭력’ 대신 ‘사이버 불링’의 형태로 더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줄어든 등교수업의 자리를 원격수업이 대체하면서 온라인상의 학교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이버불링은 모바일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대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 전체 비율은 줄었으나 사이버 폭력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의 비율은 전체 학교폭력 피해 유형 가운데 12.3%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에 비해 3.4%p 증가한 것으로, 2013년 실태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과주의 모 고등학교 교사 이모(30)씨는 “사이버 불링 형태의 학교폭력은 학교급과 지역을 넘어 일면식이 없어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피해 학생들은 안전하게 피신할 곳이 없어 고립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사이버 공간 내 학교폭력 피해 증가

사이버불링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피해 학생을 모호하게 특정해 채 비방하는 글과 영상을 SNS상에 올리는 ‘저격글·영상’, 단체로 대화방에서 욕설을 퍼붓는 ‘떼기’, 대화방에 초대된 뒤 한꺼번에 퇴장해버리는 ‘방폭’, 피해자가 대화방을 나가도 다시 초대해 괴롭히는 ‘메신저 감옥’, 얼굴을 합성해서 유포하는 ‘지인 능욕’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저격글은 가족 등 주변인들이 피해 정도를 쉽게 짐작하기 어려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저격글은 대상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이름의 초성이나 상황만을 설명하며 비아냥이나 인신공격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만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저격 영상도 마찬가지다. 비방글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 등에 올리는 식이다. 이때 영상 설명과 태그 내용에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표현을 담는다.

저격글을 경험했다는 서울의 한 고등학생 임모(18)양은 “페이스북에 나를 저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친한 친구의 말을 듣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저격글을 올린 친구에게 바로 연락을 해 추궁했지만, 나를 특정해서 쓴 게 아니라고 우겨 사과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짜처럼 올리고 발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45)씨는 최근 딸이 친구들 사이에서 저격글과 떼기, 방폭을 당했다

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김씨는 “저격글이나 방폭 같은 경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내가 이가 비난의 대상이라는 걸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런 식으로 괴롭힘이 이뤄지고 있는지 몰랐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이버불링은 피해 학생을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휴대전화를 통해 무선 데이터와 선물을 빼앗는 ‘와이파이·기프트콘 셔플’,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피해 학생에게 받는 ‘게임 아이템 셔플’도 있다. 모바일로 금품을 갈취당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교묘해진 사이버불링 수법... “감정적 대응은 금물”

그렇다면 사이버불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피해 사실을 확인했을 때 곧바로 학교나 경찰서 등 주변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학교폭력·소년법 담당교수는 “학생의 입장에서 일이 커지거나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피해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117로 신고하거나 112 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다. 원한다면 신변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피해 증거를 확실히 보관하는 일도 중요하다. 피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회피하는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증거자료를 삭제해버리면 사이버불링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노윤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사이버 불링 피해를 입었을 때 대화방을 나가버리거나 SNS 계정을 삭제하는 등 감정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사라져 2·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증거자료를 복원하기 어려우면 데이터복원 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들이 겪는 사이버불링 피해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했다. 서 교수는 “가해 내용이 유치하거나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들의 입장에서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와 충분한 소통 시간을 가지면서 자녀를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없는 괴롭힘 ‘사이버불링’

SNS·모바일 메신저 등서 발생
비방 글 올리거나 단체로 욕설
언제 어디서든 가해, 피해자 고립
모바일 소액결제로 금품 갈취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피해 사실 알리는 게 최우선
증거자료 삭제 말고 보관해야
부모의 세심한 관찰도 중요
아이에게 엄청난 공포감
충분히 소통하고 적극 나서야

신영경 조선예류 기자

한국일보

성인 80%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격차 커져... 전체적 학력 저하도 우려”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

지난해 초 코로나19로 전국의 초·중·고는 개학이 연기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경험을 했다. 이후 온라인 수업이 시행되고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알아왔던 교육, 사회화, 돌봄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학교의 활동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수업의 학습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코로나 시대 학교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온라인 수업 및 그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달 5~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 학교의 역할 및 온라인 수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방역이 학교의 중요한 역할" 72%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이 학교의 중요한 역할(72%)이 됐고, 학교에서의 방역이 학습과 배움만큼 중요하며(7%), 학교의 자율적 운영보다 교육부·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68%)고 답했다. 학교 내 감염 방지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방역이 학교의 본연적 기능인 학습과 배움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는 차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84%나 됐다. 지난 1년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교차로 실시되고 일상적으로 해왔던 학교 활동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상황에서,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부모 90% "학습격차 커져"

전체 응답자의 80%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커졌다는 점에 동의했다. 표본이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응답한 초·중고 학부모의 90%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커진 것에 동의했다. 참고로 지난해 5월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 온라인 개학(수업)으로 교육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72.4%였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학생의 학습 능력 차이(20%), 부모의 학습 지원 차이(17%), 학생과 교사 간의 의사소통의 한계(17%),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 차이(16%), 학습 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적응력의 차이(14%) 순이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커지는 이유로는 학생의 학습 능력, 적응력 차이와 같은 개인적 특성, 부모의 학습 지원과 같은 가정 배경, 온라인 수업이 갖는 의사 소통 및 피드백의 제약 등 다양한 요인이 두루 꼽혔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가장

36% "초등 저학년 격차 가장 커"

83% "취약계층 학생 소외 우려"

학습 효과는 6%만 "교실<온라인" 41%가 "디지털 환경 개선 필요"

코로나 이후 학교 역할 1, 2위는 학습 격차 해소·공적 돌봄 강화

를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급은 초등학교 저학년(36%), 고등학교(27%) 순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습의 자기 주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학습량이 많고, 효율적인 학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0명 중 8명 "공동체성 약화 우려"

학교에서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온라인 수업의 영향으로 친구와의 관계성 및 공동체성 약화(83%),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의 소외(83%), 가정에서의 지원 및 돌봄 부담 증가(83%), 학업 공백 및 학력 저하(79%)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80% 내외였다. 교사의 디지털 활용 및 온라인 수업 역량 부족(72%)도 문제로 꼽혔다. 이를 볼 때, 온라인 수업 진행 과정에서 친구 간의 관계성을 높이며 사회성을 올리는 방안, 교육 기회 및 여건의 제공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의 소외 해소를 위한 지원, 가정의 돌봄 부담 감소, 학력 저하 방지, 교사의 온라인 수업 역량 강화 등이 풀어나가야 할 주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77% "학습 효과는 교실 수업이 높다"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 중 어느 수업 방식의 학습 효과가 더 높을까? 교실 수업(77%) 응답이 온라인 수업(6%)보

다 월등히 높은 가운데,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10%였다.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안은 무엇일까? 교사와 학생의 쌍방향 소통이 원활하도록 학교의 디지털 환경 개선(41%)과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과 자료체계 구축(28%) 응답이 높았고, 다음으로 교사의 온라인 수업 및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 향상(9%) 순이었다.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간 충실한 피드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고, 내용이 다양하며 활용도가 높은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개발·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의 온라인 수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2% "온라인 수업 유지 안 될 것"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생 간 학습 격차 해소(35%)와 공적 돌봄을 강화하는 체계 구축(23%) 응답이 높았다. 학습 격차 해소라는 교육 차원과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라는 공적 돌봄 차원이 코로나19 이후 학교 역할의 중요한 논의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종식 이후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유지되지 않을 것(62%)이라는 응답이 유지될 것(31%)이라는 응답보다 2배 높았는데, 학습 격차 확대, 가정의 돌봄 부담 증가, 학생 간 공동체성 약화 등 온라인 수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녹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응답자의 절반 이상(54%)이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적 돌봄을 포함해 지역사회에서 학교 역할에 대한 높아진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에서 아동과 학생의 돌봄(방과 후) 수행 주체로 학교가 효과적이라는 의견(46%)과 전문기관이 효과적이라는 의견(45%)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이 학습과 배움이라는 학

교의 본연적인 기능만큼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가정의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학교의 '돌봄' 역할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확대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환경 개선,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구축,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확인됐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상황에서 모든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는 학교의 역할, 나아가 학습 복지와 공적 돌봄의 관점에서 필요한 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이번 기회를 통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신성현 한국리서치 여론1본부 이사(교육학 박사)

2021년 03월 11일 (목)

기획 24면

한국일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학교 역할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단위:%)

코로나19 이후 방역이 학교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그렇다 아니다 모름

72 22 6

학교에서의 방역이 학습과 배움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23 71 6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학교의 자율적 운영보다 교육부 및 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68 25 7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는 차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필수적인 지원 해야 한다

84 12 4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수업으로 학생 간의 학습격차가 커졌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나?

(단위:%)



온라인수업서 학생들 간 학습격차 커진다면, 주요 원인은?(단위:%)



온라인수업에 따른 학습격차의 발생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급은?(단위:%)



학교서 비대면 온라인수업이 1년 동안 진행된 현재, 온라인 수업의 영향에 대한 생각(단위:%)



온라인수업 학습효과와 교실수업 학습효과를 비교, 학습효과가 더 높은 것?(단위:%)



온라인수업 학습효과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단위:%)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를 대응하는 학교의 모습과 관련, 우선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은?(단위:%)



코로나19 이후 학교와 관련, 다음 내용에 어떻게 생각하나?(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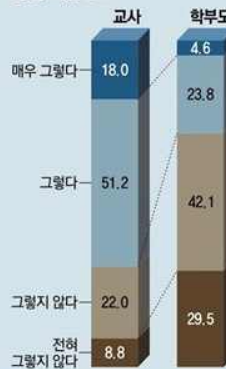


다가오는 '스마트로그 교육'... 온라인 학습방 확충이 과제

(스마트+아날로그)

인사이드 & 인사이드
Inside Insight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코로나19 종식 이후 원격수업
활용 의향 단위: %

원격수업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단위: %, 교사 3만2133명 대상.



자료: 교육부

지난해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원격수업 '실험'을 통해 우리 교육계는 큰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원격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깨닫게 됐다. 우리는 지난해 원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하지만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등 적지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앞으로 비대면과 대면이 섞인 '혼합수업(hybrid instruction)'이 미래교육의 대세가 될 것으로 이야기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초·중등 교육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나 이광형 KAIST 총장 등은 가르침의 특성과 초·중등 학습자의 특성, '에듀테크' 기술의 현주소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대면교육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대면수업을 하더라도 온라인 디지털 기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수업의 형태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원격수업의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대면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원격수업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다.

● 원격학습 약자 배려와 소통 강화

원격수업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원격학습 약자 문제다. 원격수업을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 학생, 혼자 원격수업을 듣기 어려운 초등 학교 저학년,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이 원격학습 약자에 해당한다. 코로나19 기간에 중위권이 사라지고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이 기간 원격학습 약자들의 학습 부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관리가 부족한 중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수업이 성공하려면 먼저 이들의 자기 관리 역량을 길러주고, 학습 동기를 북돋우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알프레드 아들러가 '살의 틀'이라 명명한, 학습 기초가 되는 토대를 기르는 것이 대면수업 성공의 필요조건 중 하나다.

가르침, 특히 원격수업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만남과 소통이다. 원격수업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 큰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관점이나 가정에 부합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기억하는 '선별적 인식' 혹은 '선별적 회상'의 결과다. 인간 뇌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면서 교사는 소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의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원격수업의 효과가 올라간다. 교사들은 학생과의 소통 이상으로 학부모들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시도해야 한다.

원격수업, 혼란속 가능성 확인
학습격차 확대 문제점 드러나소통 늘려 학습동기 북돋우고
교사 양질의 콘텐츠 개발 지원
지자체-주민도 적극 동참 필요전통 대면교육과 에듀테크 융합
코로나이후 새 교육모델 찾아야

한국, 금융 교과서 채택 0곳... 미국, 금융위기 후 정규교육 강화

(2008년 이후 45개주로 확대)

금융문맹 방지하는 나라 (上) 교실서 경제교육 안한다

경기 파주시 A중학교 이모 교사는 지난 1월 은행 지점과 학교를 연결시켜 학생들에게 금융 교육을 해주는 금융감독원의 '1사1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가 포기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컸다. "영어나 수학 등 시험에 도움 될 수업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무관한 금융 교육은 왜 하느냐"고 항의를 받았다. 이 교사는 "앞으로 애들이 사회생활 하며 금융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추진한 건데 이렇게 반발이 클 줄 몰랐다"고 말했다.

'1사1교'는 금감원이 2015년부터 은행, 증권사 등의 지점들과 전국 1만1000여개 초·중·고교를 연결시켜 금융 교육을 돕도록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7700개 학교와 협약을 맺었지만 수능을 치른 고3들에게 일회성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재완 서울 대진고 교사는 "입시가 우선이라 학부모나 학생들이 정규 교육 시간에 금융 교육을 하는 걸 꺼린다"고 말했다. 한 은행 임원은 "2~3년 전부터 서울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단 한 건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엔 코로나까지 겹치며 1사1교 수강생 수가 전년대비 40만명 넘게 줄면서 13만 4000명에 그쳤다.

◇수능 경제 과목 선택 2.3%에 그쳐
입시 위주 교육에서 경제나 금융 교육은 뒷전일 수밖에 없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2년 금감원이 초·중·고교용 금융 교과서를 만들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식 교재로 승인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등 교육에는 금



초·중 금융과목 비중 0.1%도 안돼... 수능서 경제 선택은 2.3%뿐 학생 94% "금융교육 필요"... 교사 72% "입시위주 교육에 막혀"

용 과목의 비중(교육 시간 기준)은 0.1%도 안 되는 것으로 금융교육학회는 추산했다. 금융위원회가 2019년 말 초·중·고교 교사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 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융 교육 시간은 연평균 9시간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금융만 가르친 별도의 과목은 없었고 사회·실과 등 다른 과목에서 이자 등 기초 개념을 수박 겉 핥기식으로 끼워넣은 것이 전부였다. 고등학교에서도 금융 교육은 설 자리가 없다. 고1 '통합사회' 교과서 300여쪽 중 8쪽 정도만 자산관리, 생애 재무설계 등 금융에 할애돼 있다. 1년 중 2~3시간이면 끝나는 분량이다. 고2가

되면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한 금융을 배울 기회는 아예 없다.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 영역 9개의 선택 과목(2개) 중 경제를 선택한 학생은 2.3%에 그쳤다. 수능 사회탐구 영역 응시생 21만8000여명 중 5000명에 불과했다.

작년 초 금융투자협회는 고교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 교육이 확대되는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참여한 고교는 2곳뿐이다. 금융 교육을 하려면 기존 교과목에 배

정된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학부모와 교사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등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금융 교육을 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도 컸다. 금투협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 중 한 곳인 서울 여의도고는 모든 특별활동 시간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간신히 끼워넣었다.

화상수업 불쑥 들어와 욕설·음란물... '줌 바밍'에 떠난다

(zoom-bombing)

유출된 온라인주소·ID로 접속, 채팅창에 '폭탄' 던지며 수업 파괴

지난 22일 오전 9시 44분, 세종대학교 철학과 윤지선 교수의 '서양철학 쟁점과 토론' 온라인 화상 수업. 윤 교수와 40여 명의 학생이 접속해 있는 방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는 갑자기 'X페미 교수' 등 욕설, 혐오 표현과 남성의 성기 사진 등을 30여분간 채팅창에 올리기를 시작했다. 윤 교수가 "다 캡처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자, "응, 난 촉법소년"이라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윤 교수가 강제로 방에서 퇴장시켰지만, 비밀번호가 없는 방이라 침입자는 5번이나 다시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화상 수업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루리웹·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윤 교수는 25일 이 침입자를 모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코로나 여파로 초·중·고, 대학교의 수업이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되면서 외부인이 불법으로 난입해 수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줌바밍(Zoom-bombing)'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줌바밍은 대표적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 수업에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의미(bombing)다. 이런 화상 수업들은 별도의 인터넷 주소나, '123 1234 1234'처럼 숫자로 된 회의 ID를 알아야만 접속할 수 있다. 학교에서 수강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유하지만, 일부 수강생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 외부로 유출돼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침입자들은 화상 수업에 들어와 수십~수백명의 참가자들이 보는 창에 욕설, 음란물을 남기는 식의 '폭탄'을 떨어뜨리고 유유히 사라진다. 수업이나 회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줌바밍은 작년에도 간혹 있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놀이형 범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25일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자, '줌 수업 테러 해주시분' '중딩 줌수업 침공'과 같은 글이 올라와 있었다. 해당 글에는 화상수업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입장 비밀번호와 함께 '침입'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달 초 개학 이후에만 10개 넘게 올라와 있었다. 세종대 윤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줌바밍은 단순한 외부인의 만행이 아니라, 남초 사이트 등



"줌 침공 가자" "줌 테러할 분 모집"
일부 사이트서 '놀이형 범죄' 확산
교수·여학생들 얼굴 캡처해서
온라인에 유포하고 합성까지...
법조계 "업무방해 등 처벌 가능"

인 커뮤니티에 들어가자, '줌 수업 테러 해주시분' '중딩 줌수업 침공'과 같은 글이 올라와 있었다. 해당 글에는 화상수업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입장 비밀번호와 함께 '침입'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달 초 개학 이후에만 10개 넘게 올라와 있었다. 세종대 윤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줌바밍은 단순한 외부인의 만행이 아니라, 남초 사이트 등

에 자신이 수업에 침입한 것을 인증하는 '놀이'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한 고등학교가 진행 중이던 '대학입시 설명회' 온라인 화상수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400여 명의 학생이 설명회를 경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원을 알 수 없는 여러 명이 들어와 채팅창에 욕설을 남기고 극우 커뮤니티 '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양을 카메라에 비쳤다.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임 게시판에 'OO고 줌수업 테러드 가자~'란 제목의 글이 올라온 지 10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 해당 고교 관계자는 "당시 수업을 진행하던 선생님들이 많이 놀랐다"며 "지금도 선생님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줌바밍은 추가 범죄로도 이어진다. 온라인 화상수업은 교수·학생의 얼굴, 이름이 화면상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이를 캡처해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인공지능(AI) 기술로 수업에 참가한 이들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범죄도

벌어진다. 박정현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교사의 얼굴을 무단으로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려보거나,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회화화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생은 수업 중에 마스크를 쓰거나, 화면을 꺼놓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학생 김모(21)씨는 "교양수업처럼 수강생 수가 많고 타 학과 학생들과 같이 듣는 수업은, 화면에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출석을 확인할 때만 몸통이 잠깐 나오게 한다"며 "화면을 일부러 어둡게 하거나, 어쨌든 나오게 하는 친구도 많다"고 했다.

서해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화상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던 범죄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며 "학교 수업에 침입하는 줌바밍 범죄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복합적 범죄가 성립해 단순 범죄보다 더 무거운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김지원 기자

국민일보

시론

모두가 참여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 이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학교의 역할과 교실 공간, 교수학습 방법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게 됐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지난 2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고 현재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래학교의 첫 다짐들이 될 사업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미래학교가 학교시설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지만 미래학교는 단순한 시설 개선 사업이 아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래학교 사업은 노후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과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 온라인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학교는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간 혁신,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교실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그린학교의 실현, 학교시설 복합화 등의 방향성을 갖고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학교 공간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변화시켜 창의·융합적인 교육, 학생 선택중심 수업과 같이 다양한 수업 상황에 맞는 공

간들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도 늘어나갈 계획이다. 교실에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 환경이 구현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맞춤형 개별 학습도 제공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학교를 만들어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생태 환경도 조성함으로써 학교가 친환경·생태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휴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복합화도 추진해 학교가 지역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지역 사회도 학교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형 학교는 교육 공동체가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완성한다는 점에 서 그 의미가 있다.

미래학교의 중요한 특징은 학교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 공간을 설계하는 사전기획 단계부터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바라는 학교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교의 공간 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자신이 그리던 학교가

실현되는 과정을 몸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래학교로의 전환, 그 중심에는 학생이 있다는

점을 되새기며 학생들의 활기로 넘쳐나는 미래학교의 역동적인 모습을 기대해 본다.

학생들과 함께 교직원들도 미래학교 설계를 위한 사전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직접 참여해 만든 학교와 교실에서 디지털 기반의 온·오프라인 융합수업과 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미래학교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학교가 지역 사회의 중심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학교와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모두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학교의 완성을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의 주체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의 구성원들이 미래의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 미래교육을 향한 첫걸음이 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서울신문



아침 굶는 학생 많은데 학교서 채식한다네요

생각나눔

서울교육청 '월2회 채식' 안착 과제는

기후·생태 지키는 식습관 실천 취지로

이번 달부터 초·중·고·특수학교서 시행

선택권은 없어... 영양 불균형 등 우려

"생선도 잘 안 먹는데 채식 급식 되겠나"

"맛없는 날' 그치지 않게 교육 강화할"

서울시내 모든 학교가 월 2회 '채식 급식'을 제공한다. 학생들의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와 생태 문제에 관한 인식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고기 없는 식단을 학생들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서는 게 과제다.

8일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2021 SOS 그린(Green) 급식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앞으로 월 2회 채식 급식을 제공한다.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채식 반찬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린 바(bar)'도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4)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육식을 줄이는 식습관을 학교에서부터 실천하자는 취지다.

개별 학교는 채식 급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먹거리와 생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교육을 급식과 연계해 운영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비건(유제품, 계란 등 모든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채식 유형) 급

식이 아닌 '고기 없는 급식'으로, 육고기를 콩고기로 대체하는 등 단백질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채식 급식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학교 급식에 '고기 없는 월요일'을 격주로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주 1회로 늘리고 채식 급식 선택권도 허용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주 2회 '채식 선택급식'을 도입했으며 전북도교육청은 채식 식단을 희망하는 학교에 채식 식재료 구입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고기 없는 급식'을 선택권 없이 제공할 경우 현장의 거부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A교장은 "학생 대부분이 아침을 거르고 저녁은 편의점에서 때우고 있어 급식 운영위원인 학부모들이 급식 열량을 높이고 고기를 꼭 넣어달라고 당부한다"면서 "생선도 잘 안 먹는 학생들에게 채식 급식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 사이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이 없는 식단의 영양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B(44)씨는 "'고기 킬러'인 아이들에게 채식 급식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제대로 된 지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급식 맛없는 날'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명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위원장은 "채식을 강조하기보다 고기는 없어도 맛있는 급식으로 받아들이도록 식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채식과 기후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서울신문

<초등학생>

<중학생>

놀이 연계학습·서술형 평가... 대입 맞물려 '미래형 교육' 산 넘어 산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2024년 초·중·고교... 부모·교사 의견 수렴
학생 맞춤형 디지털 소양·AI 교육 등 강화
수능 방식·영향력 달라지면 공정성 논란
수학 등 확대 요구에 '교과 이기주의' 우려

고교학점제 등 미래형 교육의 밑그림을 그릴 교육과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청사진을 지향하지만 대입제도 개편과 교과이기주의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1954년 제1차 교육과정 이후 열한 번째다. 2022년 정식 고시돼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미래역량 함양'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인재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초등 저학년부터 강조되는 기초 소양은 '읽기·쓰기·셈하기(3R)'의 차원을 넘어 '디지털 소양'이 포함되며, 인공지능(AI)과 생태, 민주시민 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교실 수업의 혁신에도 가속도가 붙는다. 현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돼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해 이수한다. 중학교에서는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되며 초등학교에서는 발달수준에 맞는 놀이 연계 학습이 활성화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입된 원격수업도 교육과정의 하나로 자리잡는다. 학교 수업에 온·오프라인 융합수업이 확산되며 AI와 빅데이터 등 에듀테크가 학생들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일정 (자료: 교육부)

2021년	의견수렴(토론회, 포럼, 속의 등)·정책연구, 중론 주요사항 발표(하반기)
2022년	교육과정 고시(하반기)
2024년	초·중·고 국·과 교과서 적용 미래형 대입제도 발표(상반기)
2025년	초·중·고, 고1 적용, 고교학점제 시행, 검·인정교과서 연차 적용
2026년	초·중·고 적용
2027년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 적용

기초학력 진단과 같은 맞춤형 지원에 투입된다.

성패는 대입제도 개편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교학점제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만큼 오지선다형 시험인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지속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할 새 대입제도를 2024년 2월에 발표할 계획으로, '서·논술형 수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오지선다형 수능=공정"이라는 도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입제도 개편은 쉽지 않다.

'교과 이기주의'도 갈등 요소다. 수학·과학계에서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수·과학 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시민' 교과 신설이나 '노동' 교육 의무화 등 각계의 요구를 수용하다보면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 '학습량 적정화'와 충돌한다.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칠 계획이다. 시민 여론을 통해 학계의 교과 이기주의를 극복하려는 돌파구로 분석된다. 그러나 수능을 지지하는 여론이 대입제도 개편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공론화를 주도할 국가교육회의가 '결론 없는 속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과제를 떠안았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추진국장은 "미래 세대에겐 무엇을 가르치느냐의 문제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연내 총론을 발표한다는 등 성급히 시기를 못박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개정되는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서울신문



생각나눔 교원 자격증 없어도 기간제 교사로 임용 논란

“임용 공정성 무시” “고교 학점제 고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자 외부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임용하는 법안을 놓고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교원 전문성’과 ‘임용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학생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 고교학점제 신설 과목에 전문가 임용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고교학점제에서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칠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원 자격증 대신 법으로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교사(시간제)로 근무한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신청해 수강하는 제도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분야와 제과·제빵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한 수요가 예상된다. 현재 중등학교 교원 자격증의 표시과목은 총 68개뿐으로 이들 과목을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원단체들은 “교직 전문성이 없는 교사가 양산돼 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운수 한국교원단체연합회장은 “단순히 잘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므로 전문화된 교사양성과정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소명의식과 학생에 대한 이해 등 교원이 가져야 할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는 해당 법안에 대해 1600여 건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교원의 업무 경감 등을 고려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지금도 ‘바리스타’, ‘마케팅’ 등의 과목을 강사 등이 수업을 하고 있으나, 교원 자격증이 없는 강사는 단독으로 수업과 평가, 기록을 할 권한이 없어 교사가 투입된다. 이 경우 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가중돼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수업과 평가, 기록 권한을 주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의 조건으로 ▲ 박사학위 취득 ▲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 경력 ▲ 교육부 별도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자격증을 주거나 정교사로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경주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1국장은 “이들 교사가 정교사가 되기 위해 투쟁하고 학교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들 80.5%가 교사 자격 개방 찬성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10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만 4656명을 대상으로 ‘미래 교육 체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이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교사 자격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일반 국민 80.5%와 학부모 83.4%가 찬성한 반면 교사는 60%가 반대했다. 한편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기보다 고교학점제에 걸맞은 교원 양성체제와 교사 재교육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맞춤형 교육’이 강조될수록 교직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학생 감소, 10년 전부터 예견했는데 대학 수 늘린 정부

(일반대 179개→191개)

정책 실패가 부른 지방대 위기

정원은 줄이면서 허가에는 관대
지방대 위주 감축이 사태 더 키워
지원자 감소→경쟁력 하락 악순환

지난 19일 오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부산교대. 부산교대 총동창회 동문들이 본관으로 향하던 차 정원 부 산대 총장을 마약했다. 부산교대와 부 산대 간 통합 양해각서(MOU) 체결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은 “(두 대학의) 통 폐합은 초등교육 말살”이라며 “아이들 발달에 맞게 정인교육을 하는 교육대 는 종합대학인 부산대와 다르다”고 주 장했다.

거센 반발에 차를 돌린 차 총장은 결 국 이날 오후 서류를 교환하는 방식으 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산교대 측이 밝힌 표면적인 통합 이유는 ‘폭넓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종합 교원 양성’이지만, 이면에는 학령인구(만 6~21세) 감소가 바탕이 됐 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령인구가 줄어 교원 취업률이 떨어지면, 다른 지방대 처럼 정원 미달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올해 대다수 지방대가 신입 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통폐합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대규모 정원 미달로 지방대 붕괴 위 기감이 확산하면서 정부의 교육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0년대 초반 학령 인구 급감이 예측됐으나 외려 대학 수 는 늘어나서다.

통계청의 ‘2011년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정부는 학령인구가 2010년 1001 만명에서 2021년 758만명까지 줄 것으 로 관측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 대 학 수는 6개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전문 대·교육대·산업대를 제외한 일반대학은 179개에서 191개로 오히려 12개가 늘었

다. 2003년(169개)과 비교하면 22곳이나 많아졌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 해 2000년대 초부터 정원 줄이기에 나 섰지만, 대학 허가에 대해선 백안시 한 셈이다.

정부가 지방대 위주로 정원을 줄인 것도 지방대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 이 나온다. 학생 감소로 지방대 재정 이 먼저 쪼그라들고, 투자가 줄자 수도 권대와 경쟁력 격차가 벌어졌다는 분 석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달 보 고서를 통해 “2008~2013년 3만6164명 의 정원을 감축했지만,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의 70~80%가 지방대”라

며 “2013~2018년 감축 인원 6만614명 중 76.7% 역시 지방대”라고 분석했다.

상당 수 지방대는 경쟁력 약화의 원 인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대학평가 기 준을 꼽는다. 교육부의 ‘2018 대학기본 역량진단 편람’에 따르면 3년마다 치러 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엔 ▶학생 충원

율 ▶졸업생 취업률 ▶전임교원·교사 확보율 ▶교육비 한원율 ▶교육과정· 강의개선 등 20개 기준이 고려된다. 이 중 지방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신입생 충원율. 학생 유치가 어려워 지는 상황에서 평가 배점이 2015년 8점 →2018년 10점→2021년 20점으로 커진 탓이다.

대학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일반재정지원이나 특수목적지원사업,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된다. 이 경우 지방대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할 수 있지만, 재정 안정성·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이것이 학 생 충원에 대한 어려움으로 돌아온다 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교연이 2019년 기준 정부의 일반지원사업을 분 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한 곳 당 약 225억원으로 지방대 한 곳(121억 원)의 2배에 달했다.

허정원·이은지·김윤호·최종권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학령인구 감소에도 늘어난 일반대학



자료:통계청 *일반대:전문대·교육대·산업대 제외

한국일보

“분홍색 좋아하던 아들, 놀림당한 후 파란색만 찾아요”

분홍색을 좋아하던 아들이 어느 순간 말했다. “남자는 파란색 해야 해. 분홍은 여자 색깔이야.”

동화나 만화를 보던 아이가 혼란스러워한다. “(모두 남자가 대장인데) 엄마, 여자도 대장 할 수 있지 않아요?”

색깔 구분에 질린 엄마가 아이에게 애써 설명했다. “남자가 여자까 따로 없어” 그랬더니 남편이 불쾌해하고 예민한 엄마로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싫었다.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이 영유아 및 초등학생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답변이다. 상당수 부모들이 어린이 콘텐츠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불쾌감과 난감함, 걱정을 토로했다.

어린이 콘텐츠 분야별로 최대 57%가 성별 고정관념·차별 등을 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해야 한다고 서술한 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볼 때, 고정관념과 차별을 보고도 인식을 하지 못한

본보, 학부모 100명 설문조사

“미디어 성역할 고정관념 영향 커
소수자 등장 비율도 더 늘리고
노인·장애인 고정관념 없애야”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성역할 고정관념이 포함된 콘텐츠를 접한 후 취향 등이 바뀌기도 했는가”라는 서술형 질문에는 색상 문제에 대한 토로가 많았다. “아들이 분홍색을 피한다”거나 “핑크를 좋아하던 아들이 차츰 놀림을 당하면서 강제로 파란을 좋아하는 느낌”, “아들이 분홍색은 여자 색이다, 나는 분홍색 옷을 입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등 남자아이들이 ‘분홍 기피’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여자아이들은 분홍색을 선호하게 되고, 레이스가 달린 이브나 공주풍 물건을 찾으면서 파란색을 피했다고 전했다.

한 응답자는 “첫 아이와 달리 미디어

아동콘텐츠에서 성역할 고정관념, 외모·인종·장애 등의 차별 및 혐오 표현을 접한 적이 있는가(단위:%)



※영유아 및 초등학생 학부모 100명 설문조사

노출을 최소화한 둘째는 여자아이지만 로봇을 좋아하고 드레스 대신 활동성 있는 옷만 입으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타고난 성향도 있겠지만 미디어에 의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분명 영향이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성역할에 대해 한 응답자는 “아빠만 돈 버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상황이 된다면 같이 돈을 버는 것이요 부양일은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

이니 함께 준비해서 먹고, 치우면 더 맛있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된다고 얘기해 준다”고 편견을 줄이려는 노력을 설명했다.

부모들의 한탄은 설문 답변지를 가득 채웠다. 문제의 아동 콘텐츠를 접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묻자, “우리나라 아직 멀었구나” “불쾌하다, 아이가 이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까 봐 걱정된다” “시대가 어느 편에 아직도” “앞으

로도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고정된 역할과 태도를 요구받겠구나 하는 생각에 착각했다” “내 딸이 나와 똑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됐다” 등의 답변이 줄을 이었다.

한 부모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나 생각하게 된다. 특히 ‘분홍색=여자’는 타고난 걸까라고도 생각하게 됐다”라고 자포자기한 심정을 전했다. 다른 응답자는 “아이가 레고, 로봇을 좋아하는데, 로봇 애니메이션이나 장난감은 폭력적인 측면이 있는 데다가 여성들은 보조적인 캐릭터로만 나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관련 애니메이션이나 장난감을 아예 멀리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라고 했다.

부모들은 아동 콘텐츠를 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성별 역할뿐 아니라, 소수자의 등장 비율이나 묘사에 대해서도 편견 없는 모습을 담기를 바랐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주입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인은 힘이 없고 허

리가 구부정한 모습, 장애인 모습의 부재, 여남용을 표기하고 제한된 색으로 구분 등의 고정관념 재생산과 확대를 피해야 한다” “성별이나 장애 등에 대해 내놓고 혐오 표현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소하고 일상적인 묘사일수록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조손가족도 있고, 아빠만 있거나 엄마만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늘 4인 가족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등의 답변을 했다.

김지은 아동문학평론가는 “소수자가 작품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짜 다양성이 반영되는 것”이라면서 “등장 인물의 약자적 현황이나 차별을 전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한 응답자는 취재팀에 이런 글을 남겼다. “두 딸을 둔 엄마인데요, 아이가 좋아하고 친구들도 좋아하는 것이니 보지 못하거는 못하지만, 보고있자니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외모비하 등 아이에게 너무 유해합니다. 정말 취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훈익 기자

2021년 05월 05일 (수)

전국 10면

한국일보

경기도교육청, 무학년제 ‘中·高통합학교’ 운영

부천 옥길·의왕 내손, 2024년 개교
객관식 시험 폐지... 진로·융합 교육

진학보다는 성장과 진로에 중점을 둔
중·고 통합운영학교가 경기도에 처음
들어선다.

경기도교육청은 부천 옥길 중·고 통
합운영학교와 의왕 내손 중·고 통합운
영학교가 교육부 심사를 통과해 2024
년 개교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중·고 통합운영학교는 중·고 교육과
정 연계와 교원 통합 운영으로 6년 동
안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융합
교육 등을 추진해 미래 사회를 대비할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로 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추진했다.

이번에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두 학
교 모두 중·고 각각 12학급 총 24학급
규모로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경
기도 거주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

다. 이들 학교에는 중 1·2, 중3·고1, 고2·3
년 등으로 나눠 함께 듣는 학년군별 무
학년제가 도입되고 개인별 수업시간표
구성도 허락된다. 또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수업도 30% 내외에서 진행된다. AI, 코
딩 등 미래 신기술 전문가와 마을교육
전문가 등도 교사로 배치해 자신의 진
로와 연계된 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토의토론과 프로젝트를
통한 실천적 지식 습득을 위해 이들
학교에서는 객관식 시험을 가급적 폐지
할 계획이다. 통합과정이지만 중학교에
서 상급학교 진학 시 타 학교 선택도 가
능하다.

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진로·융합교육으로 미래인재를 길러내
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외국인 230만 시대

“야자수가 뭐예요” 다문화 학생, 말 안 통해 수업 스트레스

김나윤 기자 kim.nayoon@joongang.co.kr

“우. 유. 이거는 야. 자. 수. 그런데 선생님 야자수가 뭐예요?”

서울충무초 싸사(가명·3학년)가 입으로 따라 읽으며 쓰던 글씨를 멈추고 선생님께 묻는다. 교실에서 나란히 앉아 같이 한국어 수업을 듣던 알바나(가명·3학년)는 “이거 봐. 나무잖아 나무~”라고 하며 책에 있는 그림을 싸사에게 보여준다. 싸사와 알바나는 각각 2년 전 러시아 이민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오면서 1학년 동급생으로 이 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한국어를 못해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자 학교는 싸사와 알바나에게 주 10시간씩 한국어 수업을 별도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체육, 음악, 미술 같은 수업은 기존 교실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국어, 수학처럼 언어 소용이 어려운 과목 시간에는 한국어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다.

현재 서울충무초에는 싸사, 알바나처럼 한국어 특별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17명이다. 이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는 답임교사와 한국어강사, 다문화 언어강사 2명 등 3명이나 된다.

김연구 다문화특별학급 담임교사는 “학내 러시아계 중심으로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매년 눈에 띄게 늘고 있다”라며 “이 추세에 맞춰 우리도 이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보자는 취지에서 이중언어 수업을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해 전교생이 주 1시간씩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 정책에 관심이 커졌다. 교육부의 ‘2020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는 14만 7378명이다. 전년 대비 1만 명 가까이 늘었다. 국내 외국인주민 자녀 25만 1966명(행정안전부 발표) 중 약 59%가 일선 학교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27일 중앙SUNDAY가 방문한 서울충무초 역시 전교생 200명 중 53명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국제문화체험센터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장 실습형 다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견학 방문한 순천시 창천초의 한 학생이 국기별 나라꽃과 수도 맞추기 퍼즐을 즐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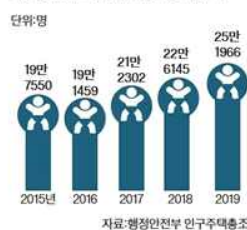
김나윤 기자

서울충무초 다문화 교육 현장

전교생 4명 중 1명 피부색 달라
한글 특별학급 열어도 적응 못해

다문화 영유아 교육 걸음마 수준
“더불어 살려면 공감대 형성 중요”

최근 5년 외국인주민이 낳은 자녀 수



자료:행정안전부 인구주택총조사

이 다문화 학생이다. 학생 4명 중 1명이 인종, 국가, 피부색이 다른 셈이다.

2000년대 한국 내 다문화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대다수의 다문화 학생은 대안학교를 통해 교육받았다. 언어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반 학교 정규 수업에 적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인가한 학력 인정 대안학교는 서울 지구촌 학교 등 전국에 5곳. 그 외 대안학교는 각 지자체가 위탁해 운영하고 있거나 각종 단체 등이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다.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반 학교 진학 문턱이 다문화 학생에게 크게 낮아졌다. 한국사회가 다문화 학생에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2년 교육부가 일반 학교에 다문화 특별학급을 개설하는

방식의 예비학교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 교육만으로 다문화 학생의 한국생활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특히 중도 입국 학생일 경우에는 더 적응하기 힘들게 현실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자녀와 달리 중도입국 자녀는 청소년기에 급변한 생활환경을 겪으면서 언어소통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립감도 크기 때문이다. 김연구 서울충무초 교사는 “다문화 학생이 좋은 취지로 학교를 진학했지만 정작 집에서보다도 더 말이 안 통해 친구와 선생님에게 마음의 문을 닫는 아이들이 종종 있다”라며 “그럴 경우 학교생활이 되려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다”고 했다.

강원 중등교원 감축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 가속

내일 스승의 날, 우울한 교사들

올해 정원 작년보다 121명 줄어

농어촌학교 겸임교사 증가세

1시간씩 이동해 타 학교 수업

5과목 이상 담당교사도 13.4%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농산어촌 작은학교를 대상으로 유례없는 중등교사 대규모 정원 감축을 실시하면서 벼랑끝에 내몰린 교사들의 반발이 고조,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스승의날을 맞이하고 있다. 농산어촌 교사들은 정원 감축에 파로 여러 학교를 전전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겸임교사가 증가해 도서벽지의 교육환경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횡성 정일중에서 기술·가정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장미자(54) 교사는 올해 처음으로 농어촌학교 겸임교사를 맡았다. 전교생이 13명인 정일중에서 1학년 4명의 담임을 맡고 있지만 지역 내 중등교사가 줄면서 기술·가정 교사가 없는 다른 학교로 수업을 가야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장 교사는 일

주일에 하루는 소속 학교에서 차량으로 1시간 가까이 떨어진 강림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출근한다. 이같은 현상은 국어, 영어, 수학 등에 비해 비교적 시수가 적은 음악, 미술 등의 과목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체육 담당 교사가 사라지면서 1학년과 2학년, 3학년 학생들 모두 다른 학교에서 온 겸임교사에게 체육 수업을 받는 상황도 빚어졌다. 장 교사는 "겸임교사를 맡게 되면서 수업 시수가 늘어난 것 뿐만 아니라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과 양쪽 학교의 업무를 모두 신경쓰다보니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농어촌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교원단체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등교원 감축에 따른 작은 학교 교사 감축에 반발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전교조·지부장 박종훈)는 13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사 정원 배치기준을 학급당 교사 수로 바꾸도록 끊임없이 요구해 필요한 교원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가 도내 중등교사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산어촌순회교사(겸임교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담임을

맡으면서 타 학교에 수업을 나가고 있는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31.3%에 달했다. 과목과 학년별로 4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는 17.9%, 5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는 13.4%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교원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 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중등교원 정원이 5632명으로 전년보다 121명 줄어듬에 따라 작은학교 중심의 정원 감축을 내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정원 감축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작은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outgoing@kado.net

한국일보

정시 늘려 놓고 고교학점제? 내신 유리한 과목 쏠림현상 우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잘 봐야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애들한테 소신껏 선택과목 들으라고 말하기 쉽지 않네요.”

13일 수도권 A학교의 교사 B씨가 내린 결론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 존중과 미래 설계 지원을 명분으로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점에 맞춰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운영 중인 학교에선 다른 얘기가 나왔다. 선택과목에 따라 내신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손쉬운 과목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B교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다. A학교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지난 1년간 학생들을 상대로 수요 조사를 하고 과목을 새로 만들고 해당 과목의 강사도 구했다. 또 수업이 비는 학생들을 모아 자습시설 교실과 감독교사 순서까지 짰

선택 과목 따라 내신등급 천차만별
신청자 적으면 상위등급 더 어려워
소신 상관없이 ‘익숙한 과목’ 우선

교사 81% “2025년 전면시행 반대”
전문가 “취지 맞는 대입제도가 우선”

다. 그 결과 교사들이 처리해야 할 ‘가뭇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래도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수요조사 때와 달리 대다수 학생은 ‘수능에 들어가는 익숙한 과목’을 골랐다. 선택과목 책자를 만들고 설명회도 열어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물론 ‘소신파’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학기말이 되자 B교사는 마음이 불편했다. 과목 신청자가 적으니 상위등급을 주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B교사는 “차라리 학생 수가 1명이면 1등급

을 줄 수 있지만, 최상위 등점자가 2명이면 둘 다 2등급을 받는다”며 “소신대로 과목을 고르라고 권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여기에다 ‘조국 사태’ 이후 정시의 비중이 늘었다. 그런데 다양한 과목의 대부분은 수능과 거리가 멀다. B교사는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가 수능 필수선택으로 지정하는 수학 미적분 같은 특정 영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내신 잘 받을 과목에 몰린다”며 “수능 선택과목이 표준점수 눈치싸움이 됐듯 내신도 그렇게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 전국중등교사노조와 인천교사노조는 “고교학점제 연구·시범학교 교사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81.4%가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런 현상은 직업계고에서도 마찬가지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를 시작한 서울의 한 직업계고의 C교장은 “기본 교육과정을 따라가기도 바쁜 데다 기업체가 선호하는 이수과목이 있어 학생들이 추

가 개설한 선택과목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할 수 없이 부전공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사한 선택과목들을 묶어 학생들에게 패키지로 권장하면서 신청자가 조금씩 늘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교육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수능 형태를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올해 10월까지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맞춰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입에 대해서는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 2월까지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김성천 한국교육원대 교수는 “최소한 수능 최저등급을 완화하거나 수시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고교학점제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

X세대 “책임감”·MZ세대 “워라밸”... 교단도 세대간 생각 차이

대구 ‘교사 교직 인식’ 설문조사
세대별 추구하는 가치 순위 달라
“젊은 교사들로 교육에도 큰 변화”

교육 현장에서도 X세대와 MZ세대 교
사 간 세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
사됐다.

대구시교육청 산하 대구미래교육연
구원은 지난해 대구지역 교사들의 특성
과 세대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직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 세대 간 생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은 교사 5040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중
X세대와 MZ세대로 분류되는 1585명
에게는 세대 차이 분석을 위한 별도의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X세대는 1970년대 출생한 세대로 개
인주의 경향이 강하고 정의 내리기 어려
운 성향을 가진 세대로 평가 받는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
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합친 개념이다. IT기기 환경과 기술에
능숙하다.

교직생활에서 추구하는 가치 등을 묻
는 질문에 X세대 교사들은 책임감
(37.1%), 성취감(31.7%), 수업전문성
(30.7%), 경제적 안정감(23.3%), 워라
밸(22.0%) 순으로 답했다.

반면 MZ세대 교사들은 워라밸

(42.5%), 수업전문성(30.8%), 책임감
(30.8%), 성취감(24.6%), 자아성장
(18.2%) 순으로 답했다. X세대는 책임
감을, MZ세대는 워라밸을 가장 중요하
게 여겼다.

교사를 하면서 겪는 정서적 고갈, 비
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 등 부정적
감정(소진)을 묻는 질문에 X세대와
MZ세대 모두 5점 만점에 2.6점을 취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X세대는 ‘학교 차원의 문제행동 및 부
적응 학생 지도’(38.4%)를, MZ세대
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업무 분장’
(39.3%)을 가장 많이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두 세대 간
에 생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교사들이 앞으로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
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명 기자 mc102@kmib.co.kr

東 亞 日 報

일선 학교 역량에 맡긴 환경교육... “당국, 전문교사 늘리고 콘텐츠 제공해야”

지역사회와 협력도 쉽지 않아
민관학 공조 체계 만들어야

환경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학교 현장의 환경교육 여건은 여전히 낙후한 게 사실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교과와 연계된 환경교육 과정 자체가 각 학교의 개발 역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 이자혜 서울 염리초교 연구 부장은 “아무리 역량 있는 교사더라도 환경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이상 콘텐츠 개발에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목표에 따른 활동 사례 같은 게 제공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교육 전문가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올해 13년 만에 8명의 환경교사가 신규 임용됐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교사는 전국 33명에 불과하다. 교과 연계형 환경교육을 진행해도 전문적인 환경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사의 수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들은 “환경 관련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환경을 전공한 교수님들께 초등생 수업을 진행해 달라고 하는 게 무리가 있어요. 지식이 풍부해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시민단체에 수업을 맡기는 것도 뭔가 부족해요.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배출을 얘기할 때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은

‘분리배출이 안 돼서 쓰레기장이 늘어났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처럼 생각의 발전을 자극하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무조건 ‘분리배출을 합시다’라고 운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니까요.”(대전 지역 한 초등 학교 교사)

생태교육 진행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민관학이 환경교육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리다 보니 지역사회 연계 수업을 하려면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하는 등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적지 않다. 박세민 서울 오산고 교사는 “이전보단 나아졌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민관학 협력 교육 체계가

마련되면 한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교육 관계자들은 대만의 사례가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대만은 2018 개정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을 ‘우선 주제’로 선정했다. 환경윤리,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등 환경교육의 5가지 핵심 주제를 정하고 학교급별 교육과정도 개발했다. 다양한 교과와 환경교육이 연계될 수 있

도록 정부 차원에서 나선 것이다. 학교에 ‘환경 코디네이터’가 있어 교내 환경교육과 더불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역할도 담당한다. 임호영 전 환경교육학과대학생연합회장은 “코디네이터는 교과 지식 전달뿐 아니라 지역과의 소통도 담당해 환경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전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朝鮮日報

[특별 대담]

교육 전문가 3인, 고교학점제를 논하다

교육 대전환을 맞이할 날이 멀지 않았다. 고교학점제가 전국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2025년이 그 기점이다. 이때부터 학교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교육체제의 완결태가 이뤄지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기존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에 교육계 전문가들이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 본지는 특별 좌담회를 열고 유기준 국회교육위원장, 하운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과 함께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

참석자들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바로 '입시제도 개편'이다. 기존의 오지선다형 수능 체제가 아닌 '미래형 입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교에서 수업 운영 방식이 변화하더라도 이것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면 또 문제 풀이식 교육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정부도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2028학년도 대입에 논술형 평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위원장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을 존중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미래형 대입제도가 뒤따라야 한다"며 "일률적인 수능 문제로 학생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목에 맞는 역량·창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식으로 논술형 평가가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담회에서는 이상적인 평가 방식으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논술형 대입자격시험) 사례가 거론됐다.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자격고사화'를 통해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입시가 개편돼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국내 교육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긴 어렵다고 예측했다. 프랑스의 경우 대학들이 서열화 없이 모두 평준화돼 있다는 점이 우리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하 회장은 "대부분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인 상황에서 무턱대고 수능이 자격고사화되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수능이 지금과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성 전 원장은 "수능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잘 이행했는지 평가하는 역할만 맡아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대학들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키워 진로와 적성에 맞게 노력한 학생들을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수능 개편뿐만 아니라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적용 문제도 숙제다. 하 회장은 "정부가 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에 대해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학생 변별력 확보나 내신 성적 부풀리기와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지금은 학교알리미를 통해 각 학교의 성적 산출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내신 부풀리기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며 "성취평가제 방식의 경우 교사가 임의로 성적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과목마다 도달해야 할 성취 수준'이 합당하게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고교학점제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지역별·학교별 격차와 사교육 문제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유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학교에 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 "고교학점제가 지역 공동체 내 작은 학교 살리기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사교육 문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엇갈린다. 고교학점제가 사교육을 억제할 것이란 기대와 오히려 사교육의 수요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성 전 원장은 "어떤 측면에서는 심화과목을 더 듣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수업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처럼 국영수 중심의 사교육이 끼어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유연하게 과목을 개설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제도"라며 "어직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중이라서 공간이 많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빈 공간을 채우는 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지만, 교원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교육계 전체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기선 기자

특히 좌담회 참석자들은 교육 인프라 확충 정책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회장은 "최근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서도 교원 확보가 고교학점제 도입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제공하면서 수업의 질을 관리하는 학점제 취지를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8800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습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규모 교실 신·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을 정부가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가속하거나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단순히 교원과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관련 기관, 교육 현장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돼야 하며 고교학점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면서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좋겠습니다."

신영경 조선예류 기자

형평성과 수월성, 펼쳐야 할 교육의 두 날개



김도연 칼럼

객원논설위원·서울대 명예교수

서울 시내 중학교 신입생 선발이 추첨제로 바뀌면서, 동시에 명문(名門) 7개교가 폐교된 것은 1969년 일이다. 이듬해 부산 등에서도 중학교 입시는 사라졌고 이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74년 서울과 부산의 고등학교들이 추첨으로 신입생을 받으며, 형평성을 지향하는 중등 교육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 이미 반세기 전이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어느 학생에게나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자는 뜻이니, 이는 국민 모두가 주인인 민주국가에서 너무 당연하다.

우리가 추구한 형평성 교육의 성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수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33개국 청년들의 언어능력, 수리능력 등을 조사해 발표한 '국제 성인 역량 조사 보고'에 의하면 우리 청년 역량의 평균치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상위권이었다. 또 다른 특징은 역량 분포곡선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능력은 다른 나라처럼 편차가 크지 않으며 중간 평균치에 많이 모여 있었다. 그 결과, 하위 1% 청년의 역량을 비교하면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분포곡선의 또 다른 한쪽, 즉 상위 1% 청년의 역량은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아쉬운 점이다.

형평성은 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 갈 미래 인재 교육에서는 수월성도 놓쳐서는 안 된다. 세계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국부(國富)

창출에 크게 기여한 고(故) 이진희 삼성전자 회장은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이야기했다. 노벨상 수상 등을 통해 국격(國格)을 높이는 데도 상위 1% 청년의 역량을 더 끌어올리는 수월성 교육은 꼭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진보정치 진영은 교육 형평성에, 그리고 보수 진영은 수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여러 정책에서 타협 없는 독주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평균 역량 높이는 형평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미래 위해 인재 키우는 수월성 포기 안 돼
자사고 폐지는 교육 문제 만능 해법 아냐
동등한 교육 속 영재 길러낼 방안 모색해야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교육과정 등을 제공해야 하므로 결국 획일적 인재 양성에 치우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과거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은 획일적 교육으로도 가능한 면이 있었지만, 미래 디지털 사회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능력을 지닌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우리는 과학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을 설립해 교육의 다양성 및 수월성을 보완해 왔다. 이러한 특목고 교육이 명문대 입시에 치중하면서 왜곡된 점은 분명 있으며 이는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폐교를 추진하는 것은 교각

살우(牛角殺牛)와 다름없다.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과는 다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에서 전문가로서의 지적 능력을 크게 신장시키지만, 10대 후반기를 보내는 고등학교에서는 삶에 대한 가치관과 인간적 품성을 구축한다. 미국 동부지역 명문 사립고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뛰어난 영재들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하는데, 이들은 대학 입학에 포함된 여러 측면에서 일반고와는 격이 다른 '특권'을 지니고 있다. 해당 고교 졸업생들은 하버드대 등 명문대 입학을 거의 보장받는데, 그러나 누구도 폐교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파키스탄 이민자의 아들로서 '세인트폴'이라는 미국 명문고를 졸업하고, 대학의 사회학 교수가 된 셰이머스 라만 칸이 다시 모교를 관할해 최근 출간한 책의 제목은 '특권'이다. 미국 사회 특권층의 별다른 세상이지만, 여러 인종과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면서 학생들을 개방적 품성의 소유자로 키우는 사립 고등학교 이야기다. 종합적인 인문과 교육과 방대한 독서 학습 등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서 사랑받는 리더를 길러내는 시스템은 배워야 할 부분이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도 전주 삼산고, 황성 민사고 등 자사고가 연료를 더하며 발전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방침은 이들을 모두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자사고 지정을 취소당한 10개 학교가 그간 제기한 네 건의 행정소송에서 교육청 취소 처분은 모두 위법으로 판결이 났다. 적법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자사고를 없애는 것이 과연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하며 밝은 미래를 여는 길일까?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형평성과 수월성은 활짝 펼쳐야 할 교육의 두 날개다.

중앙일보

학생 동의도 안 받고 얼굴 올려 ‘교사 유튜버’들 좀 말려주세요

유튜브에서 '교사 브이로그'를 검색하면 나오는 동영상들. [사진 유튜브캡처]



“아이들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19일 올라온 하소연이다. 청원인은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이들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기도 한다”며 “인터넷은 온갖 악플들이 난립하는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교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교사 브이로그(Vlog-자신의 일상)’를 담은 동영상’이 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20일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를 검색하면 다수의 초·중·고교 교사 유튜버의 채널이 나온다. 조회 수 100만이 넘는 영상도 10여개다. 이들은 주로 교실, 교무실 등 학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일상을 영상에 담는다.

공무원인 교사가 부수입을 창출하는 유튜버가 가능할까. 일단 ‘겸업’은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도서 집필과 같이 ‘창작 활동’으로 분류돼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교육부도 이미

일상 담은 브이로그 형식 동영상 학교·학생·동료교사 등장 빈번
“거절하면 생기부 영향 갈까 불안”
‘촬영 금지해달라’ 청와대 청원도

2019년 교사 유튜버가 늘자 검직 허가 요건을 정했다.

교육당국의 승인을 받은 유튜버이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교사 브이로그는 교사의 일상을 촬영하는 만큼 학생이나 동료 교사가 영상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선 아이들의 신상 노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우모(34)씨는 “모자이크한다고 해도, 영상이 지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학교가 특정될 수 있다. 교사가 학생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아이들이 공개되는 게 불안하고 무섭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문제를 제기한 한 네티즌은 “대놓고 ‘돌았네, GR하네’ 이런 자막 다시는 분도 있던데 교사도 공무원인데 품위유지는 어디다 팔아먹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난 아이들한테 다정한 착한 선생님’에 도취한 게 눈에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주장에 ‘학교에 민원을 넣으면 교장 선에서 해결된다’거나 ‘교육청에 민원 넣으라’는 조언이 이어졌다.

촬영 동의 여부도 논란이다. 유튜버들은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명시하지만, ‘학생의 동의만 받을 게 아니라 학부모한테 받아야 한다’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

발제번호: 2,399명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캡처

‘담임이 찍겠다는데 애들이 어떻게 거절하겠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작성한 교원 유튜브 활동 북무지침에 따르면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허가 결정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신을 학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쌤이 브이로그 한다고 했을 때, 좋다고 분위기 주도하는 애들 사이에서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요”라며 “영상은 동의하는 애들끼리만 찍는데, 거절한 애들은 생활기록부랑 평판에 악영향 생길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적었다.

‘교사 유튜버’에 대한 동료 교사들의 시선도 곱지는 않다. 경기도 수원 시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같은 교사지만 브이로그 영상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교무실에서 대놓고 찍으시는데 너무 불편하다. 아이들 교육보다 본인 영상 만드는 데 더 시간을 쏟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재 연구 등 기존 업무에 코로나19로 추가된 업무 때문에 시간이 벅한데, 브이로그 할 시간이 언제 나는지 모르겠다. 나만 바쁜 건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올해 초임이라는 B씨는 “이제 딱 교사가 된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유익하긴 하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들 본다”라고 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사 유튜브 채널은 2534건(중복 포함)이다. 이 가운데 유튜브 광고수익 최소 요건인 구독자 1000명 이상 등을 달성해 검정 허가를 받은 교사 유튜브 채널은 528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학부모 동의를 얻지 않고 영상을 올렸다고 한다면 교육부의 ‘교원 유튜브 활동 북무 지침’을 어긴 행위”라며 “각 사도 교육청이나 지원청 측에 징계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브이로그 촬영으로 민원이나 항의가 들어온 적은 없다”면서도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면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경성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성별·계층·세대 등 사회 갈등 문제나 이념 등 교육과 상관없는 이슈들이 교사 유튜버를 타고 여과 없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일반인과 다르게 교사들은 왜 브이로그를 하는지를 스스로 묻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림·채해선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한겨레



김선희의 학교 공감일기 30. 호기심의 존중

성장의 원동력, 호기심은 언제나 옳다

지난 스물여덟번째 글, 신영(가명)이의 돌발적인 질문으로 집단적인 비난이 이어졌다가 입체적인 공감으로 풀어진 수업의 바로 다음 시간 이야기다.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악수업으로 온라인 과제 방에 과제 올리는 법을 설명하는 중이었다. 전 같으면 도중에 궁금증을 못 참고 질문하는 아이가 간혹 있어 완급을 조절하기도 했는데, 그날은 모든 아이가 화면 속에서 마치 정지화면처럼 뚫어질 듯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10여분 동안의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점 있는 사람?” 하고 물었지만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때 한 아이가 비공개 채팅을 보내왔다. “선생님, 제가 질문했다는 사실을 다른 아이들

이 모르게 파일명 다는 법 다시 알려주세요.” 나는 요구한 대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질문에 세심히 답해주었다. 이어서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지난번 수업으로 인해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아이들은 부정하지 않는 눈빛을 보냈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친절 한 교사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질문을 사랑하는 교사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한 뒤 설명을 이어갔다.

“여러분, 내 수업에서는 질문의 수준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미 설명한 것을 몰으면, ‘내 설명의 방식이 맞지 않은 친구가 있구나.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보자’, 여러



홍영민 기자

번 이야기한 것을 또 몰으면, ‘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친구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구나. 기회를 주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물으면, ‘더 많은 것을 알려줘야겠구나’,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에는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궁금한 마음을 전해보자’... 이 수업 속에 공존하는 다양한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해줘요. 무언가

를 궁금하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 사이를 서로로 연결해주기도 하며, 더불어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해주기도 해요. 선생님께서는 여러분의 질문을 먹고 성장하는 존재예요. 부디 질문을 아끼지 말고 계속해서 나와 친구들의 생각을 키워주세요.”

이렇게 말하자 화면 속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신영이의 마이크가 켜지며, “선생님, 아까 과제를 어디에 올리라고 하셨죠?”라고 물었다. “아, 했갈리는구나. 그렇다면 화면을 공유해서 다시 설명해줄게”라고 반기며 다시 알려주었다. 이어서 “신영아, 내가 그 어떤 질문이든 사랑한다고 말한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로 소리 내어 질문해주시 참 고마워. 네 덕분에 이미 이루어진 설명이라 질문하기 어려웠던 다른 친구도 도움을 받았을 거야”라고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여기저기서 마이

크가 켜지며 질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첫발을 성큼 댄 신영이를 보며 다른 아이들도 과도한 긴장으로부터 무장 해제된 것이다. 아이들의 눈빛에 가득한 호기심과 힘찬 존재감이 번뜩거렸다.

호기심은 배움의 원동력이다. 아이의 질문을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수업이나 어른의 삶이 빠듯하다면 다루는 내용이나 처리하는 일의 양을 대폭 줄여서라도 되도록 질문을 반기며 응답하기 바란다. 빠른 속도로 이해하는 아이가 기다리기 지루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종종 옆 친구의 궁금함에 고개를 돌려 어깨동무 교사로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더불어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공존하는 존재들의 다양성을 알게 됨으로써 자기 내면의 다양한 역동도 더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교사

2021년 05월 24일 (월)

종합 05면

경향신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3년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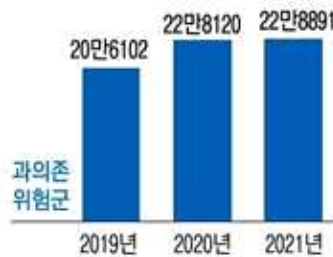
학령 전환기 127만여명 조사
‘과의존’ 작년보다 771명 늘어
코로나로 ‘집콕’ 길어진 영향

코로나19 이후 집 안에 머무는 시간과 온라인 수업 빈도가 늘면서 인터넷·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청소년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등학교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남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여자는 연령이 높을수록과의존 위험군이 많았다.

여성가족부가 23일 ‘2021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1만1689개 학교의 학령 전환기(초4학년·중1학년·고1학년) 청소년 127만2981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다.

위험사용자군(심각한 장애나 금단현상을 보여 전문가 도움 필요 수준)과 주의사용자군(사용시간이 늘고 자기조절이 어려워 주의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 청소년 현황
자료: 여성가족부, 단위: 명



가 필요한 단계)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2만8891명으로 지난해보다 771명 증가했다.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에 모두 해당하는 청소년은 8만3880명이었다.

인터넷과의존 위험군은 18만3228명으로 지난해보다 7000명 넘게 늘었다. 최성유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인터넷과의존 증가는 최근 3년간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태블릿·노트북·데스크톱 같은 미디어에 대한 선호가 주된 원인”이라며 “코로나19로 집 안에 머무는 절대적인 시간이 증가한 것 또한 영

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초4에서 인터넷·스마트폰에과의존하는 학생이 남녀 모두 증가했다. 반면 고1은 남녀 모두 감소했다. 중1의 경우 남성은과의존 학생이 늘었지만 여성은 줄었다. 초·중학생 시기 온라인 미디어 이용이 늘고 고교 입학 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이 줄어드는 것은 그간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초4, 중1의과의존 위험군은 남성이 더 많았지만 고1은 여성이 더 많았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터넷·스마트폰에 의존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이다. 최 정책관은 “여학생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이 늘어 이런 현상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 병원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서울신문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인식 변화 (단위: %)



초·중·고생 여가 활동 시간 (단위: %)



청소년 학교생활·사회 신뢰 나빠져 ‘집콕’으로 가족관계는 더 좋아졌다

코로나가 바꾼 청소년 통계

여가시간, 코로나 전보다 크게 늘어
10명 중 3명 “신종질병 때문에 불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나빠졌다고 밝힌 청소년들이 크게 늘었다. 반면 ‘집콕’이 이어지면서 가족 관계는 오히려 좋아졌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많아졌다. 지난해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도 전년대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생활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한 비율(48.4%, 9~24세 기준)이 긍정 비율(11.4%)의 4배 이상이었다. 사회 신뢰에 대해서도 부정적 답변(43.7%)이 긍정 답변(8.3%)의 5배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가족 관계에 있어선 되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한 비율이 22.1%로, 부정 답변(9.6%)의 2배 이상이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확산되면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친구 관계는 소원해졌지만, 반대급부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족 관계는 돈독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신체활동 시간 일주일에 2시간뿐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시간은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초·중·고등학생(초등학교 저학년 제외)의 여가활동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6.2%에서 9.8%로, ‘1~2시간’은 27.2%에서 19.8%로 줄었다. 그러나 ‘2~3시간’은 22.0%에서 23.3%로, ‘3~4시간’은 14.2%에서 18.0%로, ‘4~5시간’은 8.6%에서 10.9%로, 그리고 ‘5시간 이상’은 11.9%에

서 18.2%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청소년(13~18세)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약 8시간 4분이었다. 신체활동 시간은 일주일 평균 2시간에 그쳤다. 학습 시간을 보면 초·중·고등학생(초등학교 저학년 제외) 10명 중 4명(36.6%)은 평일 학교 정규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추가로 공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교육을 받은 초·중·고등학생은 전체의 66.5%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대비 7.8% 포인트 하락했다.

●청소년 인구, 총인구의 16%

청소년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좀 나아졌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초·고등학생의 비율인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9년 39.9%에서 지난해 34.2%로 5.7% 포인트 하락했다. 또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초·고등학생의 비율인 ‘우울감 경험률’도 28.2%에서 25.2%로 3.0% 포인트 내려갔다. 다만 여전히 4명 중 1명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13~24세)들이 느끼는 사회 불안 요인으로 2018년에 범죄 발생(30.1%)이 1위였다. 그러나 지난해엔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종질병이 3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범죄 발생(22.6%), 경제적 위험(10.1%) 등이 뒤따랐다.

올해 청소년(9~24세) 인구는 830만 6000명으로 총인구의 16.0%를 차지했다. 1982년 1420만 9000명(36.1%)이었던 청소년 인구는 2060년엔 445만 8000명(10.4%)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14만 7000명으로, 2013년(5만 5780명)의 3배 규모다.

세종나상현기자 greentea@seoul.co.kr



Chapter 6

강원 학생 합격수기

강원도
행복청
강원도
행복청

